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306-13

2020. 10.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림축산식품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306-13

2020. 10. |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임소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위원 | 연구총괄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위원 | 5차 계획 수립 방향 설정

김남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부연구위원 | 4차 계획 평가와 5차 계획 수립방안 작성

하인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원 | 자료수집 및 정리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임 소 영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정 섭 (연구위원)

김 남 훈 (부연구위원)

하 인 혜 (연구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 영농형태의 변화 등 농업·농촌의 변화는 여성농업인의 인적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율은 평균 53.9%이며 그 중 전체 농사일의 75%를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24.2%에 달함(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51%를 상회하면서 큰 변화가 없는데, 1970년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2018년 기준 51.2%).
- 따라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여성농업인을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지위 향상, 삶의 질 개선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보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필요를 파악하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신규 취창농 여성을 지원해야 함.
 - 가부장 중심의 문화가 해소되고 농촌의 문화·보육·복지 여건이 개선되는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지속되어야 함.
- 이 연구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이어서 추진되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그동안 미흡하였던 점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함.
 - 또한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환경에 발맞추어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문제의 정책적 대안을 5차 기본계획에 반영함.

□ 연구 방향 및 내용

○ 연구의 기본방향

- 농업·농촌 정책 및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을 반영한 여성농업인 정책 방향 및 비전 제시
-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추진과제 검토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장의 필요를 정책에 반영

○ 연구내용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욕구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외국의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사례
-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농업·농촌 환경변화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정책과제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체계 및 재정계획

□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농업·농촌 환경변화

-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 명에서 2019년 225만 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농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음.

- 농가의 소득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특히 농업소득 격차를 살펴보면 농가소득 5분위 계층과 1분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농업소득 평균값과 중위값 차이는 평균 2.92로서 농업소득의 불평등도가 더욱 확대됨.
- 귀농·귀촌 인구, 결혼이민여성, 고령여성농업인, 청년여성농업인, 일반 농업인 등 출신배경과 농촌사회로의 유입 동기가 다른 집단이 농촌사회에 많아지면서 농촌 여성 인구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음.

○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상황이 맞물려 비대면 풍조가 확산되는데 이는 농업·농촌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활용도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이는 생산자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소통의 범위가 확대되는 순효과도 있음. 온라인 시장에서 고객과의 소통, 회계관리 등의 강점을 가진 여성농업인이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농식품 안전 문제나 먹거리 교육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이 확대되는데, 먹거리 분야의 정책 확장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역량을 다층적으로 계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자, 농식품 가공 및 유통의 핵심 인력,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정보를 생성·전달하는 교육자, 농촌 지역의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역할이 여성농업인에게 새롭게 부여됨.
- 최근 사회적 경제 정책 기반의 확충과 관련 담론·실천의 확산 추세는 여성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비공식 노동의 인정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여성 관련 정책은 2000년대 들어 양성평등의 실현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책의 성주류화가 시도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이 성주류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양성평등을 목표로 한 성주류화 정책은 농업·농촌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최근 이상기온과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질 저하 등 여성농업인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후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자연재해를 빈발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을 떨어트리 고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며 농촌여성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하여 공기 질이 저하되면 주로 야외에서 노동하는 여성 농업인의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노년층의 폐기능 저하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됨.

□ 외국의 여성농업인 현황과 정책의 시사점

- 유럽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노동에 대한 보상, 복지수준 제고를 정책과제로 안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생산자로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거나 여성의 경영참여 정도를 통계 작성에 포함함으로써 여성의 생산자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EU는 무보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유럽과 일본 모두,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농촌정책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정책 간 일관성과 여성 정책의 실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됨.
- 예를 들면,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전체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유럽과 일본의 농촌여성이 처한 현실이나 정책 요구는 국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여성농업인의 권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가사·육아·간병 등의 업무 분담에 대한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농작업·식품가공 분야에서의 편의 향상 지원, 여성과 민간기업 간의 상생·협력 활동(농업여자프로젝트 사례)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등이 필요함.

□ 기존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평가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수립·추진되었음.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1차부터 3차까지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삶의 질 향상이 핵심 키워드였으며 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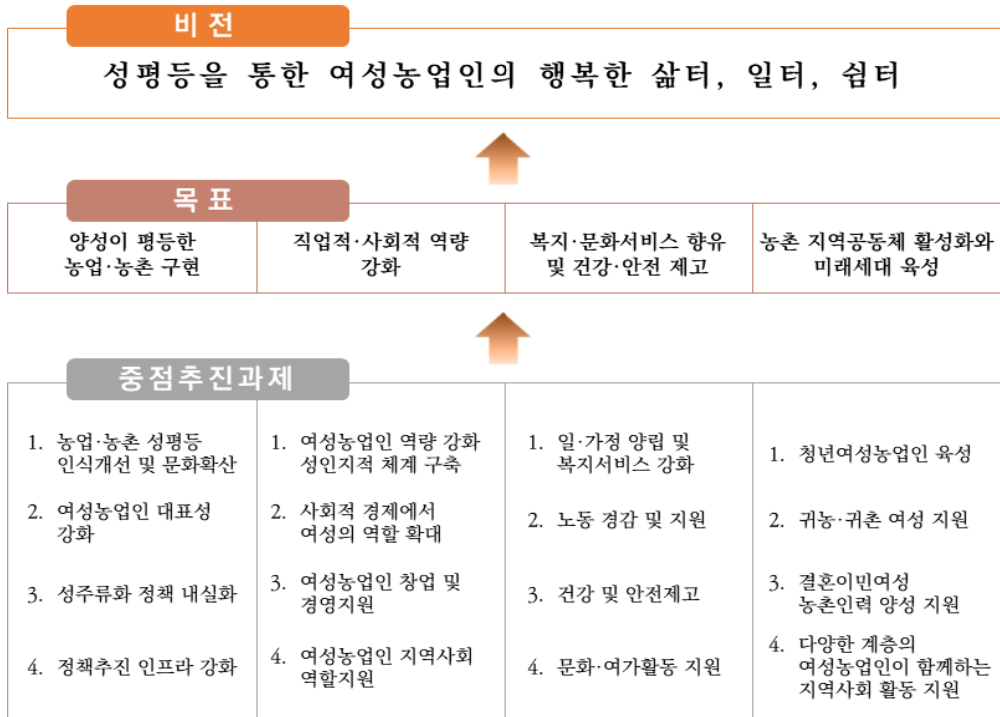
-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0-2005)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 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4개 부문, 8개 과제를 추진함.
-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6-2010)은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4개 부문, 23개 과제를 추진함.
-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1~2015)은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5개 부문, 17개 과제를 추진함.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5개 부문, 15개 과제를 추진함.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측면에서 공동경영주 제도의 도입,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의 성과가 있었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 확대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음. 또한 여성농업인 출산 급여 지급, 특수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 실시,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 등의 성과로 복지문화 서비스도 제고되었음.
- 그러나 공동경영주의 인지도 저조 및 활용 부진, 생산자 조직에서 여성 참여 저조, 지자체 정책추진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부진,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이나 조직 부족,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한계, 중간지원조직의 부재, 여성농업인의 비공식 노동의 지속 등 한계도 존재함.

□ 제5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개요

-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문제의식과 정책방향을 계승하되 정책의 구체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가 전체 양성평등정책과 농업·농촌 정책의 합치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고, 농업·농촌 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 방향을 설정하였음.
- 5차 기본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라는 비전으로 요약되며, 4개의 목표 하에서 16개의 중점추진과제, 44개의 세부과제, 106개의 세세부과제로 구성됨.
 - 전체 세세부과제 중 5차 계획에서 신규로 제시된 과제는 42개이며 4차 계획에 제시되었던 과제이나 과제 내용을 일부 보완한 과제는 25개, 4차 계획에서 제시되어 5차 계획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과제는 39개임.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개요〉



□ 제5차 기본계획의 목표별 추진과제

목표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1.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농업·농촌 교육 내 양성평등 강좌 확대
－ 가족공동경영협약 홍보 및 활성화
－ 농업·농촌 정책사업 추진 시 대상자 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농촌형 성평등 강사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 농촌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컨텐츠 개발
1-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 정부 위원회 내 여성비율 40%대 유지
- 정부, 여성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 농협의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여성조합원 가입 확대
- 농협 여성임원 비율 확대
- 임원 및 여성농업인 리더십 향상 교육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 및 내실화
- 정책사업 시행지침 개정
- 공동경영주 제도 홍보 및 등록 활성화
- 법적 지위와 연계된 정책 인센티브 확대
○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 정비
- 농업·농촌 관련 법령 정비
- 공동경영주의 권한과 자격요건 정비
1-3.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 정책 환류 평가 강화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 성별통계 생산
- 성별농업통계 발행
○ 성평등 지표 개발 및 보급
- 성평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개선

1-4.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 지자체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정비 유도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육성
-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확대
-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 홈페이지·SNS를 통한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확대
목표 2.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2-1.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성인지적 체계 구축
○ 교육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개편
- 여성농업인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인지적 교육 운영
- 여성농업인 학습 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교육
- 여성농업인 특화 리더십 교육 과정 확대
○ 교육지원체계 협력 강화
- 교육기관 간 협의회 운영 및 협력
- 교육추진실적 총괄관리 및 환류
- 지자체와 교육 연계 강화
2-2. 사회적 경제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
○ 여성농업인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
-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 여성농업인 단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 지원
○ 농촌 여성 사회적 경제 조직 실천 모델 발굴

2-3. 여성농업인 창업 및 경영지원
○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
- 소규모 공동이용 가공시설 설치 지원
- 규제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강화
- 식품가공 관련 교육 확대
○ 창업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 창업 관련 컨설팅 제공
- 경영·회계·마케팅 교육과정 개설 확대
2-4.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역할 지원
○ 지역개발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지원
- 여성농업인 마을리더 육성
-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지역사업에서 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
○ 여성농업인 단체의 지역사회 협력·연대 활동 추진
-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협의 기구 형성 지원
- 성공사례 발굴·확산
목표 3.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3-1. 일·가정 양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농업인 출산 지원
- 산모 건강서비스 접근성 지원
- 출산급여 지원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농업인 육아휴직 도입
- 보육시설 내 제공 프로그램 개선
-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 돌봄 관련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 여성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홍보 강화
○ 마을 건강리더 육성 및 활동 지원
- 농업안전보건센터 및 특수건강검진 연계 건강증진 사업

3-2. 노동 경감 및 지원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
 - 도우미 지원 단가 현실화
 - 영농도우미 인력의 전문성 제고
- 농업노동 부담 경감
 -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이장비 개발
 -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체계 개선
 - 안전바우처(가칭) 제도 도입
 -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교육 강화
 -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 들녘별 휴게 공간 확충
 - 농지 인근 화장실 및 휴게 공간 설치 및 운영
- 농번기 공동급식 운영체계 개선
 - 공동급식 운영체계 가이드라인 제시

3-3. 건강 및 안전제고

-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
 - 업무상 질병 및 재해 예방 교육 확대
 - 산부인과 진료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및 사후관리
 - 농업안전보건센터 역할 강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실시
- 농작업 안전 재해 관련 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및 재해 관련 연구
- 자연재해 대응 전략 수립
 - 성인지적 농작업 안전 및 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3-4. 문화·여가활동 지원
○ 문화·여가활동 지원
- 찾아가는 문화공연, 영화관 추진
- 문화동아리 육성 지원
- 여성농업인 커뮤니티 시설 조성
○ 행복바우처 제도 개선
- 지역간 편차 완화
목표 4.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4-1.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서 청년여성농업인 우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의 여성 수혜율 점검 및 확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여성농업인 우대
- 농지은행의 청년 대상 농지지원 사업에서 여성 수혜율 점검 및 우대
○ 청년여성 삶의 경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청년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청년여성농업인 임시 주거환경 지원
- 청년여성농업인 영농학습 동아리 지원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창업 교육 및 지원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영농정착 실천농장 시범사업
○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집단 멘토링 제도 도입
- 여성농업인 세대 협력 공모사업 추진
4-2. 귀농·귀촌 여성 지원
○ 성인지 관점에서 귀농·귀촌 교육 지원 사업 점검 및 개선
- 귀농·귀촌 분야 교육과정의 여성 학습요구 분석
- 여성귀농인 특화 교육과정 확대
○ 귀농·귀촌 여성과 기존 농촌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 지원
- 귀농·귀촌 여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 공모사업

4-3.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으로서는 직업능력 향상
-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 확대
- 농업 관련 자격증 등 전문교육 확대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 확대
○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 여성농업인 정책·교육 자료의 다중언어 적용
- 농산업인턴제에 결혼이민여성 참여 지원
4-4.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 지원
○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 및 추진
- 토종씨앗 보전 활동 지원
- 고령여성농업인 구술 채록 및 아카이빙 지원
- 고령여성농업인-아동/청소년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
- 청년-고령여성농업인이 함께 하는 상호학습
- 은퇴농·고령여성농업인 특화 일자리 사업
○ 여성 외국인 농업근로자 지원
- 외국인 여성 농업근로자 주거 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창구 확대
○ 유형별 멘토-멘티 결연제도 확대
- 귀농 및 청년여성농업인 멘토링 사업 개선·확대
-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제도 개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9

제2장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농업·농촌 환경변화

1. 농업·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	21
2. 농가의 사회경제적 계층 다변화	24
3.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28
4. 농업·농촌 정책 여건의 변화	31
5.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전환	34
6.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악화	37

제3장 외국의 여성농업인 현황과 정책

1. 유럽	41
2. 일본	57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69

제4장 제4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1. 제4차 기본계획 개요	71
2. 과제별 성과와 한계	75

제5장 제5차 기본계획 수립 방안

1. 제5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95
2. 5차 기본계획 개요	99
3. 목표별 추진과제	100
4. 목표별 추진과제 요약 및 예산 투입 계획	153

부록

간담회 및 인터뷰 결과 요약	163
-----------------------	-----

참고문헌	169
------------	-----

제1장

〈표 1-1〉 영농형태별 농가수	2
〈표 1-2〉 정기토론회 개요	8
〈표 1-3〉 인터뷰 및 FGI 추진 개요	8

제2장

〈표 2-1〉 귀농·귀촌인구 추이	26
〈표 2-2〉 결혼이민여성 현황(2015~2019년)	26
〈표 2-3〉 여성농업인 연령별 정보화기기 보유 및 사용비율	28
〈표 2-4〉 농산물 판매처별 농가 비중	29
〈표 2-5〉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경영 관련 작업	30
〈표 2-6〉 광역자치단체 농업·농촌분야 '19년도 자체사업 시행계획	36

제3장

〈표 3-1〉 유럽연합의 여성 농가수 및 비율(2016)	43
〈표 3-2〉 유럽연합의 연령대별 여성 농가 비율(2016)	44
〈표 3-3〉 유럽연합의 경지면적별 여성 농가수 및 비율(2016)	44
〈표 3-4〉 유럽연합의 농업 생산액별 여성 농가수 및 비율(2016)	45
〈표 3-5〉 유럽연합의 여성 농업 노동력 현황(2016)	46
〈표 3-6〉 유럽연합의 고용 수준별 비가족 여성 농업 노동력 비율(2016)	46
〈표 3-7〉 유럽연합의 농촌 발전 정책 유형별 수혜 비율(2010)	52
〈표 3-8〉 농업취업인구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	59
〈표 3-9〉 연령별 농업취업인구(2019)	59
〈표 3-10〉 연령별 신규취농자(2018)	60
〈표 3-11〉 6차산업화의 업종별 여성농가수(2015)	61
〈표 3-12〉 판매금액별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 비율(2018)	61

〈표 3-13〉 여성의 경영방침 결정에 관여 비율	62
〈표 3-14〉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2020)	65

제4장

〈표 4-1〉 1~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교	72
〈표 4-2〉 성별 경영주 비중	76
〈표 4-3〉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의 성과와 한계	80
〈표 4-4〉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추진 성과와 한계	84
〈표 4-5〉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86
〈표 4-6〉 농업인 행복버스 실적 현황	88
〈표 4-7〉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사업 실적	89
〈표 4-8〉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추진 성과와 한계	90
〈표 4-9〉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추진 성과와 한계	93

제5장

〈표 5-1〉 농협 내 여성 참여 비율	102
〈표 5-2〉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중앙 부처)	106
〈표 5-3〉 농식품부 성인지 예산 사업 및 예산	108
〈표 5-4〉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111
〈표 5-5〉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115
〈표 5-6〉 지역별 주요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	118
〈표 5-7〉 지역별 주요 병의원 현황	118
〈표 5-8〉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참여의 애로사항	121
〈표 5-9〉 여성농업인 필요 과제	126
〈표 5-10〉 2018년 여성농업인 유병률	134
〈표 5-11〉 2019년 여성농업인 업무상 손상 현황	134

〈표 5-12〉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	135
〈표 5-13〉 산부인과가 없는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	136
〈표 5-14〉 문화행사 이용 횟수	139
〈표 5-15〉 청년여성농업인 인구 통계	141
〈표 5-16〉 귀농·귀촌 여성 인구 통계	145
〈표 5-17〉 귀농가구가 현재 수행 중인 농외 경제활동 현황	145
〈표 5-18〉 귀농가구의 향후 하고 싶은 농외 경제활동	145
〈표 5-19〉 도시-농촌별 전체 혼인 중 외국인 여성 결혼 비율	148
〈표 5-20〉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	151
〈표 5-21〉 목표별 예산 투입 계획	154
〈표 5-22〉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155

부록

〈부표 1〉 인터뷰와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여성농업인의 필요와 정책방향	163
〈부표 2〉 지자체 담당자 면담 결과 요약	167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농가 내 여성 비율	2
---------------------------	---

제2장

〈그림 2-1〉 연도별 성별 농가인구 수	21
〈그림 2-2〉 가구주 연령별 농가 수	22
〈그림 2-3〉 농가 내 청년여성과 노인여성의 비중 변화	23
〈그림 2-4〉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중위값과 평균 변화	24
〈그림 2-5〉 농가소득 5분위 배율-2009~2019년	25
〈그림 2-6〉 국적별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27
〈그림 2-7〉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증가 추이	33
〈그림 2-8〉 한반도 연평균 기온변화 추이	38
〈그림 2-9〉 RCP8.5 시나리오 기준 사과 재배 적지 변동 예측	39

제3장

〈그림 3-1〉 유럽연합의 농업 생산액별 여성 농가 비율(2016)	47
〈그림 3-2〉 유럽연합의 농림수산업 분야 평균 근로시간(2018)	48
〈그림 3-3〉 유럽연합의 여성 비공식 고용 비율(2018)	48
〈그림 3-4〉 ‘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배움-성장-삶’ 협동조합의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	54
〈그림 3-5〉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구조	54
〈그림 3-6〉 농업여자프로젝트의 개념도	68

제4장

〈그림 4-1〉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74
〈그림 4-2〉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	76

제5장

〈그림 5-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97
〈그림 5-2〉 교육 경험 및 교육 희망 분야의 비교	114
〈그림 5-3〉 향후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의향 분야	121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농업인구의 감소, 미작 중심 경영에서 작목 다변화로의 영농형태 변화는 여성농업인의 인적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농가인구는 2008년 318.7만 명에서 2018년 231.5만 명으로 감소하는 한편 신규 인력의 유입이 부족함.
- 영농형태는 대형 농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미작 중심에서 벗어나 여성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채소, 과수 및 특용작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채소·산나물의 농가수는 2010년 19.0%에서 2018년 25.0%로 증가하였고, 과수는 14.5%에서 17.0%, 특용작물·버섯은 2.4%에서 3.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표 1-1).

표 1-1 영농형태별 농가수

단위: 천 호, %

연도	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2010	1,177 (100.0)	523 (44.4)	116 (9.9)	224 (19.0)	28 (2.4)	170 (14.5)	7 (0.6)	19 (1.6)	9 (0.8)	81 (6.9)
2018	1,021 (100.0)	387 (37.9)	90 (8.8)	255 (25.0)	40 (3.9)	173 (17.0)	8 (0.8)	11 (1.1)	5 (0.5)	53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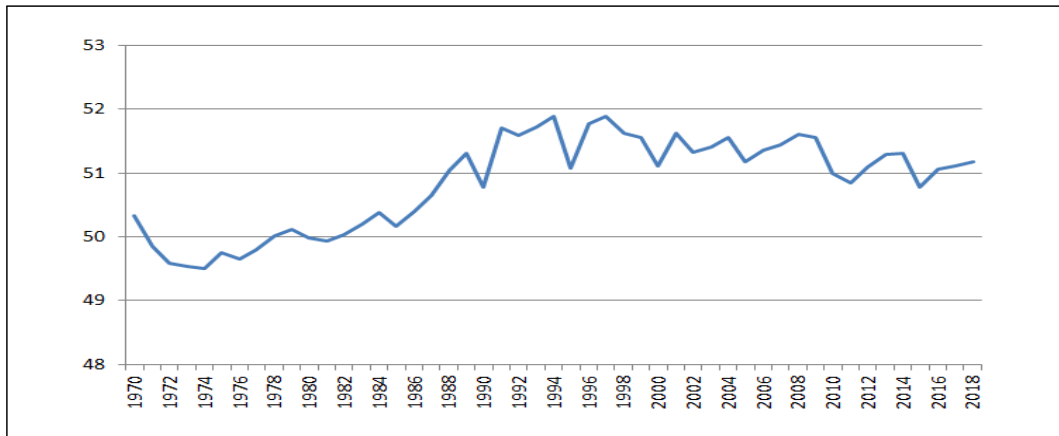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 농업·농촌의 변화 속에서 농업·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율은 평균 53.9%이며 그 중 전체 농사일의 75%를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24.2%에 달함(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51%를 상회하면서 큰 변화가 없는데, 1970년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2018년 기준 51.2%).

그림 1-1 농가 내 여성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 귀농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은 새로운 유입 인력으로서 농업인구의 다양성 확대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여성 귀농인 수: 3,073명('13) → 3,790명('18)
- 농촌 지역 결혼이민여성 수: 32,877명('15) → 434,879명('19)¹⁾

- 따라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여성농업인을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지위 향상, 삶의 질 개선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비롯한 복지, 보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필요를 파악하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영농을 시작하는 신규 취창농 여성을 지원해야 함.
- 정부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으나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는 5년 전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지위, 교육·문화·복지의 향유, 사회안전망 등 다방면에서의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 가부장 중심의 문화가 해소되고 농촌의 문화·보육·복지 여건이 개선되는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지속되어야 함.

1.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이어서 추진되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와 논의를 토대로 계획의 수립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그동안 미흡하였던 점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함.
 - 여성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정책요구를 파악함.

1) <표 2-2> 결혼이민여성 현황(2015~2019년) 참고.

- 현장전문가와 연구자 등 다양한 집단 간 토론을 통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정책추진 방식 개선 제언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기본방향

2.1.1. 농업·농촌 정책 및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을 반영한 여성농업인 정책 방향 및 비전 제시

- 2018~202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반영
- 동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세부과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

2.1.2.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발굴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고도화
-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개선방안 제시
-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체계 구축방안 제시

2.1.3. 청년여성 및 귀농·귀촌여성 등 미래세대의 육성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실현

- 기존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예비 인력의 입장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평가
- 신규 여성인력 육성 과제 제시

2.2. 연구내용

□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욕구

-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 여성농업인의 일-가정 양립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 추이
-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인식
- 신규 여성인력의 영농진입 및 농촌 정착
-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 성평등 정책 욕구 및 성인지 정책 추진 현황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제4차 기본계획 개요
- 분야별 추진실적과 한계

□ 외국의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사례

- 유럽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현황과 평가
 - 유럽의 여성 농업인 / 농촌 여성 지원 사회보장정책
 - 유럽의 농촌여성의 경제사회적 현황
- 일본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농업·농촌 환경변화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정책과제

- 정책 비전 및 목표설정
- 정책목표별 주요 정책과제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체계 및 재정계획

- 기관별 역할분담 체계
- 연도별·분야별 재정계획

2.3. 연구방법

2.3.1. 문헌조사

-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자료
 - 1차~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농업농촌 정책 사업 관련 정부 자료
- 여성농업인 관련 선행연구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교육, 노동, 복지, 사회활동 등에 관한 선행연구
- 정부 양성평등 정책 관련 자료
 - 1차~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 농식품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관련 자료

2.3.2.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자료 분석

○ 농업·농촌 관련 현황 통계 분석

- 농림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등 통계청 자료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농식품부 사업 자료

2.3.3. 다양한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인터뷰²⁾

○ 여성농업인단체 관련자, 마을활동가 등 현장 전문가, 여성농업인 관련 연구자 대상 정기 정책 토론회 개최

- 연구자 및 현장 활동가 발제
- 토론에는 현장전문가, 농업인단체 관련자, 농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
- 6개의 주제에 대해 총 5회 정책 토론회 개최

²⁾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은 별도의 자료집 참고.

표 1-2 정기토론회 개요

회차	주제	발제자	일시
1차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월 30일 오후 2시
2차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 - 농업경영체등록제도 및 농업인 지위 관련 논의 - 공동경영주 제도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송 회의장
	- 성(性) 인지 의식 제고 및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 - 성(性) 인지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문화 개선 -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방안 - 중앙-지방 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차	- 여성농업인의 노동과 직업 활동 -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및 건강·안전 문제와 해결 방안	김경란 (농촌진흥청)	8월 21일 오후 3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송 회의장
4차	여성농업인의 비공식 노동의 경제 자원화 시론	이순미·위라검 (전남여성가족재단)	9월 10일 오후 3시 온라인 화상 회의
5차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초안 관련 논의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월 24일 오후 3시 온라인 화상 회의

○ 계층별, 분야별, 연령별 정책육구 파악을 위한 인터뷰 및 FGI

-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 마을활동가, 언론인, 청년여성농업인, 지자체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인터뷰 및 FGI 진행

표 1-3 인터뷰 및 FGI 추진 개요

면담자		장소
여성농업인단체	■ 전여농 임원진 3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여농 임원진 3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성농업인	■ 000(남해여성농민회)	■ 경남 남해군
1차 FGI	■ 현장전문가 및 농업인 총 5인	■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2차 FGI	■ 현장 전문가 및 농업인 총 3인	■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
3차 FGI	■ 청년여성농업인 7인	■ 온라인 화상 회의
지자체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자	■ 부여군 주무관	■ 부여군청 ■ 강진군청 ■ 안동시청 ■ 강원도청
	■ 강진군 차장 ■ 안동시 주무관 ■ 강원도 주무관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1.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오미란 외(2015)는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의 시행령 7조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 규정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 5개년 계획 수립 규정에 의해 여성농업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제4차 기본 계획에서는 제1차~3차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농업·농촌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농업·농촌의 여건변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전 및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환경변화 반영 및 농업정책의 성인지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활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 및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였음.

○ 이수미(2020)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시행 마지막 해에 들어 제4차 기본 계획의 5개 분야(48개 과제) 시행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진단과 평가를 제출하였음.

- 재정 측면에서 시행 연도별 비중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가 근년 들어 비중이 상승했음.
-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여성농민 전담 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한 것을 성과로 꼽은 한편,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를 개선했으나 실제 등록률은 아직 저조하고 등록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였음.
- ‘여성농민 직업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소규모 농가공 관련 지원사업을 계획한 것은 타당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조성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비판하였음.
- ‘여성농민 지역역할 확대 분야’에서는 농촌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서 여성 농업인이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도 여건이 제한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 여성 농업인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비해 주변부적 지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아울러, 농촌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마을공동급식 사업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이고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역할 수행에 비례하는 보상이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고 비판함.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지원 확대,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분야에서 일정한 개선과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정책 수요에 비해 투입이 적다고 언급하였음.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분야’에서는 결혼이민여성, 귀농·귀촌 여성, 고령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정책 대상자들에 대한 정책 투입 현황을 언급하면서, 고령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전통지식, 토종종자 관리 역량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3.2.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성 주류화

- 강혜정(2012)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업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권, 재산권을 분배한 농가에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농가경영협약을 확산시키는 것을 제안하였음.
- 김정미 외(2004)는 여성농업인을 독립경영주, 협업배우자 또는 공동경영주, 준경영인, 임금근로자, 농업보조자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설문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대다수가 스스로를 협업배우자 또는 공동경영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강경하 외(2008)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편으로서 가족경영협약의 유효성을 검토하였으며 가족경영협약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 경영성과 참여, 재산참여, 경영대표권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었음.
- 김정미 외(2001)는 여성농업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에 관해 고찰하였음. 여성농업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 참여 여부와 역할, 의식에 관한 요소로 압축하여 판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농업노동과 농업 외 겸업노동, 소득의 분배(경지소유, 경영참여 등) 측면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김경미 외(2006)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 확립을 위해 역할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 정책지원사업을 분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음.
- 박대식·최경은(2008)은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해 농업 관련 기본법이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에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나 규정이 없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또한 가족경영협약의 추진이 미흡하여 여성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또한 여성농업인의 생산자 조직 참여가 미흡한 것과 농업농촌의 특색을 고려한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대안으로서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서 인정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4가지 유형의 여성농업인을 관련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안, 가족경영협약 체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지원부제도, 과세 및 재산소유 제도, 농업인 확인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 농업인 확인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제시하였음.
- 박민선(2003)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조사하였음. 저자는 여성의 경영참여를 소유참여, 이익배분 참여, 경영에 대한 대표권으로 나누어 여성의 경영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의 소유나 소득분배에 대한 관습적 사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에 따른 지위 보장을 위해서는 경영 참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이진영 외(2005)는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증명을 위한 생활일지를 개발하였음.
- 정은미 외(2013)는 여성농업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체계상의 한계점을 적시하였음.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공동경영주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성농업인 육성법과 조례의 활성화를 제시하였음.

- 정은미(2015)는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성인지적 예산 편성, 농정 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세출예산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강혜정 외(2019)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보장, 경영능력 향상, 노동환경개선, 생산적 복지 강화, 신규 여성농업인의 육성 등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3.3.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 허미영·박민선(2004)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기회는 남성농업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데, 특히 영농에 있어서 전략적·관리적 의사결정은 남성 중심인 경우가 대다수임.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를 촉진하려면 공동경영 지위를 인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만족감을 높이고 노동에 참여한 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김경미·고운미(2005)는 여성농업인을 영농 활동별로 유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영농이나 지역사회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여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음. 일반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영농 주체가 아닌 영농 도우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농업인이 조합이나 작목반과 같은 지역사회 활동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어 접근성 문제가 있음. 특히 여성농업인은 주로 노동집약적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영농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문제를 겪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이 기여한 노동만큼 정당한 지위를 인정해야 함.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보육 서비스 제공, 문화활동 욕구 충족, 남성과 경영주-경영주 형태의 공동 경영 의식 확산이 필요함.

- 임찬영 외(2006)는 인적자본 이론을 가정하고 영농에서 여성과 남성의 농업생산합수를 추정하였음.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인적자원으로서 그 수준이 높은 여성농업인을 영농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실행이 어려우므로 대안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인적자원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여성이 비교우위를 가진 특화작목 관련 교육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강혜정(2008)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분석 결과, 젊을수록 창업 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학력이 낮고 노동집약적 영농을 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 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함. 그리고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을 영농활동이나 창업 활동의 장애물로 인식함. 따라서 활발한 경제활동 욕구를 가진 여성농업인은 많으나 영농과 가사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하려면 가사 노동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강혜정(2009)은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에 기여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젊을수록 그리고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기회비용이 높으며, 여성농업인의 기회비용이 일용직 여성의 기회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에 기여한 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의 주체 인력으로 발전하지 못함.
- 강혜정(2011)은 여성농업인의 배우자 농외소득 활동 참여 여부가 여성농업인의 농외노동시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농외소득 활동은 늘어나며, 미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농외소득 활동은 증가함. 그리고 경지 면적이 넓거나 노동집약적 영농 활동을 할 때에도 농외소득 활동은 감소함. 따라서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생애 주기별 일자리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해야 함. 그리고 자녀 양육이 농외소득 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므로 보육 시설 접근성 등을 높여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은미 외(2012)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직업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농사일 담당 비중이 높아지며 주로 파종, 육묘, 정식이나 수확 및 관리 작성 등 농기계 사용이 적은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 및 판매정보 수집과 경영일지 및 회계장부 작성 등에 있어서는 참여율이 낮음. 농외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높지 않으며 참여하더라도 농산물 가공, 판매, 비농업 분야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농외활동 참여의사는 높게 나타남.
- 강혜정 (2013)은 전업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 실태와 의사결정 참여에 미치는 요인 분석하였음.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은데, 특히 농가자산이나 재무 관련 의사결정 참여율이 낮음. 그리고 학력이 높거나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의사결정 참여가 높은 특징도 있음. 따라서 전업 여성농업인이 남성과 함께 공동경영주로서 지위를 보장하고 여성농업인 명의 재산 소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안수영·권용대(2015)는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외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35/하였음. 연령이나 귀농·귀촌 여부, 영농행태나 영농 지위, 작목, 가사노동시간, 마을조직 참여도 등이 농외소득 활동의 주요 영향 요인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마을 자치조직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농외소득 작업장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함. 여성농업인 지원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특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엄진영·김선웅(2019)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집단별 영농활동 비중 차이와 비중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음. 영농활동 비중은 세대별로 다른데 현재 여성농업인의 정책 대상은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청년 여성은 육아도우미 제도 확대, 중년 여성은 여성 친화형 농기계 제공과 같은 생애주기별 세분화 정책이 필요함. 그리고 남성은 기계화 영농, 여성은 노동집약적 영농과 같이 노동 공급에 있

어서 차별적 인식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여성농업인이 겪는 가사 노동 부담을 덜고자 농번기 마을 급식 등 가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고려해야 함.

3.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 김영옥(2001)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은 도시여성에 비해 열악한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출산 등으로 영농을 중단할 경우 이를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농가도우미제 또한 국고지원액이 적고 농가 자부담이 있으며, 이용 범위가 제한되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밝힘.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대책을 위해 영농활동의 안정적인 보장을 강조하며 자녀보육 및 교육, 의료복지, 문화 등 불편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였음.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범위를 늘리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보장되기 위한 공공부조 시스템을 개선하며, 농가도우미제 내실화, 여성농업인발전센터 건립·운영, 자녀교육 지원서비스 제고,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노인부양서비스 강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대책으로 삼음. 또한 생산적 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여성농업인 발전기금을 조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민간위탁의 확대로 생산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 박대식 외(2002)는 가구 및 개인 단위를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복지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복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체계는 7개 복지 부문의 총 90개의 복지지표로 구성하였음.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의 기본방향은 여성농업인 삶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도·농간 또는 지역별 비교를 감안하며, 일반여성과의 비교도 가능해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적절히 병용하고, 성별 비교분석을 감안하며, 적정한 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음.

- 최윤지(2003)는 우리 농업 및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농업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대상 농업정책,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구체적으로 여성의 농촌정착을 도우며 농업노동, 가사노동 및 자녀교육 등 농촌생활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제도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여성농업인센터에 주목하였음. 연구결과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은 전국 14개소에 대한 사업비용 1,680,000천원을 제하고도 1,445,312천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남. 또 장래 여성농업인센터의 국가적 파급효과는 현재 효과의 약 187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04년 이후 전국적으로 163개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면 그 파급효과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호철·박재홍(2004)은 2002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18곳을 전수 조사하여 여성농업인센터의 농업정책 도움, 영농활동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연구결과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센터와 지역사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세우기 위한 전략적 거점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농촌보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육 정책 추진, 센터 자립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 센터 운영의 매뉴얼 정립, 체계적인 프로그램 정립, 여성농업인 대상의 교육, 문화사업, 도농 교류 사업 등의 부정기사업 확대를 주장하였음.

- 영농활동과 가사노동, 자녀양육 부담으로부터 이중적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실태에 초점을 두고, 박재규(2005a, b)는 2005년 전북 지역 여성농업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 수준과 건강관리 환경이 삶의 질 수준에 미친 차이를 분석하였음. 연구결과 여성농업인의 60% 이상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영농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낮고 가사노동 부담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가운데 중절수술을 경험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산후관리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영농활동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이 17%로 집계되었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과 부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과다노동,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유무, 출산 후 산후

조리, 주거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박재규(2005a,b)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복지제도의 강화로 지역 보건지소의 기능 및 이동진료소의 기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여성 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번기 자원봉사자에 의한 농촌일손 돕기 활성화를 주장하였음. 또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성농업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여성 농업인의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를 위해 농가도우미 제도 활성화를 주장하였음.

3.5.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 임선희 외(2001)는 여성농업인은 중요한 노동력으로 영농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함. 일반적으로 여성농업인은 영농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으로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어 평생교육 측면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농업인 육성에 중요한 과제임. 여성농업인의 농가 부업을 지원하고 농업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보 문해 교육 등과 같은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학습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최수영 외(2001)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기계화에서 소외되어 영농 보조자와 가사노동 전담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려면 우선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받고 가사노동의 부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실현하고자 생산 및 경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농업인만의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함. 그리고 작목반과 같은 지역 생산자 단체에 활동할 기회를 남성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자금조달이나 영농 일정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 김수옥·박은희(2003)는 여성농업인 육성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여성농업인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음. 농업인력이 감소하고 과수 및 채소 농사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는 증가하였으나 농업 계획이나 영농 자금 관리 등과 같이 영농에 중

요한 의사결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영농 교육 대상이 주로 남성이며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노동집약적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영농 특성상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농업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함.

- 박공주 외(2004)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영농지식과 기술 교육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음. 여성농업인은 영농 기술과 농업 정보에 익숙하지 않아 남성농업인의 보조 역할을 머물고 있음. 따라서 남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교육은 계층별·영농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임.
- 윤준상(2007)은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생산성 높은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전문기술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제시함.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려면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여성농업인이 처한 현실과 능력, 교육에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난이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이나 수료증 등으로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음.
- 홍은파(2010)는 여성농업인 대상 영농교육이 인적자원 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분석 결과 정규 교육과 영농교육은 대체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규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영농 교육이 대체할 수 있음. 특히 체계적인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여성농업인의 인적자원 개발에 효과적임을 증명함.

3.6.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주로 조직활동 참여에 대한 조사 연구이며 생활개선회 회원에 국한되어 있음.

○ 이선영 외(2019)는 한국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조직활동 참여가 여성농업인에게 지닐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였음.

-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 참여는 ‘농촌사회가 원하는 지도자 능력을 신장’, ‘소득원 제공’, ‘여성농업인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 표출’, ‘신체 및 정신 건강 지원’, ‘열린 배움터’ 등의 가치를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함.
- 한편, 농촌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여성농업인의 조직 활동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가치를 실천’, ‘농업 기술 및 경영 전문가 육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선도’, ‘농촌 자원 보존 및 계승’, ‘농촌 발전을 위한 학습단체로서의 사회자본’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함.

○ 황미진 외(2017)는 한국생활개선중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 조사를 수행해 여성농업인 조직활동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여성농업인 조직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조직들과의 연합 활동에서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관 주도의 활동 기획이 문제점이고, 교육활동 측면에서 내용과 방법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 정은미 외(2012)는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이 마을 부녀회, 농축협 조합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을 부녀회에서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여성농업인단체 활동도 저조한 편이라고 밝힘.

3.7.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

○ 선행연구는 대부분 여성농업인의 노동, 건강, 안전, 복지 등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과제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보다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생산자로서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 건강 및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정책 욕구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과제를 5차 기본계획의 틀로써 제시하였음.
- 또한 일반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청년, 고령자, 결혼이민여성, 귀농여성 등 다양한 주체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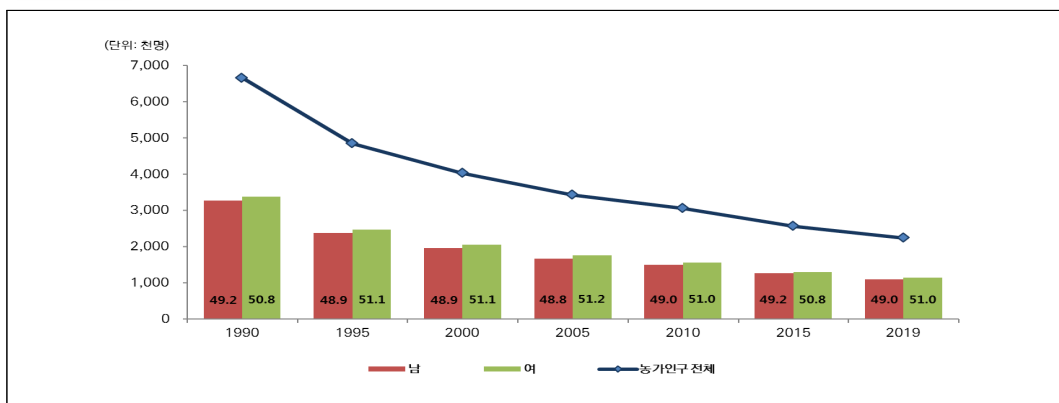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농업·농촌 환경변화

1. 농업·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

○ 농가인구는 1990년 666만 명에서 2005년 343만 명, 2019년 225만 명으로 점차 감소함.

- 남성은 1990년 328만 명, 2005년 168만 명, 2019년 110만 명, 여성은 1990년 338만 명, 2005년 176만 명, 2019년 115만 명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점차 인구가 감소함.

그림 2-1 연도별 성별 농가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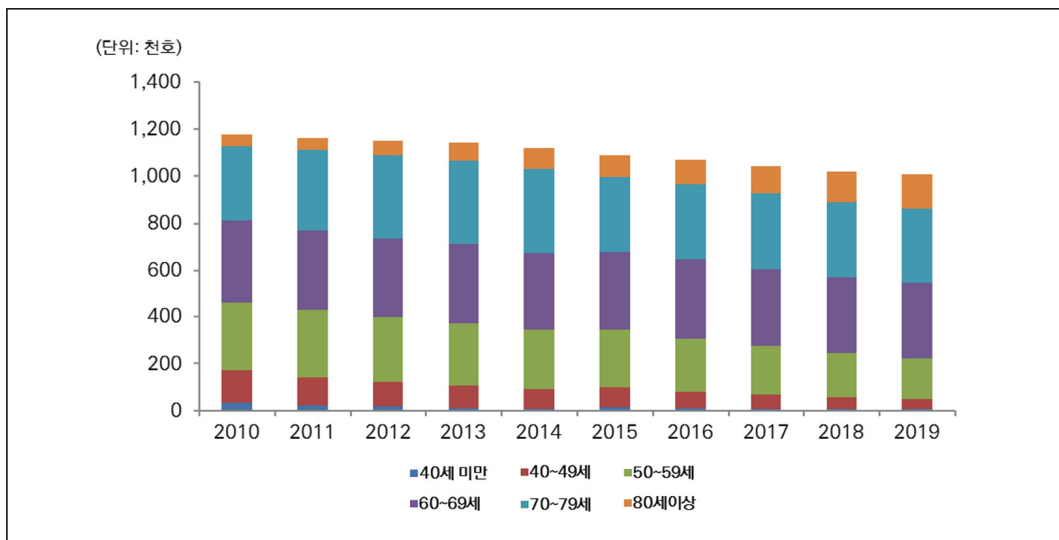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2019』.

○ 농가인구가 단순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가구주 연령별 농가 수를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 40~49세 미만, 50~59세 미만에 해당하는 농가의 비중이 해마다 감소함으로써 청장년층의 농업 신규 진입이 적음을 알 수 있음.

-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2010년 30.9%에서 2019년 45.8%로 늘어 전체 농가의 절반 수준을 차지함. 특히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2010년 4.2%에서 2019년 14.3%로 크게 증가함.
- 반면, 40세 미만 가구주는 2010년에 2.8%를 차지하였다가 2019년에는 0.7%로 감소하였음.

그림 2-2 가구주 연령별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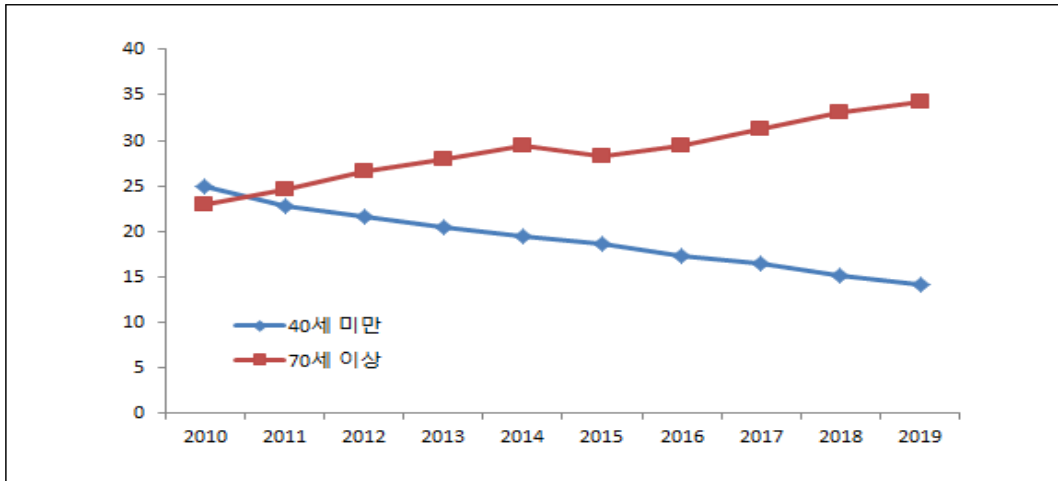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각 연도.

○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여성가구원 사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남.

- 40세 미만 여성 가구원의 비중은 지난 10년 사이에 24.9%에서 14.1%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반해 70세 이상 여성 가구원의 비중은 23.0%에서 34.2%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여성의 고령화는 전체 농가 평균보다 더욱 심각한데 2019년 현재 농가 전체 평균 40세 미만 비중은 15.0%로서 여성의 40세 미만 비중보다 다소 높은 반면 7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전체 농가의 경우 31.8%로서 여성의 70세 이상 비중보다 낮음.

그림 2-3 농가 내 청년여성과 노인여성의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각 연도.

- 농가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는 농업노동력의 활력과 농촌 공동체의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농업·농촌 인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인구의 증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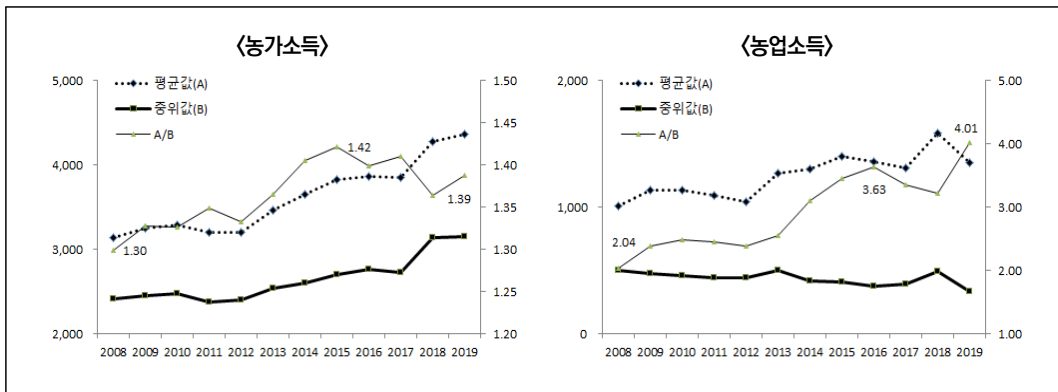
2. 농가의 사회경제적 계층 다변화

2.1. 농가소득 불평등 심화

○ 소득 불평등은 점차 심화, 특히 농업소득 격차 확대

- 농가소득 평균값과 중위값 차이는 2008~2019년 평균 1.37이었음. 같은 기간 농업소득 평균값과 중위값 차이는 평균 2.92로서 농업소득의 불평등도가 더욱 확대됨.
- 농업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외 및 이전소득으로 이 격차를 일부 좁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4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의 중위값과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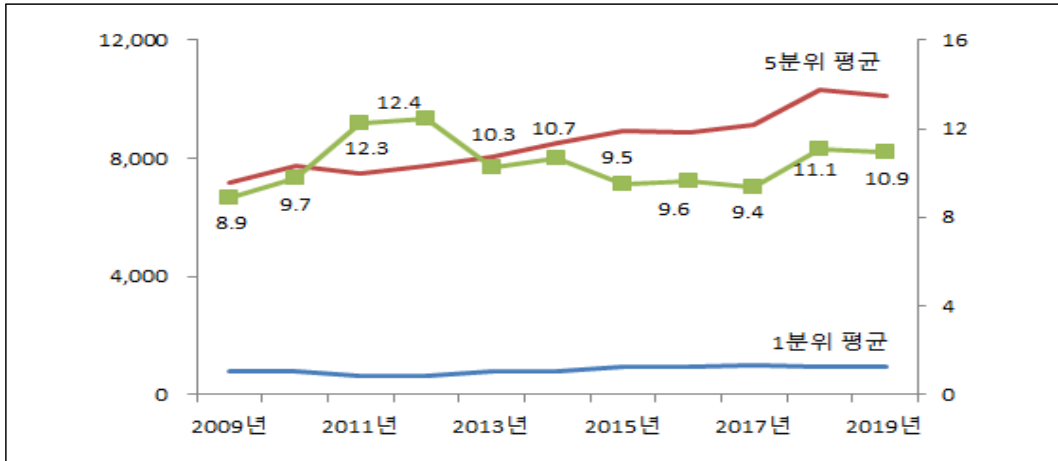
자료: 유찬화·김태후(2020) p. 11.

○ 농가소득 5분위 계층과 1분위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가구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2009년 이후 항상 9를 초과하고 있음.
- 5분위 배율은 2011년에 12.4까지 이르렀다가 하락하였으나 최근 2년간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소득 1분위 집단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소득 5분위 집단 농가소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집단의 만성적인 소득 부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림 2-5 농가소득 5분위 배율-2009~2019년

단위: 만 원



주: 적자농가 농가소득을 0으로 조정하고,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유찬화·김태후(2020) pp. 11-12.

2.2. 농업·농촌 인구 구성 다양화

- 귀농·귀촌 인구, 결혼이민여성, 고령여성농업인, 청년여성농업인, 일반 농업인 등 배경과 출신이 다양한 집단이 농촌사회를 구성
-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귀농 인구는 2013년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귀촌인구는 28만 명 이상, 최대 33만 4,000명까지 증가하였음.

표 2-1 귀농·귀촌인구 추이

단위: 명, %

귀농/귀촌	성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귀농	전체	10,312	10,904	12,114	13,019	12,763	12,055	11,504
	남성	7,239	7,541	8,331	8,759	8,509	8,265	7,891
	여성	3,073	3,363	3,783	4,260	4,254	3,790	3,613
		(29.8)	(30.8)	(31.2)	(32.7)	(33.3)	(31.4)	(31.4)
귀촌	전체	280,838	299,357	317,409	322,508	334,129	328,343	317,660
	남성	171,257	182,081	197,996	199,944	208,386	201,703	194,790
	여성	109,581	117,276	119,413	122,564	125,743	126,640	122,870
		(39.0)	(39.2)	(37.6)	(38.0)	(37.6)	(38.6)	(38.7)

주: 1) 괄호 안은 여성의 비율임.

2) 가구주만 포함하였음.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 각 연도.

○ 결혼이민여성 증가

- 농촌 지역의 2015년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32,877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34,879명으로 증가함.
- 국적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13,85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중국, 중국(한국계)가 뒤를 잇고 있음.

표 2-2 결혼이민여성 현황(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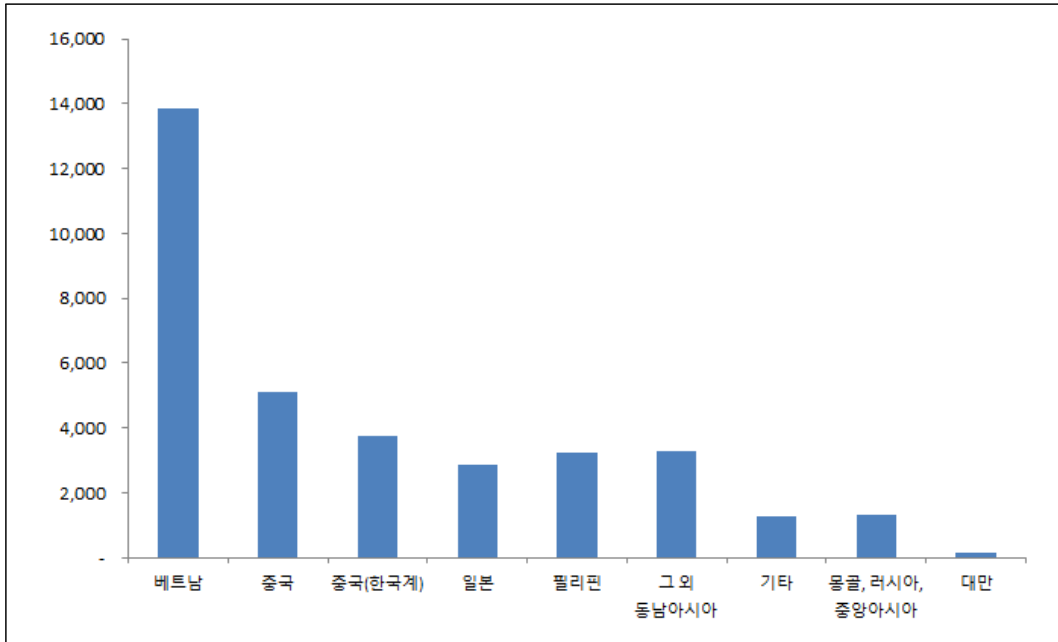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도시	85,404 (72.2)	96,580 (74.2)	96,039 (74.2)	99,604 (74.7)	103,894 (74.9)
농촌	32,877 (27.8)	33,556 (25.8)	33,417 (25.8)	33,806 (25.3)	34,879 (25.1)
전체	118,281 (100.0)	130,136 (100.0)	129,456 (100.0)	133,410 (100.0)	138,773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그림 2-6 국적별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년.

- 출신배경과 농촌사회로의 유입 동기가 다른 집단이 농촌사회에 많아지면서 농촌 여성 인구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음.
- 이는 농촌 여성 내부에서도 집단 간 정책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다양한 배경과 욕구를 가진 집단이 농촌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타자(他者)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사회활동 등에서 다양한 여성주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3.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상황이 맞물려 비대면 풍조가 확산되면서 농촌의 생활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SNS나 온라인 금융 등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 면에서 고령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보화기기의 보유 및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음.

- 60대 여성농업인의 컴퓨터 보유율은 29.2%로서 50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빈도도 이용을 하지 않거나 가끔 이용하는 수준에서 멈추어 있음.

-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용율은 컴퓨터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남.

- 연령 간 정보화의 격차는 생활서비스 활용이나 정보 획득에 있어서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표 2-3 여성농업인 연령별 정보화기기 보유 및 사용비율

단위: %

연령	컴퓨터				스마트폰			
	보유율	사용빈도			보유율	사용빈도		
		자주 이용	가끔 이용	이용 안함		자주 이용	가끔 이용	이용 안함
30대 이하	91.1	53.7	41	5.3	98.2	95.2	4.8	0
40대	90.9	41.8	33.7	24.4	97.1	91.2	8.8	0
50대	60.5	39.3	41.1	19.6	91.9	88.5	11.1	0.4
60대	29.2	29.1	43.4	27.5	75.1	81.0	18.2	0.9
70대 이상	10.8	29.1	8.3	62.5	29.9	69.6	29.7	0.6

자료: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동시에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생산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범위가 확대되는 순효과도 있음.

-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를 유지해왔으나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농업인의 네이버 스토어,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활용 증가

- 상품의 가치 평가, 피드백 확보 측면에서 온라인 시장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직접판매 비율 증가('10: 21.3% → '19: 26.4%)

표 2-4 농산물 판매처별 농가 비중

단위: %

농산물 판매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도매시장	5.5	5.1	4.9	4.6	4.3	5.1	4.6	4.5	4.1	3.8
산지공판장	5.1	5.3	5.3	5.2	5.8	5.1	6.9	6.2	6.4	6.6
농협,농업법인	34.1	33.2	33.9	33.9	34.6	34.0	34.4	34.4	34.4	36.7
수집상	12.1	13.3	13.3	12.6	12.0	9.3	9.3	9.8	8.8	8.2
친환경농산물전문유통업체	0.5	0.4	0.5	0.6	0.6	0.7	0.4	0.5	0.5	0.6
소비자직접판매	21.3	21.4	22.0	23.5	24.0	24.9	25.8	26.9	26.9	26.4
농축산물가공업체	3.8	4.7	4.2	5.0	4.9	2.9	3.7	3.6	4.2	4.0
농축산물소매상	2.0	2.2	1.8	1.5	1.5	1.4	1.4	1.2	1.2	1.4
대형유통업체								0.3	0.4	0.4
대형수요처								0.2	0.2	0.3
기타(판매없음포함)	15.6	14.3	14.2	13.2	12.2	16.4	13.5	12.3	12.8	11.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 코로나 사태 이후 전자 상거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됨.³⁾

- 코로나 발생 전후의 소비자 조사 식품구매 행태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슈퍼마켓·편의점 등 대면 접촉이 없거나 적은 곳에서의 농식품 구매증가

³⁾ 농촌진흥청, 『농식품, 온라인마켓 이용...과일 등 신선 식품 고루 구매』, 보도자료 2020.04.21.

- 신선·가공식품을 모두 온라인과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증가(신선 7.9%p, 가공 7.4%p)한 반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의 구입은 감소(신선 5.9%p, 가공 6.5%p)
- 농식품 구매과정에서 대인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걱정하거나 오염된 농식품을 통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도 9.4%나 있는 것으로 조사

○ 온라인 시장에서 고객과의 소통, 회계관리 등 다양한 경영업무 등에서 강점을 가진 여성농업인이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은 경영에 있어 주로 판로를 결정하거나, 농사 기술 및 판매 정보 획득의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데 그 속에서 온라인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음.

표 2-5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업경영 관련 작업

단위: %

응답자 연령	판로 결정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영농 자금 결정	경영 일지 기록	농지 및 기계 구입	고용 인력 선정	농지 임차
전체	57.6	56.1	41.7	30.8	23.2	18.7	18.1	4.2
30대 이하	55.5	58.9	34.1	23.7	30.3	10.3	8.4	1.4
40대	54.8	59.1	36.9	27.1	26.6	18.3	16.3	5.5
50대	60.2	55.7	39.1	34.9	28.4	16.5	19.2	3.3
60대	57.7	55.1	38.6	37.4	24.1	20.3	19.1	4.4
70대 이상	56.7	56.4	47.5	23.9	18.0	19.5	17.8	4.6

주: 일반 및 귀농 여성농업인의 중복응답이며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자료: 안 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4. 농업·농촌 정책 여건의 변화

4.1. 먹거리체계에 대한 정책 영역 확장

○ 농식품 안전 문제나 먹거리 교육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과 정책이 2000년대 들어 계속 확장됨.

- 학교급식이 체계를 갖추어가면서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 빈발하는 가축질병이나 농식품 안전사고 등도 먹거리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을 높이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그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적 의제를 수용한 일련의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먹거리는 농정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음.
- 2009년에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15년에는 일명 ‘로컬푸드법’이라고도 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됨.

○ 최근에는 단순히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장됨.

- 정부는 2019년에 9개 지자체를 정하여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67개 지자체(광역시 15개소, 기초 52개소)에서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함.
- 수립한 푸드플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농림분야 관련 정책사업을 묶어서 포괄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것을 전제로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거버넌스의 틀을 형성해 푸드플랜 실행방안을 논의하게 지원함.

○ 아울러, 농산물 직매장이나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푸드 확대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내걸고 있는바,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략이기도 함.

○ 먹거리 분야의 그 같은 정책 확장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역량을 다층적으로 계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생산자, 농식품 가공 및 유통의 핵심 종사자 및 경영인,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정보를 생성·전달하는 교육자, 농촌 지역의 먹거리 관련 정책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역할이 여성농업인에게 새롭게 부여됨.

4.2. 사회적 경제의 확산

○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에 제정·시행된 이후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사회 활동 조직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과도하게 시장경쟁 논리를 강조해 온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의 결과,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심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겠다는 인식 저변이 확대됨.

○ 근년에는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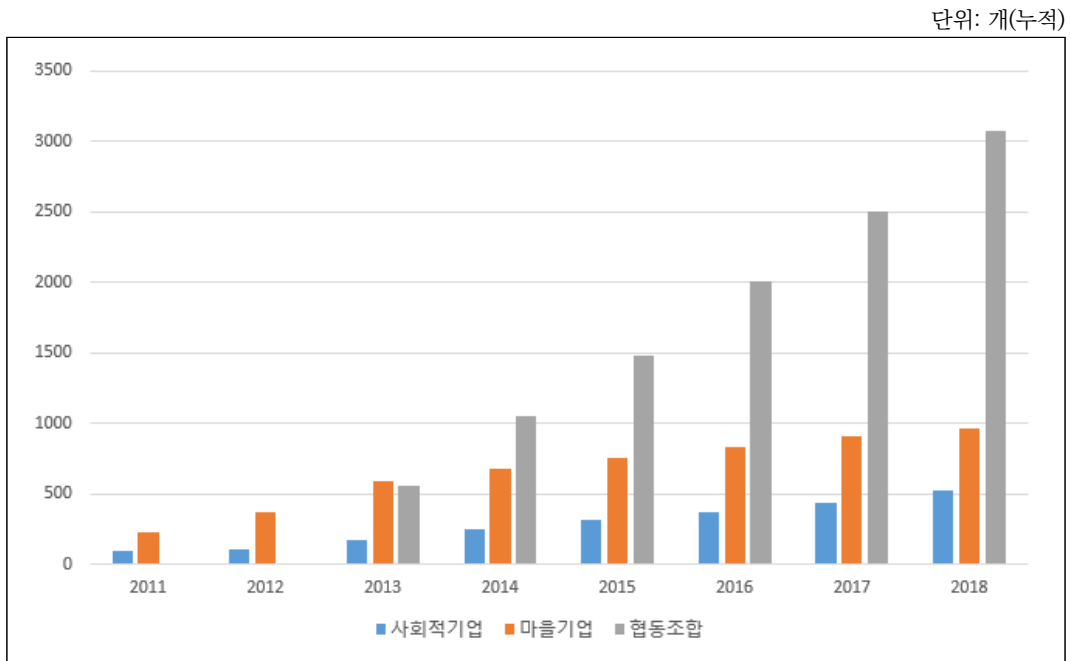
- 사회적 경제 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고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 들어서도 2개의 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 청와대에 사회적 경제 비서관 직제가 신설되고, 여러 정부부처에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할 단위가 신설되거나 지정됨.

-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현재 138곳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량에 해당됨.

○ 농촌 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성장해왔음. 2018년 현재 농촌 지역에 4,000여 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 먹거리 생산유통, 사회서비스, 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실천을 조직하는 사례가 증가함.
-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농업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실천으로 '사회적 농업'이 부각되고 관련 정책도 마련되기 시작함.

그림 2-7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증가 추이



자료: 성주인(2020), “농촌 재생, 미래 변화를 준비한다”,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사회적 경제 정책 기반이 확충되고 관련된 담론과 실천이 확산되는 최근의 추세는, 여성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 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이나 상호부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실제로 수행할 것을 요구받아 왔고, 그 역할을 주로 비공식 노동의 형태로 수행해 왔음. 과중한 역할을 요청받아 수행하지만 그에 걸맞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그런데 최근의 사회적 경제 실천 및 정책의 확산은 비공식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여성농업인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5.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전환

○ 여성에 대한 정책은 1980년대 이후 부녀정책, 여성정책, 양성평등 정책으로 변화하여 왔음(신경아 2016).

-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부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정책이 시행되어 1990년대 후반까지 여성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복지성 정책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여성정책은 여성 복지지원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바뀌었음.

○ 1998년도에는 “여성문제가 모든 국가 정책에서 핵심 분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정책을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성 주류화 제도가 도입되었음.

- 성 주류화 도입 초기인 1998~2000년대에는 6개 중앙부처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성차별적 법·제도 정비, 성 인식적 관점에서의 통계자료 개발을 시도하였음.
- 2002~2003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성 주류화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성 주류화를 추진전략을 명시하였음.

- 2003년부터 2010년대 초반에는 성인지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시작,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장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2010년 초반 이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성 주류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함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 성평등지수 등 성 주류화 도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특히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됨.

-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함.

○ 양성평등기본법의 전신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상징함.

- 여기에서의 양성평등은 여성에게 주던 혜택을 남성에게 확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의 지향점이자 목표로 해석되어야 함(마경희 2017).

○ 국내에서 성평등 정책은 1995년 이후 4차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6대 대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이행점검함.
-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비추어볼 때 농업·농촌 분야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공동체회사의 양성평등 경영, 농업 분야 성별 임금격차 완화, 농업종사자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과 서비스 접근권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실행해야 함.

○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기본계획 '19년도 시행계획에서 시·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 중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4.2%로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됨.

-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과 바우처 지원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소액의 교육 관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특화 사업이 아닌 경우에 여성 참여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지자체의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2-6 광역자치단체 농업·농촌분야 '19년도 자체사업 시행계획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내용	'19년도 시행계획	예산	
			'18	'19
대구	• 생활공감 녹색기술교육	• 농촌리더 아카데미 추진	39.5	39.5
광주	• 여성농업인학습단체 육성	•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24회	27.3	26.3
대전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30회 700명	15	15
세종	• 농업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	• 농촌여성 리더십 향상교육 1회 •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기본교육 15회 • 지역농산물 활용 식문화 교육 15회	10	15
	•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 (특화)	• 농촌자원가공 소득화 사업	84	42
울산	• 농업분야 여성역량 강화	• 생활개선회의 과제 교육	18.9	32.4
		• 여성학습단체 해외연수	30	30
경기	•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20명(여성 농업인 35% 이상)	462	462
강원	• 농업 분야 여성역량 강화	• 가족공동협약 교육 이관 또는 전문교육기관 위탁 검토	7	완료
		•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한여농, 전여농)	62	40
충남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쉼터, 배움터, 나눔터 제공)	791	1,062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5,903	6,840
	• 농업분야 여성의 역량강화	• 전문농업인 교육	123	154
		• 귀농대학 운영지원	30	23
전남	• 농업분야 여성역량 강화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104	104
		• 농업인 정보화 교육	41	41
		• 여성농업기계교육	4	5

지역	사업내용	'19년도 시행계획	예산	
			'18	'19
경북	•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전국여성농민회도연합회 회원역량강화 교육	20	20
	•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	•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 23개소	117.3	117.3
	• 농촌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 농가맛집 육성	300	450
		•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1,500	300
		• 농산물가공체험장 조성	100	100
경남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연령·인원·금액 확대	2,000	3,380
제주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8개소 지원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 활동 등	944	944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양성평등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2019년 시행계획 분석.

○ 국가 차원에서의 성 주류화는 농업·농촌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며 농업·농촌 정책사업의 계획·집행·평가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의 확대를 위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음.

6. 기후변화와 자연환경 악화

6.1. 이상기온으로 인한 작부체계 변화와 재해 발생⁴⁾

○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 133년간(1880~2012년) 0.85℃(0.65~1.06℃) 상승하였으며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1986~2005년 대비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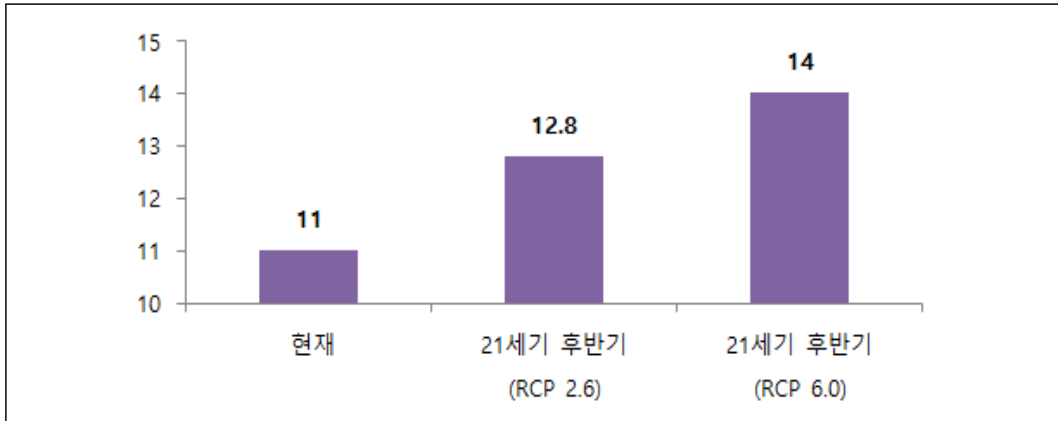
○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981~2010년 기간 동안 1.2℃ 상승하였으며 21세기 전반기에는 지금보다 1.5℃, 중반기와 후반기에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RCP6.0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0.8℃, 중반기에 +1.6℃, 후반기에 +3.0℃ 상승하여 온난화가 후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기상청 2017).

4) 해당 내용은 정학균 외(2019)의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업부문의 대응과 기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그림 2-8 한반도 연평균 기온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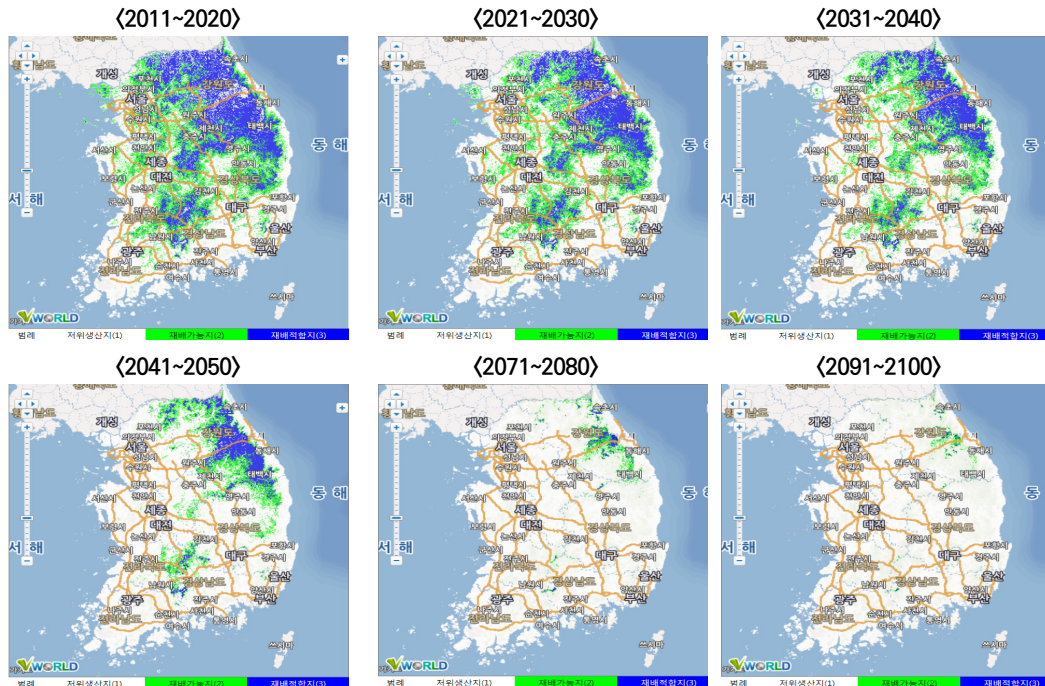
자료: 기상청 2017(정학균 외 (2019)에서 재인용).

- 한반도의 온난화 전망에 따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여름일수와 같은 고온 관련 극한지수의 증가가 전망되며 호우일수, 5일최다강수량, 강수강도 등도 현재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 주변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가뭄, 홍수, 태풍, 이상저온, 폭염 등 자연재해를 빈발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킴.
 -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은 식량 생산 변화, 축산물 생산량 변화, 작물재배 적지 변화, 병해충 및 이상기상 증가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 가용 농업용수량 변화 등으로 나타남.
 - 간접적인 영향은 식량안보 문제,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 보건 문제, 식품 안전 문제 등이 있음.
 - 기후변동성 증가, 고온다습한 기후 증가로 인한 기존 작물 성장 저해, 이상기상 증가로 인한 재해 위험성 증가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위기 요인으로 인식됨.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주요 산지가 북상하고 재배적지가 변화하고 있음.

- 2011-2100년 기간 중 보리 품종군별 재배안전지대의 지리적 변화를 예측한 결과 2020년대에는 대부분의 강원도와 북한 남부지역에서 겉보리를 재배할 수 있고, 2040년대에는 거의 모든 북한 평야지역의 벼논에서 쌀보리 이모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김대준 외 2012).
-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를 바탕으로 환경에 맞는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을 시도한 결과 사과 재배 면적은 재배가능지와 재배적합지가 북상하면서 그 면적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농촌진흥청 2015).

그림 2-9 RCP8.5 시나리오 기준 사과 재배 적지 변동 예측



주: 녹색 지역이 재배가능지, 파란색 지역이 재배적합지를 나타냄.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제공 시스템. <http://www.agdcm.kr/map/search2.do>, (정학균 외 (2019)에서 재인용).

○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은 농가의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농촌여성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재해 대응을 위한 노동 증가 등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함.

6.2.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질 저하

- 최근 2~3년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촌지역도 예외가 아님.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하여 공기 질이 저하되면 일상적으로 야외에서 노동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의 호흡기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노년층의 폐기능 저하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됨.
 - 또한 미세먼지는 농축산물의 생육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먼지 농도가 높아질 경우 햇빛을 가려 농작물이 충분히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도 하며 가축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먹이 섭취량이 줄어드는 등 가축의 건강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침.
- 그러나 농업이 미세먼지를 유발하기도 함(남재작 2019).
 - 농업잔재물 소각에서 연간 1만 6,804톤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며 농기계 운행에서도 연간 2,588톤의 미세먼지가 배출됨.
 -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는 80%가 농업에서 발생함.
- 이에 정부는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으며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영농폐기물 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발생 감축, 경종분야 미세먼지, 암모니아 발생 감축,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기초연구의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였음.

3

외국의 여성농업인 현황과 정책⁵⁾

1. 유럽⁶⁾

1.1. 유럽의 여성 농업인 현황

○ 유럽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 수준이 높지만, 농촌 지역의 양성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유럽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여성 농업인의 지위는 낮고 그 역할은 과소평가되었음.

○ 이 장에서는 유럽연합의 통계와 발간물을 활용하여 유럽 내 여성 농업 경영주 현황, 농업 부문 여성 고용 현황,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파악함.

⁵⁾ 이 장에서 유럽은 양성평등정책의 역사나 농업·농촌 정책의 성 주류화를 오래 전부터 지향하여 온 선도적인 사례로서 참고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국내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아 참고하였음.

⁶⁾ 본 절은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농촌사회학 박사과정 이정해 학생에게 의뢰한 “유럽의 여성농업인 현황과 지원 정책” 위탁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통계자료는 유럽 통계청(Eurostat)의 농가 구조 조사(FSS: Farm Structure Survey)⁷⁾ 데이터를 추출했고 유럽연합 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의 발간물을 참고하였음.

1.1.1. 여성 농가 현황

○ 2016년 기준으로 유럽의 전체 농가 수는 1,046만 7,850호이며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는 297만 5,190호로 전체 농가의 28.4%를 차지함.

- 2005년의 26.3%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고, 유럽 전체적으로 농가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여성 농가 수도 함께 감소함.

○ 회원국별로 비교해보면,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과 남유럽 국가들의 여성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은 여성 농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함(표 3-1).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 농가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함.

-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여성 농가가 전체 여성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9%이고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0%에 이름.
- 반면 40세 미만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 수는 25만 6,850호이며 전체 농가의 약 2.5%에 불과함(2016년 기준)(표 3-2).

⁷⁾ 유럽 통계청은 2005년부터 3~4년 주기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농가 구조를 조사한다. 표본 조사로 진행하며 10년 주기로 전수 조사를 한다. 유럽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2016년 농가 구조 조사 자료임.

표 3-1 유럽연합의 여성 농가수 및 비율(2016)

단위: 호, %

	전체 농가 수	여성 농가 수	여성 농가 비율
EU-28	10,467,850	2,975,190	28.4
벨기에	36,890	5,340	14.5
불가리아	202,720	50,260	24.8
체코	26,520	3,200	12.1
덴마크	35,050	2,700	7.7
독일	276,120	26,500	9.6
에스토니아	16,700	5,530	33.1
아일랜드	137,560	14,920	10.8
그리스	684,950	188,020	27.5
스페인	945,020	213,040	22.5
프랑스	456,520	97,030	21.3
크로아티아	134,460	34,990	26.0
이탈리아	1,145,710	361,420	31.5
키프로스	34,940	7,890	22.6
라트비아	69,930	31,400	44.9
리투아니아	150,320	67,470	44.9
룩셈부르크	1,970	340	17.3
헝가리	430,000	117,260	27.3
몰타	9,310	560	6.0
네덜란드	55,680	2,890	5.2
오스트리아	132,500	41,150	31.1
폴란드	1,410,700	415,270	29.4
포르투갈	258,980	77,620	30.0
루마니아	3,422,030	1,147,670	33.5
슬로베니아	69,900	14,140	20.2
슬로바키아	25,660	4,920	19.2
핀란드	49,710	5,900	11.9
스웨덴	62,940	9,740	15.5
영국	185,060	28,020	15.1

주: EU-28은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을 의미하며, 2004년 4월 30일 이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15개 국가와 2004년 5월 1일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13개 국가임.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표 3-2 유럽연합의 연령대별 여성 농가 비율(2016)

단위: %

	25세 미만	25~34	35~39	40~44	45~54	55~64	65 이상
연령대별 여성 농가 수 /전체 농가 수	0.1	1.1	1.3	1.9	5.4	6.8	12.0
연령대별 여성 농가 수 /전체 여성 농가 수	0.3	3.9	4.4	6.7	19.1	23.8	41.9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 여성농가의 경영규모는 영세함.

- 2ha 미만의 여성 농가가 전체 여성 농가의 52.4%
- EU의 직불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0ha 이하를 소농으로 간주하는 데 여성 농가의 87.3%가 여기에 해당(표 3-3).
- 여성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5.8ha(남성 농가의 평균 경지면적 12.9ha)
- 전체 농지에서 여성 소유 비율은 12%로 남성의 61%와 비교하면 매우 낮으며, 나머지는 회사 유형의 농업 경영체 소유(Franić & Kovačiček 2019)

표 3-3 유럽연합의 경지면적별 여성 농가수 및 비율(2016)

단위: 호, %

	2ha 미만	2~4.9ha	5~9.9ha	10~29.9ha	30~49.9ha	50~99.9ha	100ha 이상
농가수	1,557,470	705,090	331,830	243,860	57,250	45,400	34,320
비율	52.4	23.7	11.2	8.2	1.9	1.5	1.2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 여성 농가의 수익성은 낮음.

- 유럽 전체에서 연간 25,000유로 미만의 농업 생산액을 기록한 여성 농가가 전체 여성 농가의 약 91.1%
- 주로 2004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 대부분에서 농업 생산액이 낮은 여성 농가의 비율이 높음.

표 3-4 유럽연합의 농업 생산액별 여성 농가수 및 비율(2016)

	8,000 유로 미만		8,000 ~24,999		25,000 ~49,999		50,000 ~99,999		100,000 유로 이상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EU-28	2,349,040	79.0	360,280	12.1	116,860	3.9	71,470	2.4	77,510	2.6
벨기에	470	8.8	930	17.4	790	14.8	890	16.7	2,260	42.3
불가리아	41,630	82.8	5,400	10.7	1,450	2.9	780	1.6	1,000	2.0
체코	1,170	36.7	1,020	32.0	410	12.9	220	6.9	370	11.6
덴마크	650	24.0	970	35.8	430	15.9	250	9.2	410	15.1
독일	3,980	15.0	8,210	31.0	4,390	16.6	3,590	13.5	6,330	23.9
에스토니아	4,230	76.6	780	14.1	220	4.0	140	2.5	150	2.7
아일랜드	7,390	49.5	4,760	31.9	1,520	10.2	670	4.5	600	4.0
그리스	146,060	77.7	32,980	17.5	6,870	3.7	1,580	0.8	540	0.3
스페인	126,820	59.5	49,630	23.3	16,950	8.0	10,370	4.9	9,270	4.4
프랑스	25,450	26.2	20,260	20.9	14,500	14.9	12,790	13.2	24,010	24.8
크로아티아	25,700	73.5	7,040	20.1	1,450	4.1	530	1.5	260	0.7
이탈리아	215,440	59.6	82,530	22.8	31,270	8.7	19,040	5.3	13,140	3.6
키프로스	7,000	88.9	640	8.1	110	1.4	60	0.8	60	0.8
라트비아	25,620	81.6	3,750	11.9	1,090	3.5	480	1.5	450	1.4
리투아니아	55,840	82.8	8,420	12.5	1,700	2.5	920	1.4	590	0.9
룩셈부르크	30	9.1	60	18.2	50	15.2	60	18.2	130	39.4
헝가리	104,030	88.7	7,940	6.8	2,440	2.1	1,370	1.2	1,500	1.3
몰타	510	91.1	20	3.6	20	3.6	10	1.8	0	0.0
네덜란드	280	9.7	790	27.4	450	15.6	380	13.2	980	34.0
오스트리아	13,000	31.6	11,410	27.7	6,660	16.2	6,040	14.7	4,040	9.8
폴란드	328,560	79.1	62,820	15.1	14,020	3.4	5,720	1.4	4,150	1.0
포르투갈	62,550	80.6	10,190	13.1	2,340	3.0	1,190	1.5	1,360	1.8
루마니아	1,119,870	97.6	23,910	2.1	2,160	0.2	680	0.1	1,040	0.1
슬로베니아	9,370	66.2	3,450	24.4	830	5.9	350	2.5	160	1.1
슬로바키아	3,700	75.4	690	14.1	170	3.5	110	2.2	240	4.9
핀란드	1,560	26.4	1,740	29.5	950	16.1	690	11.7	960	16.3
스웨덴	5,230	53.7	2,720	27.9	700	7.2	470	4.8	620	6.4
영국	12,900	46.0	7,220	25.8	2,920	10.4	2,090	7.5	2,890	10.3

주: 1) 농업 생산액은 생산자 가격을 반영하며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실질 가격임.

2) 최근 환율(1유로=1,400원)을 적용하면 8,000유로는 약 1,120만 원, 25,000유로는 3,500만 원, 50,000유로는 7,000만 원, 100,000유로는 1억 4,000만 원임.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1.1.2. 농업 부문 여성 고용

○ 유럽의 농업 활동 참여 인구는 총 2,036만 910명이며 이 중 여성은 816만 3,790명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

- 농업 노동력은 농가 경영주 본인 노동력, 가족 노동력, 비가족 노동력으로 구분하는데 가족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가족이 경영주로 있는 농장에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구 중 55.3%가 여성(표 3-5)

표 3-5 유럽연합의 여성 농업 노동력 현황(2016)

단위: 명, %

	전체	여성	여성 비율
경영주 본인 노동력	9,987,650	3,054,010	30.6
가족 노동력	8,235,400	4,550,500	55.3
비가족 노동력	2,137,840	559,290	26.2
계	20,360,910	8,163,790	40.1

주: 핀란드 자료가 누락되어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의 자료를 가공함.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 피고용 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6.2%이며 절반 이상이 시간제로 고용됨.

- 전일제로 근무하는 여성은 25만 6,250명이며 이는 전체 여성 고용 노동력의 45.9%를 차지(표 3-6)

표 3-6 유럽연합의 고용 수준별 비가족 여성 농업 노동력 비율(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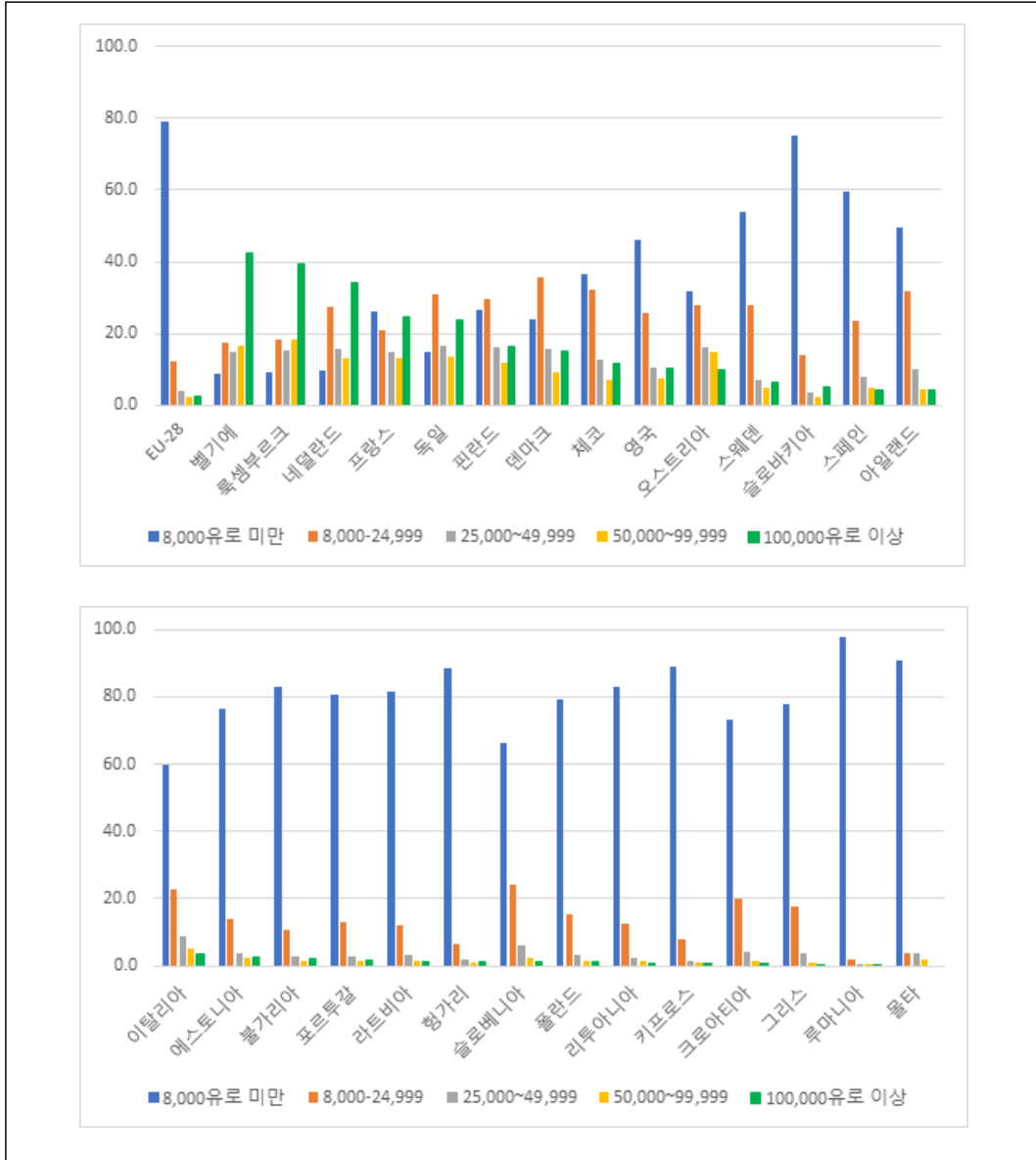
구분	전일제 (full-time)	전일제 1-24%	전일제 25-49%	전일제 50-74%	전일제 75-99%
고용 수준별 여성 농업 노동력 /전체 비가족 농업 노동력	11.9	4.9	2.9	3.0	3.1
고용 수준별 여성 농업 노동력 /전체 비가족 여성 농업 노동력	45.9	19.1	11.3	11.7	12.0

주: 시간제의 고용 수준은 전일제(full-time)의 퍼센트로 구분함.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그림 3-1 유럽연합의 농업 생산액별 여성 농가 비율(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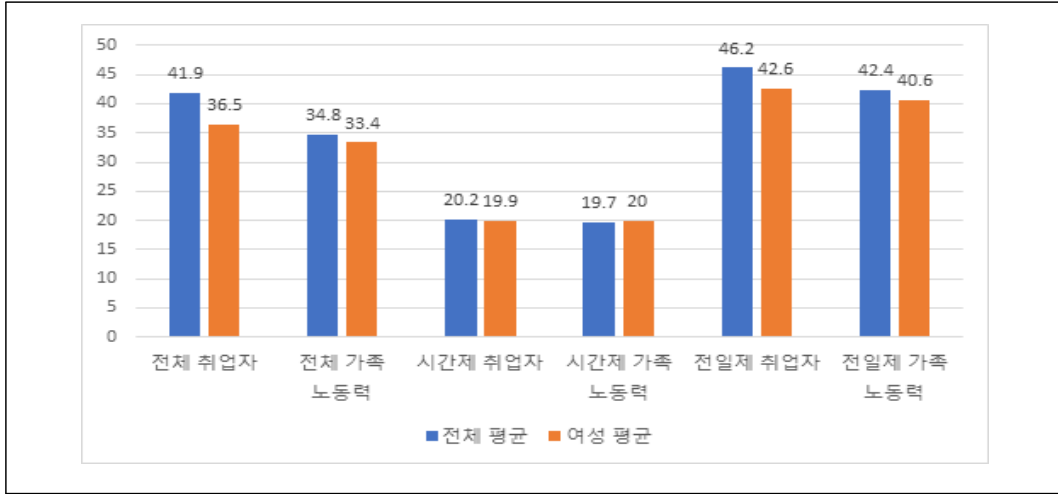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그림 3-2 유럽연합의 농림수산업 분야 평균 근로시간(2018)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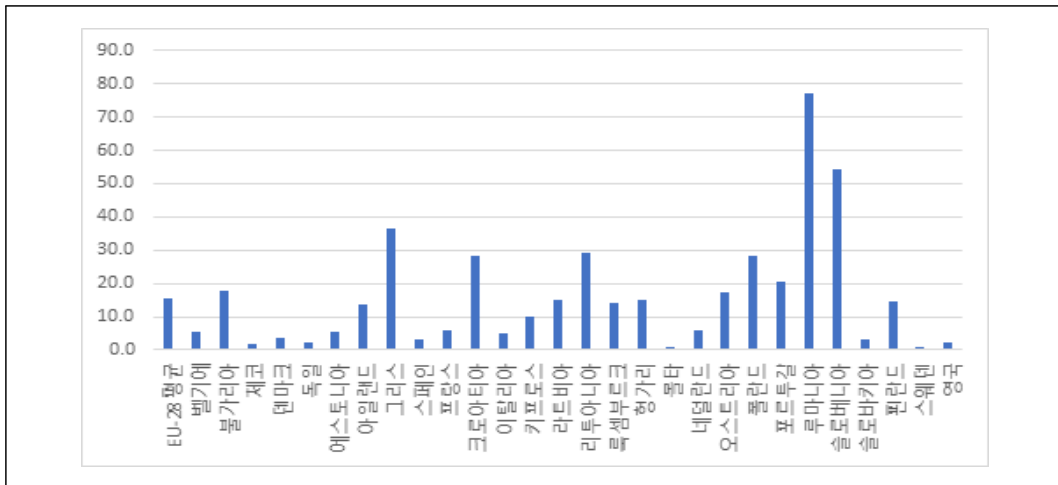


자료: Franić&Kovačiček(2019:31)에서 재인용.

○ 가족 노동력으로서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비공식적인 고용 상태로서 임금이 나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업 부문에서 여성이 비공식으로 고용된 비율은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유럽연합의 평균은 15.6%임(그림 3-3).

그림 3-3 유럽연합의 여성 비공식 고용 비율(2018)



자료: ILO(2018).

1.1.3.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논의

○ 여성이 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수단에 대해서 2000년대 들어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내 농촌 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짐.

-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08년, 2011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농촌 여성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European Parliament 2008, 2011, 2017)하며 농촌 여성의 다기능적인 역할이 농업 분야와 농촌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데 공감대 형성

○ 농촌 여성의 지위 강화를 위한 EU의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농촌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역할과 농촌 지역의 성 불평등 요소에 대한 논의

○ 첫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통한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 구현을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명시

- EU는 농촌 발전 관련 규정 (EC) 1698/2005(EAFRD)에 성 주류화 조항을 추가하면서 ‘유럽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 기금(EAFRD: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이 지원하는 농촌 발전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 점검, 평가 등의 과정에 성 주류화 원칙을 반영

○ 둘째, EU 수준에서 농촌 여성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는 공동농업정책의 한 축인 농촌 발전 정책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타 사회·경제 정책에서도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EU는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천명
- 공동농업정책이 성 주류화 전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공동농업 정책을 통해 여성이 추진하는 농촌 발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

○ 셋째, 농촌 지역 노동 시장의 양성평등을 구현해야 농촌 여성이 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

- 농촌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온 부분을 조명하며, 여성이 무보수와 자원봉사로 수행하는 활동을 재정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다수의 여성 농업인이 배우자 소유의 농장이나 중소 규모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
- 농촌 여성의 유급 고용, 연금 수령, 사회 보장 혜택 등을 보장하고, 여성 농업인의 농지 취득 기회를 높이고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
-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과 농업 이외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 농촌 지역의 성폭력과 가정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 여성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

○ 넷째, 여성의 삶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족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 활동이 사회 서비스 영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은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보육 시설, 평생교육 기관, 노인 요양 및 장애인 보호 시설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및 생활 편의 시설을 오고 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농촌 여성의 삶의 질 저하
-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돌보는 사회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촌 지역 여성들의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차 의료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 의료 및 진료 보조 인력을 농촌 지역에 원활히 공급하여 농촌 지역의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

○ 다섯째, 여성이 농촌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여성이 창업하여 농업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업, 수공업, 관광업 등 농촌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농외 활동 분야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유럽연합의 농촌 발전 예산을 우선 투입
- 협동조합, 생산자 조합, 사회적 기업, 평생교육 기관 등을 통해 여성의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문 서비스를 확대
-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 여성이 사회·경제적 조직의 관리자급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수준에서 여성 실업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을 운영하여 경제 활동 가능 인구 여성들의 고용 접근성 제고

1.2. 유럽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1.2.1. EU의 성 주류화 전략

○ EU는 농촌 발전 정책을 통해 농촌 여성의 직업적 역량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들을 유럽 곳곳에서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유럽연합이 내세웠던 성 주류화 전략은 농촌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지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Bock 2015; Shortall & Bock 2015).

○ 유럽연합의 농촌 발전 정책은 여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보다는 성 주류화 전략을 농촌 발전 정책 과정에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이 정책 수혜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둠.

○ 따라서 여성 농업인들의 생산 기반과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부족하여 농업 및 농촌 경제의 여성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성 주류화 전략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농촌 발전 정책의 수혜자 비율을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음(표 3-7).

표 3-7 유럽연합의 농촌 발전 정책 유형별 수혜 비율(2010)

단위: %

	남성 비율	여성 비율	회사 유형 사업체 비율
종합	76.6	18.3	5.1
현대화	74.6	12.9	12.5
농업 기술 지도	79.3	13.3	7.4
농업 환경 관련	76.3	19.2	4.4
부가가치 상품	67.5	24.1	7.9
농가 경영 다각화	76.5	16.8	6.8
농촌 관광 활성화	80.2	12.1	7.0

자료: 이정해(2017:10)에서 재인용.

1.2.2. 유럽 국가별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 EU는 농촌 지역의 양성 불평등 문제를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여성 농업인 대상 직접 지원 정책은 유럽 국가가 개별적으로 논의하여 수립
 - 여성과 관련한 지원정책은 양성평등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동일 임금, 출산휴가, 연금, 서비스 접근성 등이 대표적 사례임.
 - 여성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여성 농업인과 관련하여 민간 분야에서 추진하는 혁신적인 활동들을 사회·경제 정책 체계 내에서 제도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둠.
 - 여성과 농업인에 관한 정책적 관점, 농업 구조, 법적·제도적 기반 등이 국가별로 달라 나라마다 여성 농업인이 누리는 지위와 정책적 혜택도 상이함.

가. 이탈리아 - ‘여성 농업인과 함께하는 배움-성장-삶’ 사회적 협동조합(Sozialgenossenschaft Mit Bäuerinnen lernen-wachsen-leben)

○ 이탈리아 북부 쥐티롤 (Südtirol) 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 2006년부터 보육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농촌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 2007년에 보육 서비스 시작, 2014년부터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지역 여성 농업인의 집과 농장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며 농장 활동이 주를 이뤄 사회적 농업의 한 유형으로도 볼 수 있음(그림 15).
- 돌봄 서비스 제공 여성은 지역 내 직업 학교에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 후 협동조합과 고용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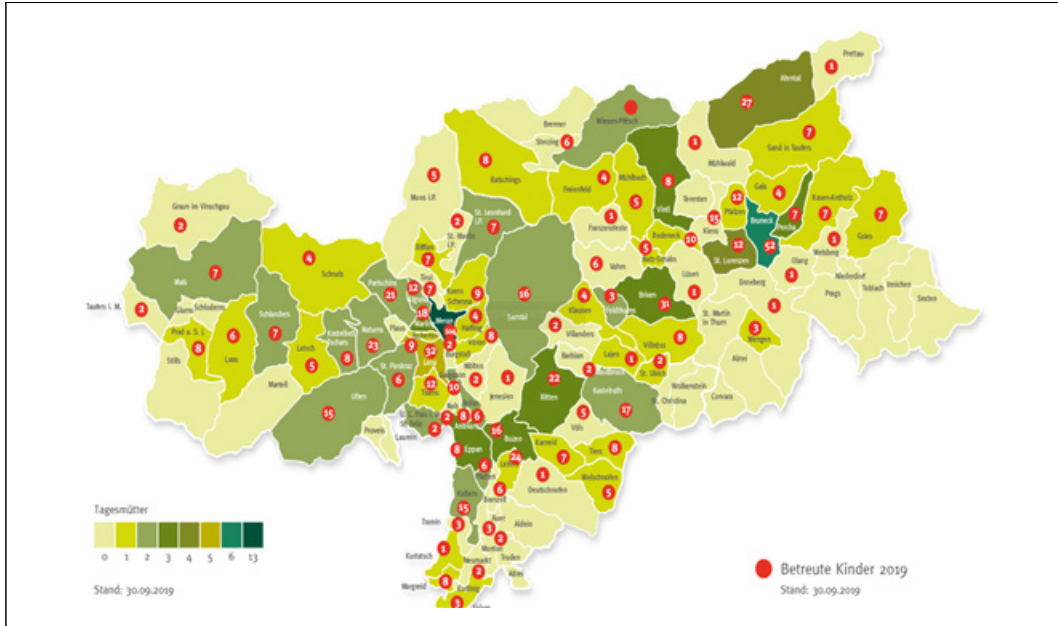
* (아동 돌보미 교육) 1년 간 주2회 수업, 총 450시간의 교육 과정과 100시간의 인턴십 이수, (노인 돌보미 교육) 120시간의 교육과 50시간의 인턴십 이수

- 협동조합에 등록된 아동 돌봄 여성 농업인의 수는 121명이고 노인 돌봄에는 35개의 여성 농가가 참여(2019년 9월 30일 기준)(그림 3-4).

○ 지역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 협동조합은 지역 내 아동, 노인, 장애인, 재소자, 약물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에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그림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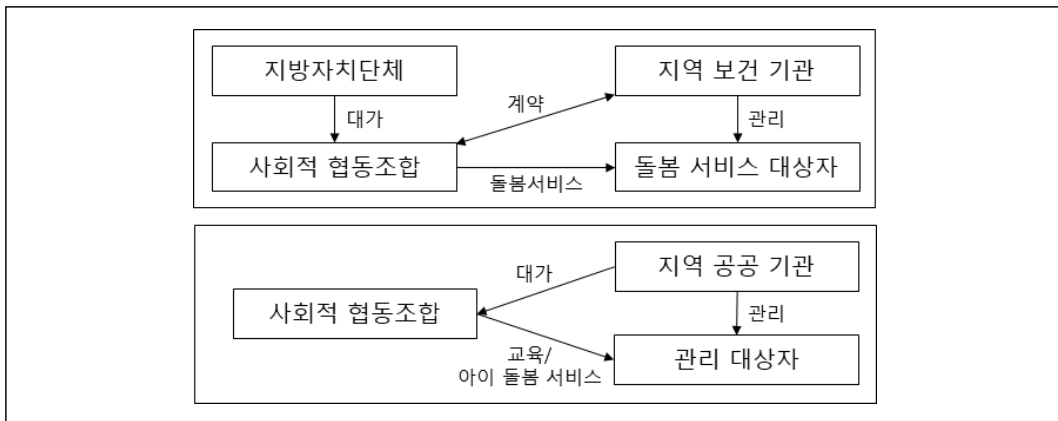
그림 3-4 '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배움-성장-삶' 협동조합의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주: 빨간 원의 숫자는 구역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 수고, 행정구역별 색깔은 해당 지역 내 아이 돌보미로 참여하는 여성 농업인의 수를 나타냄.

자료: Sozialgenossenschaft Mit Bäuerinnen lernen-wachsen-leben의 홈페이지(<https://www.kinderbetreuung.it> 검색일: 2020.08.16.).

그림 3-5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구조



자료: 김정섭 외(2017:43)에서 재인용.

나. 프랑스 - 여성 농업인의 지위 강화 및 사회 보장 혜택 보장⁸⁾

○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여성주의 운동이 발전하면서 여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적으로 활발하였음.

○ 프랑스에서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다수의 농업인이 하나의 농업 경영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 농업 경영체(GAEC: groupements agricoles d'exploitation en commun) 제도 도입(1962년)
- 농업 분야에 '경영 파트너(associé d'exploitation)'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마련하여 공동 농업 경영주 제도의 기틀이 닦임(1973년).
- '공동 경영주(co-exploitante)'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가 도입되어 여성 농업인이 남성 배우자와 함께 농장 경영에 대한 권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됨(1980년).
- 유한 책임 농장(EARL: 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동 경영주 지위의 여성이 수행하는 농업 활동의 직업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때까지는 여성이 농장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뿐 여성 개인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 보장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였음(1985년).
- 농업기본법(loi d'orientation agricole)에 '협력 배우자(conjoint collaborateur)'라는 새로운 지위가 마련되면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사회 보장 혜택 근거가 마련된다(1999년).
- 농업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회 보장 비용을 정부가 지급(2006년)
- 공동 농업 경영체(GAEC)를 부부가 함께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2011년)

⁸⁾ 프랑스 농업부 홈페이지(<https://agriculture.gouv.fr>)에 2019년 8월 3일에 게재된 여성 농업인 권리의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번역·요약하였음.

- 사회 보장 재정법(LFFS: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에 근거하여 여성 농업인도 출산휴가 급여를 일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 8주의 출산휴가가 보장됨(2019년 1월).

다. 독일 - 독일 농촌 여성 협회(Deutscher LandFrauenverband e.V.)⁹⁾

- 독일 농촌 여성 협회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삶의 질과 근로 조건을 향상하고 농촌 여성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 1948년에 설립
 - 회원수는 50만 명, 독일 전역에 22개의 지역협회와 12,000개의 지부가 있음.
- 독일 농촌 여성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고 여성이 농촌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를 운영
- 프로젝트 사례 1: 농촌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Selbst ist die Frau(Herself is the Woman)’ 프로젝트
 - 창업 경험이 있는 8명의 농촌 여성과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여성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해 창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
 - 자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촌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창업하여 경영하는 여성들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
 - 2019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독일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함.

⁹⁾ 독일 농촌 여성 협회 홈페이지(<https://www.landfrauen.info>)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요약하였음.

○ 프로젝트 사례 2: 젊은 농촌 여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Junge LandFrauen(Young Rural Woman)' 프로젝트

- 젊은 농촌 여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독일 전역에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 지역 사회에 필요한 참신하고 다양한 실천을 확산하고자 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년간 진행됐으며 독일 연방정부 농업식품부의 재정 지원을 받음.

2. 일본¹⁰⁾

2.1. 머리말

○ 일본에서 여성농업인은 양적인 면에서는 감소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분화하고 있는데, 즉 지역 리더로서의 여성농업인을 비롯하여, 농업경영주체, 단순 농작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리더 : 마을 이장, 농협·단체 임원, 농업위원회 위원 임원 등
- 경영주체 : 농업경영, 6차산업화, 직거래·도농교류 등
- 단순작업자 : 농작업, 농산물 가공·조리·제조, 농업체험, 판매 등

○ 이와 같은 역할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에 의한 경영성과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¹⁰⁾ 본 절은 김태곤 KREI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에게 의뢰한 “일본의 여성농업인 현황과 지원 정책” 위탁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정책은 3대 관점, 즉 ① 지역리더로서의 역량강화, ② 6차산업을 포함한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역량강화, ③ 단순 농작업·농산물 가공부문의 참가자로의 역량강화와 작업환경 개선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한편 농촌지역 내부에서 보면, 의료·복지분야에서는 취업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농업을 비롯하여 제조업, 도소매업은 감소하고 있음. 음식업·숙박업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과 의료·복지분야 간에 노동력 확보에 경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농림수산성, 2020.6).
- 농림수산성(경영국 취업·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은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전반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여성 창업, 경영능력 향상, 작업환경 정비 등), 농업여자프로젝트, 가족협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로서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 활용 촉진 사무와 농림수산성 소속에 관한 연락 및 조정,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 추진, 경영발절 지원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역할을 함(강혜정 외 2019).
- 일본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 실태와 애로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활동 등에 대해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2. 여성의 농업참여 실태

2.2.1. 농업취업인구의 여성 비율

- 여성은 그동안 농업취업인구와 기간적 농업종사자¹¹⁾ 등 농업후계자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해 왔음.

¹¹⁾ '농업취업인구'란 15세 이상의 농가 가구원 중에서 조사일 이전 1년간 농업만에 종사한 자 또는 농업과 겸업 쌍방에 종사하였지만 농업종사일수가 많은 자를 말한다. '기간적농업종사자'(基幹的農業従事者)란 농업취업인구 중에서 일상 주된 상태가 '주로 자영농업'인 자를 의미함.

○ 농업취업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57.3%에서 2019년 45.4%로 감소하고 있음(표 3-8).

- 농업취업인구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30대 이하 계층이 특히 낮은 편으로, 젊은 여성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함(표 3-9).
- 기간적농업종사자는 2019년 현재 14만 400명이며, 이 중 여성은 5만 6,200명으로 40.0%를 차지함.

표 3-8 농업취업인구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

	농업취업인구(천명)	중 여성(천명)	여성 비율(%)
1995	4,140	2,372	57.3
2000	3,891	2,171	55.8
2005	3,353	1,788	53.3
2010	2,606	1,300	49.9
2015	2,090	1,009	48.1
2016	1,922	900	46.8
2017	1,816	849	46.8
2018	1,753	808	46.1
2019	1,681	764	45.4

자료: 농림수산성(2020.8).

표 3-9 연령별 농업취업인구(2019)

	농업취업인구(천명)	중 여성(천명)	여성 비율(%)
39 이하	93	30	31.8
40~49	90	36	39.8
50~59	144	72	49.9
60~69	621	301	48.4
70 이상	734	326	44.5
합계	1,681	764	45.4

자료: 농림수산성(2020.8).

- 현재까지 ‘신규취농자’¹²⁾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2018년 현재 신규취농자는 5만 5,800명이며, 이 중 여성은 1만 3,400명으로 24.0%를 차지함. 즉 여성의 신규진입이 특히 낮다고 할 수 있음(표 3-10).

표 3-10 연령별 신규취농자(2018)

	신규취농자(명)	중 여성(명)	여성 비율(%)
39 이하	12,810	3,240	25.3
40~49	6,490	1,740	26.8
50~59	7,390	1,910	25.8
60~64	12,290	2,980	24.2
65 이상	16,840	3,550	21.1
합계	55,810	13,429	24.0

자료 : 농림수산성(2020.8).

2.2.2.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 현황

가. 여성 포함 농가수

- 판매금액이 큰 경영체나 6차산업화 등 다각화하는 경영체는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음.

- 지역의 농업이나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유통·판매·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에는 여성 참가율이 높음(표 3-11).
- 또한 판매농가 중에서 경영방침 결정에 여성이 관여하는 농가 비율이 52.2%에 달하는데, 특히 판매금액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이 클수록 여성 참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3-12).

- 특히 여성이 임원이나 관리직에 있는 경영체는 그렇지 않은 경영체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¹²⁾ 신규취농자는 신규자영농취농자, 신규고용취농자, 신규진입자의 합계

표 3-11 6차산업화의 업종별 여성농가수(2015)

	여성이 없는 농가(명)		여성이 있는 농가(명)	
		비율(%)		비율(%)
농산물 가공	7,350	34	14,024	66
체험농장	3,145	38	1,879	62
관광농장	2,023	35	3,795	65
농가민박	547	34	1,082	66
국외수출	106	30	244	70
직접판매	101,318	45	125,267	55

주: 2015년 농림업센서스의 판매농가(133만호)를 대상으로 집계.

자료: 농림수산성(2020.8).

표 3-12 판매금액별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 비율(2018)

판매금액	여성 비율(%)
1천만 엔 미만	35.9
1천만 엔~5천만 엔	45.1
5천만 엔~1억 엔	60.9
1억 엔~5억 엔	67.4
5억 엔 이상	67.1
전 체	52.2

주: 일본정책금융공고(농림수산산업본부)가 슈퍼I자금 또는 농업개발자금을 융자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농림수산성(2020.8).

나. 여성의 경영방침 결정 참여

○ 여성이 농가의 일원으로 있더라도 여성이 경영주의 지위를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영방침 결정에 참여하는 비중은 전체 농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 경영자가 남성인 경우가 93.3%인 반면에, 여성인 경우는 6.7%에 불과함.
- 경영자 이외에 남녀 공동으로 관여하는 경우(7.3%), 배우자로서 여자만이 관여하는 경우(33.1%)를 합하면 실제 판매농가 중에서 여성이 경영방침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47.1% 정도임.

표 3-13 여성의 경영방침 결정에 관여 비율

구분	비율(%)
경영자가 남성인 농가	93.3
경영자 이외에 경영방침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있는 농가	44.9
남녀가 관여하는 농가①	7.3
남성만이 관여하는 농가	4.5
여성만이 관여하는 농가②	33.1
경영자 이외에 경영방침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없는 농가	48.4
경영자가 여성인 농가③	6.7
여성인 경영방침 결정에 관여하는 농가(①+②+③)	47.1

주: 2015년 농림업센서스에서 경영개선계획 작성 시 의견을 개진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농림수산성(2020.8)

다. 인정농업자

- 시정촌 단계에서 지역의 육성대상 농가를 지정하고, 이들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정책 자금이나 경영지도를 집중하는 ‘인정농업자제도’가 있는데, 희망자는 5년간의 경영방침(농업경영개선계획)을 결정하여 시정촌에 신청하면 시정촌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함.
- 인정농업자 신청을 여성 단독이나 남녀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2018년 현재 여성 단독 신청이 5,821 농가, 남녀공동 신청이 5,572 농가, 합계 11,493 농가임.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 인정농업자의 4.8%에 불과하며, 지역농업의 후계자로서 비중은 낮은 편임.

라. 여성 창업자

- 지역농업이나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특산물 가공이나 직판장 운영 등의 창업 중에서 여성 창업자 수는 2016년 9,497명임. 2005년 이후 거의 정체하는 경향
- 최근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는 등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 판매금액면에서 보면, 300만 엔 미만의 영세한 경영이 전체의 약 절반(47.2%)을 차지하고 있음.

2.2.3. 여성의 취농 장애요인

- 농업 분야에서 여성 참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배경에는 취업률이 증가하는 의료·간병 분야 등과 같은 타산업과 경합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
- 신규취업이나 노동력 확보를 둘러싸고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경합하지만, 농촌 지역 내부에서도 산업 간 경합하는 현상이 있음. 즉 농촌지역에서는 의료·복지분야로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식·숙박업을 제외하고는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취업자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
- 여성 신규취농의 장애요인은 가사·육아·간병 부담이나 기술부족임.
- 전국농업회의소의 ‘신규취농자의 취농실태에 관한 조사결과’(2017.3)에 의하면, 여성 농업인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음(농림수산성. 2020.6).
 - 생활면에서는 ① 건강상의 불안(힘든 노동), ② 휴가가 없음, ③ 어린이 교육
 - 경영면에서는 ① 소득이 적음, ② 기술 미숙련, ③ 재배계획·준비가 잘 되지 않음, 순으로 회답이 높음. 여성농업인에게 자세한 기술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또 다른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① 여가시간이 부족하다, ② 임신 중에도 쉴 수 없다, ③ 어린이가 아플 때 맡아줄 사람이나 장소가 없다는 고민이 많음(농림수산성. 2019.8).
- 여성이 일하기 쉽고, 생활하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사·육아·간병과 농업 종사를 가정 내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식 개혁이 요구됨.
 - 업무와 가사, 육아, 간병 등의 역할 분담을 비롯하여, 보수, 휴일 등에 대해서 가족이 합의하여 명확하게 하는 활동으로 ‘가족경영협정’ 체결은 의식개혁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농림수산성. 2020.6).

2.3.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2.3.1. 대책의 개요

- 여성의 활약을 통하여 수익을 향상하기 위해, ①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여성농업경영인 육성, ② 여성에 의한 사업 활용 등을 촉진하여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

2.3.2. 정책 목표

- 여성농업인의 도전이나 활약을 촉진하여 여성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2.3.3. 사업의 종류

- 여성농업인의 활약 추진 지원
 - (여성이 변화하는 미래농업 추진사업)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여성농업경영인 육성 및 육아세대의 여성농업인을 서포트 하는 ‘지역네트워크 만들기’ 지원
 - 다양한 후계자 육성사업(임업 분야)
 - 어촌여성 활약 추진사업
- 여성농업인에 대한 공모사업 배려(점수 가산, 요건 완화)
 - (강력한 농업·후계자 만들기 종합지원 교부금 등) 산지의 수익력 강화와 후계자의 경영발전을 위하여 산지·후계자의 발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농업용 기계와 시설의 도입’을 지원함.
 - (다원적기능 직불제 교부금) 다원적 기능 직불제 중에서, ‘지역 공동으로 실시하는 활동’이나 ‘지역자원(농지, 수로, 농도 등)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함.

○ 여성의 활약 추진에 기여하는 환경 정비

- (6차산업화 추진) 농림어업인과 다양한 사업자가 연계해서 행하는 ‘신상품 개발이나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
- (지속적인 생산강화대책사업 중 농작업안전종합대책추진사업) 농작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안전의식을 높이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함.
- (농산어촌진흥교부금) 농산어촌에서 ‘커뮤니티 기능의 향상’이나 ‘정주 등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함.
- (농(農)의 고용사업) 농업법인 등이 남녀별 화장실이나 샤워장 설치 등 ‘작업하기 쉬운 직장 환경을 정비’, 49세 이하의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천 연수’ 등을 지원함.
- (농지중간관리기구의 규모화 지원사업) 농업위원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나 여성 농업위원의 ‘등용촉진 및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함.
- 어촌 활력재생·성장촉진 교부금 중 수산업강화 지원사업

표 3-14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2020)

지원정책	사업(시책)	비고
(1) 여성농업인 활약 추진	① 여성이 변화하는 미래농업 추진사업 ② 다양한 후계자 육성사업 ③ 어촌여성 활약 추진사업	2020년 신규 임업관련/ 어촌관련
(2) 여성농업인에 대한 공모사업 배려 (가산, 요건완화)	① 강력한 농업·후계자 만들기 종합지원 교부금 등 ② 다원적기능 직불제 교부금	2020년 신규
(3) 여성의 활약 추진에 기여하는 환경 정비	① 6차산업화 추진 ② 지속적인 생산강화대책사업 중 농작업안전종합대책추진사업 ③ 농산어촌진흥교부금 ④ 농(農)의 고용사업 ⑤ 농지중간관리기구의 규모화지원사업 ⑥ 어촌 활력재생·성장촉진 교부금 중 수산업강화 지원사업	2020년 신규 어촌관련

참고 1 여성이 변화하는 미래농업 추진사업

(1) 대책의 개요

- 지역 농업계를 견인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여성농업경영인의 육성을 지원함. 또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원칙에서 여성농업인의 탁아나 농작업 대체를 지역에서 일체적으로 서포트 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이를 통해 여성에게 매력 있는 직업으로서 농업이 선택되는 것을 지향함.

(2) 정책 목표

- 농업법인의 임원에 차지하는 여성 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늘림.

(3) 사업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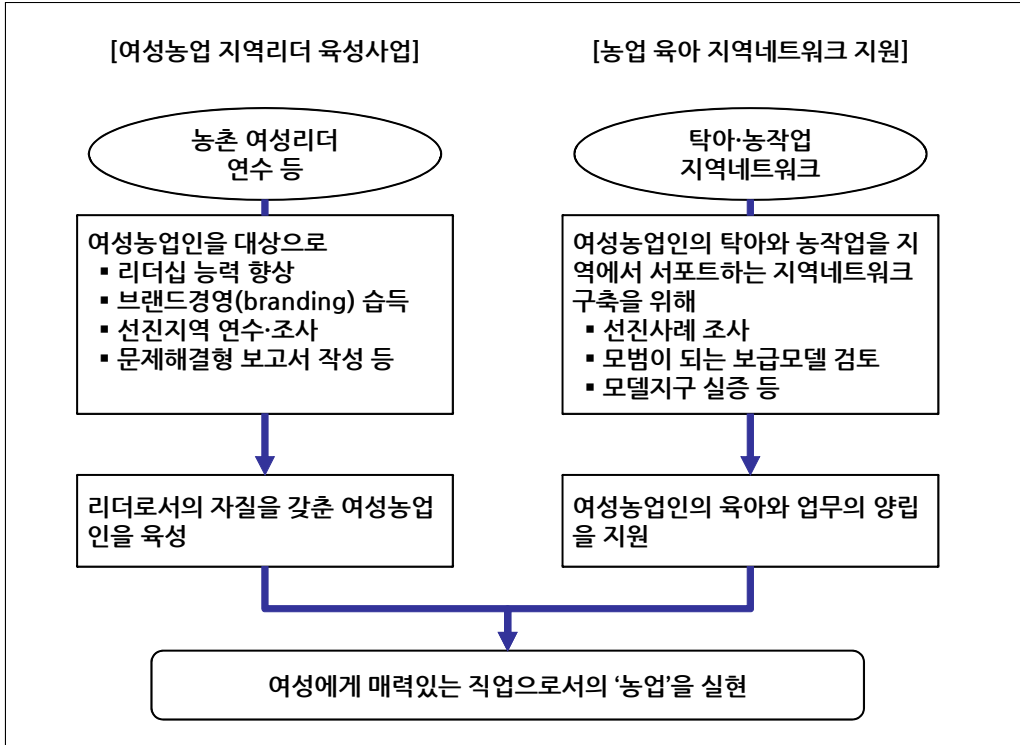
① 여성농업 지역리더 육성지원

- 경영능력 향상이나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계를 견인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여성농업경영인을 육성함.
 - 대상 : 여성농업인
 - 내용 : 농업커뮤니티 활동을 리드하는 노하우(knowhow)와 이를 실천하는 자질(human skill)을 몸에 습득하는 연수이며, 기초연수와 실천연수 등 2개 과정이 있음.
 - 실천연수 : 전국 2개소(도쿄, 오사카), 전체 5회(1회 2일간) 집합 실시
 - 기초연수 : 실천연수의 필수과정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 실시
 - 실시기관 : 여성농업커뮤니티리더숙(塾)¹³⁾
 - 정보발신 : 빛나는 농녀신문(輝く農女新聞)¹⁴⁾

② 농업 육아 지역네트워크 지원

- 젊은 여성농업인과 지역의 여성 등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 원칙에서 여성농업인의 탁아나 농작업 대체를 지역에서 일체적으로 서포트 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아와 업무의 양립을 지원,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함.
 - 내용 : 선진사례 조사, 모범이 되는 보급모델 검토, 모델지구 실증 등을 실시
 - 모델지구 실시주체 : 시정촌, 지역농협 등 관계 단체, 민간단체, 이러한 단체로 구성되는 협의회 등

참고-그림 1 여성이 변화하는 미래농업 추진사업 개요



자료: 농림수산성(<https://nougyoujoshi.maff.go.jp>).

2.4. 여성농업인과 기업과의 협력 활동

2.4.1. '농업여자프로젝트' 추진

- 여성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기업·학교 등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조하고, 관련된 정보를 사회에 널리 발신하는 프로젝트(農業女子PJ)¹⁵⁾

¹³⁾ 자세한 것은 '농업커뮤니티리더숙(塾)' 홈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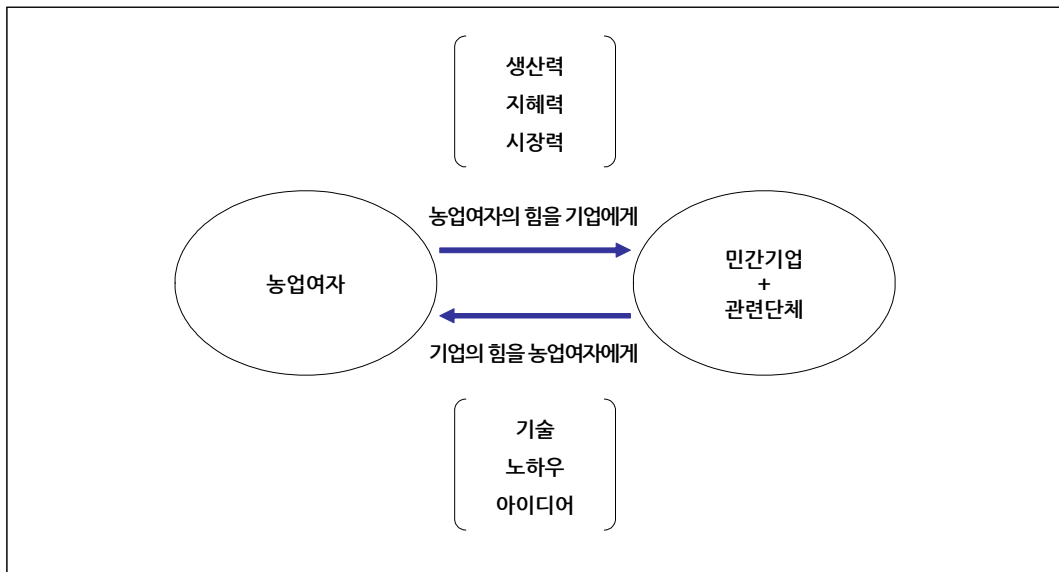
(<http://www.jma.or.jp/kagayaku-nj/news/ikuseijuku/info.html>).

¹⁴⁾ 농업커뮤니티리더숙의 수강생들의 활동을 통하여 차세대 여성농업인의 신선한 정보를 전국에 발신하는 역할을 함. '여성'과 '농업'을 거리를 단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http://www.jma.or.jp/kagayaku-nj/index.html>)

○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 전체에서 여성농업인의 존재감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스스로 의식 개혁과 경영능력 발전을 촉진하고,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젊은 여성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즉 여성농업인이 가진 힘(생산력, 지혜력, 시장력)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가진 힘(기술, 노하우, 아이디어)을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정보를 널리 사회에 발산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정착, 기업과의 비즈니스화, 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임(그림 3-6).

그림 3-6 농업여자프로젝트의 개념도



자료: <https://nougyoujoshi.maff.go.jp>.

○ 2020년 6월 현재 참가 현황

- 농업여자 : 813명
- 참가기업 : 33개 기업
- 교육기관 : 7개 교

¹⁵⁾ <https://nougyoujoshi.maff.go.jp>

2.4.2. '농촌여성의 날' 지정

- 농림수산성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이 중요한 후계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3월 10일을 '농촌여성의 날'로 지정하여 시민·기업과 교류하는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3월 10일로 결정한 것은 농촌여성이 가진 3가지 능력(지혜, 기술, 경험)을 토털(10)로 발휘하기 바란다는 기원이 포함되어 있음.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유럽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노동에 대한 보상, 복지수준 제고를 정책과제로 안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생산자로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거나 여성의 경영참여 정도를 통계 작성에 포함함으로써 여성의 생산자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EU는 무보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유럽과 일본 모두,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농촌정책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책 간 일관성과 여성 정책의 실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됨.

- 예를 들면,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전체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유럽과 일본의 농촌여성이 처한 현실이나 정책 요구는 국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여성농업인의 권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가사·육아·간병 등의 업무 분담에 대한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농작업·식품가공 분야에서의 편의 향상 지원, 여성과 민간기업 간의 상생·협력 활동(농업여자프로젝트 사례)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등이 필요함.

4

제4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

1. 제4차 기본계획 개요

-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을 추진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1항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에서는 정부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천명함.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5조에 의거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세부 추진과제가 수행되었음.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수립·추진되었음.

○ 1차부터 3차까지의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삶의 질 향상이 핵심 키워드였으며 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이 화두로 제시됨.

표 4-1 1~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비교

1차 계획 (2001~2005)		2차 계획 (2006~2010)		3차 계획 (2011~2015)		4차 계획 (2016~2020)	
목표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	비전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목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십 정착	비전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비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추진 전략	4대 추진전략	추진 전략 4대 추진전략	추진 전략 5대 추진전략	추진 전략 5대 추진전략	전략 과제	5대 전략과제	
정책 과제	15개 정책과제	정책 과제 23개 정책과제	정책 과제 17개 정책과제	정책 과제 17개 정책과제	중점 추진 과제	15개 정책과제	
특징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과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중심	특징 귀촌여성, 창업지원, 복지정책 구체화	특징 공동경영인, 문화, 공동취사, 거버넌스 강화	특징 공동경영인, 문화, 공동취사, 거버넌스 강화	특징	양성평등, 성주류화,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11).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표 2-1-1을 저자가 수정.

○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0-2005)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4개 부문, 8개 과제를 추진함.

-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농업인 교육의 체계화가 시도되었으며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 여성우대제도를 도입함.
-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율이나 여성조합원 비율이 높아졌으며 여성농업인센터를 4개소에서 34개소로 확대하였음.
-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재생산을 돕고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함.
- 동 기간 동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며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실제적인 정책수립마련의 기초를 다졌음.

○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6-2010)은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4개 부문, 23개 과제를 추진함.

- 제2차 계획을 통해서 여성이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업인확인서 발급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도 등록할 수 있게 됨.
-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교육, 능력개발교육 및 품목별 영농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이 도입되었음.
-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과 정착을 위한 가족단위 교육을 실시함.
- 도별로 여성농어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마련한 것 또한 성과임.

○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1~2015)은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5개 부문, 17개 과제를 추진함.

- 제3차 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종사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연금에 별도로 가입하게 됨.
- 동 계획 시행기간 동안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26%에서 30.2%로 증가하였으며 농협의 여성조합원 및 여성 임원 비율은 각각 29.7%, 4.0%에서 32.7%, 4.6%로 증가함.
- 소형 농기계 및 기구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 및 멘토제를 추진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하고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여건을 개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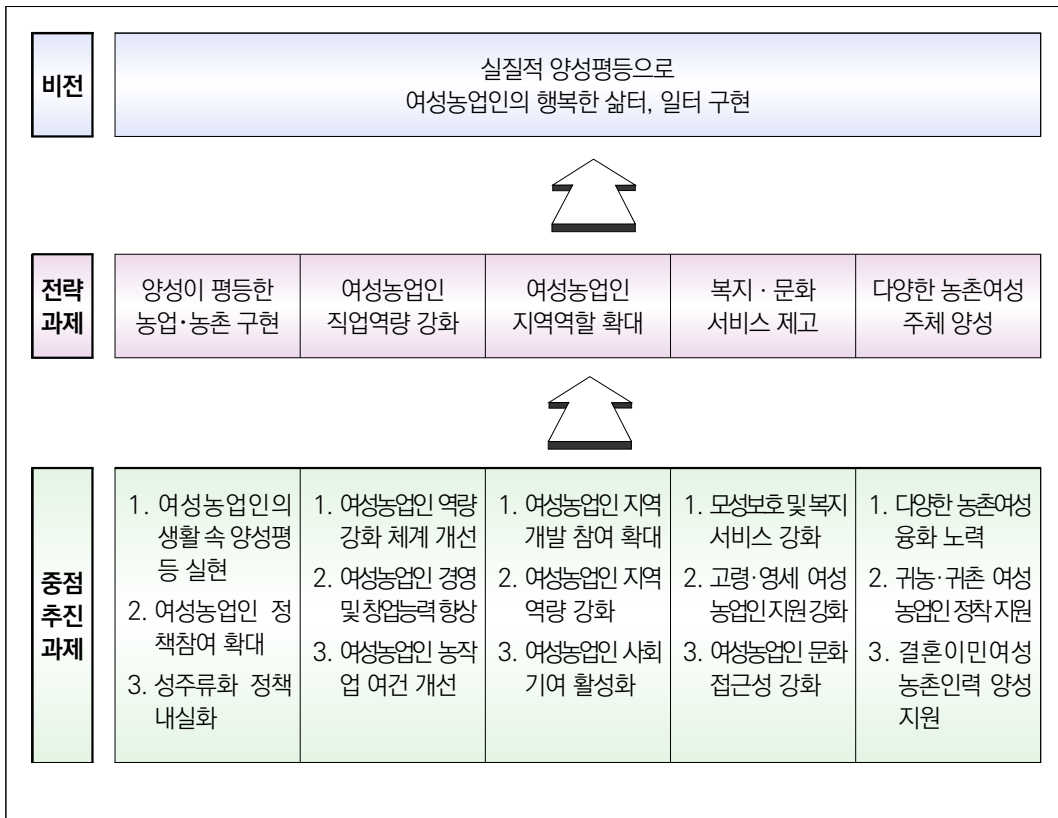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5개 부문, 15개 과제를 추진함.

- 4차 기본계획은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함.

-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농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 측면에서의 지원과 복지 지원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함.
-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 역할과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귀농·귀촌 여성농업인과 결혼이민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인구 구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제4차 기본계획의 전략과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임.

그림 4-1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2. 과제별 성과와 한계

2.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 공동경영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영주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 공동경영주 등록 증가하였으나 등록 대상인 여성농업인 수에 비해 공동경영주 등록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공동경영주는 ('16) 13,362 → ('19) 35,925명으로 증가(연평균 38.5% 증가)
 - 경영주 외 농업인인 배우자 중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은 1.4%에서 4.7%로 확대
- 현장 또는 지자체에서 공동경영주 제도와 공동경영주 등록 시 혜택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됨.¹⁶⁾ 여성농업인 단체 간담회 결과 공동경영주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동경영주의 자격요건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 결과, 전체 여성농업인 중 공동경영주를 포함한 여성경영주의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남성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음.
 - 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 중 경영주 비율은 남성의 경우 87.9%에서 91.9%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여성 경영주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32.4%에서 41.6%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¹⁶⁾ 농축유통신문 “여성농업인 정책 어디까지 왔나” 2020.1.

표 4-2 성별 경영주 비중

단위: %

경영주	2015	2016	2017	2018	2019
남성	87.9	89.0	91.3	91.7	91.9
여성	32.4	34.8	38.2	39.9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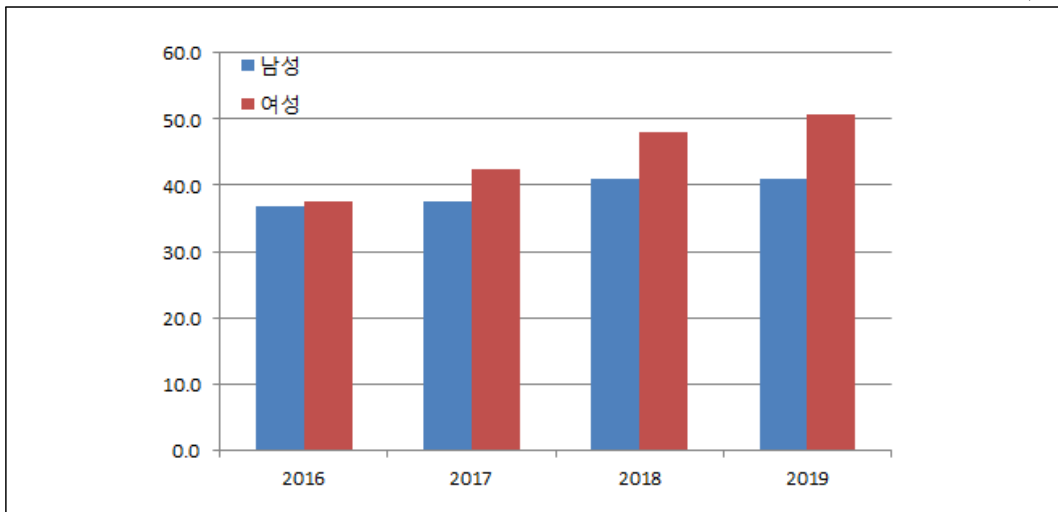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력현황 2020』.

○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7%(2016년)에서 50.7%(2019년)로 증가

- 같은 기간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9%에서 41.1%로 상승하는 데 그침.

그림 4-2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

단위: %



주: 가입률은 만 15세 이상 59세 이하 농가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원자료』, 각 연도. 김남훈 외(2020).

○ 그러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50대의 가입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4·50대 여성 농업인의 가입 감소는 해당 연령이 고령에 이르렀을 때 소득안전망 약화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 생활 속 양성평등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19.11)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선발된 전문강사는 2021년 1월부터 각 분야에서 교육활동 실시

○ 농촌리더 및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실시('17: 5천명, '18: 3,238명)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17: 1,815명, '18: 1,168명)
- 농업인 대상 교육과정 내에 양성평등 교육 확대하고, 여성농업인·다문화 가족 교육 시 양성평등 교육 실시('19: 2,401명)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양성평등 교육이력을 평가하도록 지침에 반영

○ 농촌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업인·다문화 여성 교육 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18: 2,577명)
- 여가부와 협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16회 450여 명)

○ 경영주체로서 여성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가족경영협약 교육을 확대하고 협약 체결('16: 60부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가족경영협약의 인지도가 낮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136명의 승계농을 대상으로 가족경영협약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16.9%의 응답자만 가족경영협약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함(이상호 2019).
-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경영협약제도의 인지도는 6.1%이고, 이용 및 참여도는 0.7%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 지역농협 임원의 여성비율이나 지자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농촌지역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지역농협의 여성조합원 및 여성임원 비율 : ('15) 33.1/5.1% → ('16) 33.4/6.6% → ('19) 32.6/8.4%

- 일부 군 지역의 여성 이·통장 비중은 10% 미만¹⁷⁾

* 예: 곡성군 8.46%, 완도군 5.28%, 장흥군 4.27%(2018년 기준)

□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농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되어 중앙 단위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획과 성과제고 기반이 마련되었음.

- 팀장(1명) 및 6명의 전담인력 배치

- 농촌여성정책팀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농작업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등을 지원함.

○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 확대로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2020년 7월 현재 120개 시·군이며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체 통합 시군의 86.3%에 해당됨.

○ 여성농업인 정책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확보와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¹⁷⁾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 성인지통계 2019』

○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 전담 인력 또는 부서가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중앙-지자체 간 협업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장에서의 정책 요구나 기존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지자체-농촌현장 간의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함. 특히 복지·문화 사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자체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한정된 인력과 자원, 법적 근거 등의 미비로 인해 전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이로 인해 중앙에서 지자체, 현장까지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짐.

○ 또한 농촌현장과 정부 간의 소통을 이루고 정부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여성농업인센터가 수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센터의 관리가 지자체 소관이 되면서 전국 단위의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이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여성농업인센터는 2019년 현재 39개소

○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 여성농업인의 실제 역할과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의 개발 부족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양성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관련된 문항이 부족하고 조사대상이 많지 않아 다양한 계층의 현황과 정책욕구 파악에 한계가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성인지통계가 있으나 전국 단위로 조사되므로 농업·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움.
- 여성연구기관이나 통계청, 농식품부가 생산하는 성별 통계를 종합하고 주요 성별 지표를 선정하여 매년 관련 지표값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통계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마을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서 여성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성별통계가 부족하여 여성의 지역역할에 대한 평가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성별통계를 생산하고 사업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함.

* 예) 여성 마을이장 비중이나 지자체 별 여성농업인 수, 지자체 정책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중, 농촌현장포럼 등 지역개발 사업에서 여성 참여비율 등

○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지가 잘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여성농업인 광장이나 SNS를 정책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정책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와 통계가 개발되면 이를 여성농업인 광장을 통해 알리고 문제의식 공유

○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므로 농협 임원할당제나 지역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강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4-3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의 성과와 한계

과제명	성과	한계
1-1.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및 등록 확대('19: 35,925명) ▪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동경영주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공동경영주 등록의 혜택과 자격요건 정비 필요 ▪ 성평등 교육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으나 사업 초기 단계
1-2.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 광장 개설/운영 ▪ 지역농협 임원의 여성비율 증가('19 8.4%) ▪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중 소폭 증가	▪ 여성농업인 광장 활용도 낮음 ▪ 농촌지역의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중은 전국 평균 미달 ▪ 일부 군 지역의 여성 이·통장 비중 10% 미만 ▪ 농협 조합원 중 여성농업인의 비중 낮음.
1-3. 양성평등 정책 내실화	▪ 공무원 및 농촌리더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양성평등 교육 이력을 평가에 반영 ▪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팀 구성 ▪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 소폭 확대	▪ 양성평등 교육이 공무원대상에 집중되어 있음. 유관기관이나 일반 농업조직에 대한 성인 지 교육 필요 ▪ 지자체 단위의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부족으로 사업 집행과 기획에 한계 존재

2.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체계 개선

○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 리더십, 회계, 농기계 등 96개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과정 개설, 2,802명의 여성농업인 인력을 양성함.
- '20년 현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여성농업인 정책의 이해' 개설, 유통교육원의 '여성 농식품 유통 리더십 양성', 농림수산물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의 '여성 농업인 회계 교육' 등 실시
-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예컨대, 드론, 회계, 재무관리, 온라인 마케팅, 가공기술 등 여성농업인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이 더 많이 개설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활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경지면적 5ha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할 경우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70,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함.
- 대상 교육과정은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임.

○ 정책 대상 여성농업인 비율은 약 45~47%¹⁸⁾ 수준이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비율은 20% 안팎임.

¹⁸⁾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40세 미만 농가인구 중 여성 비율은 45.7%, 20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농업인 비율은 47.2%임.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비율은 '18년 16.3%(260명), '19년 17.3%(279명), '20년 18.9%(302명)으로 20%에 불과함.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비율은 '18년 19.2%(493명), '19년 18.4%(479명), '20년 18.3%(513명)로 20%에 미치지 못함.
-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에는 우선 추천 대상에 여성농업인은 추천인의 20% 범위에서 우선 추천을 하도록 배려하였으나 여성농업인 인구 대비 부족함.

□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 공동가공 시설 설치,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농업기술센터 등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 공동이용 가공 사업장을 '19년 기준 86개소, '20년 현재까지 4개소를 설치함.
-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을 활용한 신규사업장을 '17년 34개소, '18년 32개소, '19년 33개소, '20년 현재까지 33개소 설치

○ 그러나 개인 농가가 식품 관련 규제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나 공동 이용 사업장을 일과 후 저녁에 이용해야 하는 여성농업인의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16년 6종, '17년 4종, '18년 4종, '19년 5종, '20년 5종을 개발하여 총 106종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 이상 구입 의무화하고 구입 시 50% 국고 보조

- '19년 기준으로 97개 시군, 280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19년에 52개 임대사업소 추가)
- 여성친화형 농기계 교육(소형트랙터, 승용관리, 동력이식기 등)을 '19년 554명에게 제공하였고 '20년에는 700명에게 제공 계획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인해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공급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에 따른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농기계 회사의 개발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 여성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밭작물의 수확이나 파종작업 등에 이용하는 농기계 보유율은 여전히 낮음.
- 무동력 소형 농기계보다는 동력을 갖춘 농기계, 농기계 보다는 편의성을 높인 농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됨.
- 농기계 공급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한 사용법 숙지, 임대사업소부터 농지 까지의 운반 등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 최근 여성농업인의 기계, 자동화 설비운전 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함.

○ 농기계뿐만 아니라 편이장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는데 반해 농작업 편이장비의 개발 및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 기술개발 이후 실용화 단계에서 생산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편이장비의 공급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온라인 유통망이나 오프라인 판매처 등 시장 형성이 활발 하지 않아 수요자가 물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움.

표 4-4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추진 성과와 한계

과제명	성과	한계
2-1.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체계 개선	■ 여성농업인 전담교육과정 96개 개설(2,802명 교육 이수) ■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제공 ■ 교육 참여 여성농업인에 영농도우미 지원	■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여성농업인 선발 비율은 20% 안팎에 불과
2-2.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을 위한 공동 이용 가공 사업장 설치	■ 식품 관련 규제 등에 대응할 만한 여건이 부족한 개인 농가가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 부족 ■ 공동 이용 사업장의 접근성 좋지 않음
2-3.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률 낮음 ■ 현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무동력이어서 실제 농작업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함. ■ 대규모 영농작업에 있어 작은 크기의 농기계 필요성 낮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에 따른 적절한 수익 보장이 되지 않아 농기계 회사의 개발이 소극적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 교육 개발 및 교육 과정 부족

2.3.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 지역 단위 정책 개발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검토 시, 사업 추진위원회에 여성농업인 참여 평가(배점 5점)
- 일부 지자체에서 여성 복지센터 설치, 다문화 이주여성의 식음료 판매공간 조성, 여성 특화 건강 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강화

○ 여성농업인이 지자체나 농협을 통해 지역리더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리더 양성 교육이 이루어졌음.

- 마을리더과정 등 7개 교육 여성 참여 확대(여성 373명/총 1,814, 20.6%)
- 농촌지역개발리더교육의 여성 수료생 비율: ('18) 26% → ('20) 30% 목표
- 여성농업인 농협 리더 양성('18: 12회, 381명) 교육
- 사무장 및 신규지구 추진위원 교육 여성수료자 비율: ('18) 26% → ('19) 27

○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임.

- 리더쉽 교육 수료자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남성으로 구성, 농가인구 중 여성 비율에 미치지 못함.
- 여성농업인 내부적으로 리더쉽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 사회기여 활성화

○ 여성농업인 단체가 지역활동에 참여하거나 각종 마을 단위 사업에서 여성의 참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여성농업인 단체의 농촌재능나눔활동 참여
- 농촌 현장포럼¹⁹⁾ 추진 실적 : ('18 누계) 3,190개 마을 → ('19 누계) 3,716
- 2016~2019년 기간 동안 제3회~제7회 행복마을(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실시

¹⁹⁾ 농촌현장포럼은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농촌마을의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마을의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임. 전문가에 의해 갈등관리·계획·제도·환경·예술·문화강의와 정책 설명 등의 교육이 이루어짐(농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촌현장포럼 표준교재』).

○ 그러나 마을 사업참여 실적이나 재능나눔활동 실적이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여부나 정도를 나타내는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 연도별 시행계획에서는 성과와 과제로서 해당 지역개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각 사업의 추진과정이나 평가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예를 들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여한 마을에서 여성농업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근거가 없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의 정책수단이 부재함.

○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참여 부족이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인정하는 체계가 없다는 것으로 문제의식의 변화가 필요함.

- 마을 내 사회경제적 활동이나 마을개발 사업에서 돌봄 서비스, 가사노동 등을 제공하여 왔으나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남아 있어 여성의 기여분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이나 마을 환경미화 등 마을 관련 활동에서 여성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수단이 부재하여 여성농업인의 활동이 비공식적인 노동에 머무르고 있음.

표 4-5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과제명	성과	한계
3-1.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 지역개발사업 신규 사업 검토 시 여성농업인 참여 가점 부여 - 일부 지자체에서 여성복지센터 설치, 다문화 이주여성의 식음료 판매공간 조성	지역개발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환류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재하여 여성농업인의 기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
3-2. 여성농업인 지역역량 강화	마을 리더과정 등 리더십 교육에서 여성 참여율 소폭 상승	여성농업인 수에 비해 리더 숫자 부족
3-3. 여성농업인 사회기여 활성화	- 여성농업인 단체의 농촌재능나눔활동 참여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여성농업인의 사회기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회기여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이 문제

2.4.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을 돕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 및 고용부 출산급여 혜택 확대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포함
- 90일 범위에서 도우미 1일 기준 단가 4~7만 원(지자체별로 상이, 자부담 0~20% 적용)을 지원함.
- 고용부 출산급여 수혜대상에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도 추가하여 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

○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 시설 확대

- '20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847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42개소, 이동식놀이교실 7개소, 농번기 주말 돌봄방 25개소를 운영

○ 현 보육서비스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보육시설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음.

○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보육서비스의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 내 보육은 마을 내 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확대

- 농업안전보건센터가 '농촌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인 직업성 질환 예방교육, 식생활 교육, 건강체조, 무료 건강검진 등 진행
- 행복 버스²⁰⁾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농업인에게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19 기준 77회, 수혜 인원 17,282명)

표 4-6 농업인 행복버스 실적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의료지원	양방	43	9,980	45	9,612	37	7,472
	한방	35	8,203	38	9,180	40	9,810
	소계	78	18,183	83	18,792	77	17,282
장수사진촬영		86	13,999	67	9,754	62	9,876
검안돌보기 지원				41	9,343	65	16,188
합계		86	32,182	87	37,889	83	43,346

자료: (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http://ifarmlove.nonghyup.com/user/indexMain.do?siteId=ifarmlove>).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였음.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과 연계,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역할 강화, 농업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용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였음.

○ 그러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음.

○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나 고령 취약가구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전체 농업인구에 비해서는 수혜자 규모가 적음.

- 영농도우미 지원은 2018년 15,911가구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행복나눔이는 2018년에 24,693호에 지원됨.

²⁰⁾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4-7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사업 실적

단위: 호, 백만 원

구분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3	15,000	6,300	15,605	6,231	10,000	840	12,053	764
'14	16,000	6,720	15,118	6,061	10,000	840	12,285	821
'15	17,000	7,140	14,577	5,879	15,000	1,449	13,613	1,274
'16	17,000	7,140	14,746	5,963	15,000	1,449	13,303	1,306
'17	17,000	7,140	15,844	6,387	15,000	1,449	14,440	1,449
'18	15,000	7,252	15,911	7,252	14,000	1,337	24,693	1,337

자료: 농식품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 여성농업인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바우처 지원

- 농식품부가 '18년에 행복바우처 지원 상한 연령을 20~75세, 지원 금액을 연간 20만 원 이상으로 하는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함.

○ 행복바우처 사업과 같은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 특성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 부담 금액, 지급 방식, 대상 연령, 사용처 등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행복바우처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 확대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문화생활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이 증가하였음.

- 2018년 실태조사 결과, 전시회나 음악회 등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33.0%로서 2013년의 28.0%에 비해 높음.

- 행복바우처나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가사 및 영농부담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한계가 있음.

표 4-8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추진 성과와 한계

과제명	성과	한계
4-1.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농어촌 보육 시설 운영 -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 확대 -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의 출산급여 수혜	- 보육서비스가 읍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마을 단위 여성농업인 수혜 어려움. - 보육 뿐만 아니라 교육 수요에 대응한 지원책 필요
4-2. 고령·영세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실시 - 행복버스 운영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수혜가구 소폭 증가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을 위한 예산당 국과의 협의 필요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의 인지도가 낮음. - 대규모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제한
4-3.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 행복바우처 사업 실시 -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확대	- 지자체 간 행복바우처 사업내용 격차 -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부담으로 인해 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부족

2.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 귀농·귀촌센터에서 예비 여성농업인 특화과정('20년 65명), 예비 여성귀농인을 위한 기초소양교육('18년 60명, '19년 120명, '20년 30명) 등 여성 대상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함.
- '19년도 귀농닥터를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 수혜자 중에서 여성 농업인의 비율은 39.9%이며 '20년에는 43%까지 확대할 예정임.
- '18년 기준으로 귀농·귀촌인 교육에서 전체 수료자의 31.7%인 2,911명이 여성임.

- 최근 귀농·귀촌 인구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도시민의 귀농·귀촌 결정에 여성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귀농·귀촌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귀농·귀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귀농·귀촌 여성들이 기존 농촌여성과의 융화가 쉽지 않아 집단 간 오해와 반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함.

- 귀농·귀촌 여성과 기존 농업인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할 프로그램 확대 필요

□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지역 정책을 위한 문화 및 생활 교육을 지원함.

- 지역농협에서 실시하는 기초농업교육으로 '17년에서 '19년까지 각각 800명, 1:1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각각 700명의 교육을 지원함.
- 농촌정착을 도와줄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를 도입하여 '18년 500명, '19 673명을 지원함.
-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자녀 이해증진 교육으로 '17년부터 '19년까지 각각 140명, 농촌주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현장교육으로 각각 840명의 교육을 지원함.

○ 그러나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며 다문화 여성의 외부 활동 참여가 일부 영역에 한정됨.

- 농민단체나 영농 관련 경제활동,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회의나 행사 등 사회경제적 성격을 띤 지역사회활동은 참여도가 낮고 문화행사나 다문화 가족 관련 모임에 주로 참여하고 있음(박대식 외, 2019).

○ 결혼이민여성의 지역 참여가 문화행사나 다문화 가족 관련 모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이 경제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6차 산업 관련 취·창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 노력

-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시행함.
 - 농촌사회에서 농촌 노인의 경험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산적 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 8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함.
- 고령 여성농업인이 소유한 경험과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노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정책욕구 파악하였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일반농업인과 귀농여성농업인, 다문화여성으로 다변화하여 다양한 계층에 대해 조사를 하였음.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2015년 농업총조사에서 파악된 가구 중 동 지역으로만 구성된 시·군과 울릉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500개의 일반 가구를 광역시도의 농가 수 비례로 층화 표본 추출하였음.
 - 또한 다문화 여성과 귀농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 252가구, 귀농여성은 267명을 별도로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의 구성에 있어서 다문화 가구나 귀농여성의 표본이 과대 추출된 점과 일반가구 추출 시 동 지역을 제외하였다는 것은 표본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시·군별 농가수 비례 할당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같은 표본조사인 농가경제조사가 시·군·구, 읍·면·동, 광역조사구 순으로 층화집락계통추출법을 적용한 것과 비교하여 지역의 대표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음.
- 2018년 조사는 2013년 실태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수가 감소하였는데 표본의 왜곡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양성평등 지표와 관련된 조사문항이 없어 양성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예를 들면, 국가성평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 비 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률, 건강검진 수검률,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여가시간, 성별정보화격차 등 다양한 정보가 지표로서 활용되는데 지표 산출을 위한 정보가 실태조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4-9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추진 성과와 한계

과제명	성과	한계
5-1.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귀농·귀촌 컨설팅 수혜자 중 여성농업인 비율 39.9% ■ 귀농·귀촌인 교육 수료자의 31.7%가 여성	■ 귀농·귀촌 여성과 기존 농업인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할 프로그램 확대 필요
5-2.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 결혼이민여성 대상 농업교육 실시 ■ 다문화여성 일대일 후견인제 실시('18: 500명) ■ 다문화자녀 이해증진 교육, 농촌주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현장교육 실시	■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며 다문화 여성의 외부 활동 참여가 일부 영역에 한정 ■ 결혼이민여성의 지역 참여가 문화행사나 다문화 가족 관련 모임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 회의나 행사 등 사회경제적 모임으로 참여 범위 확대 필요
5-3.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사업 시행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 고령 여성농업인의 고유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세대 간 역할 배분 필요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본수 감소로 인해 대표성 확보에 한계 존재

5

제5차 기본계획 수립 방안

1. 제5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1.1. 기존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문제의식과 정책방향을 계승하되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가능한 전략 구축

- 4차 기본계획의 틀을 이어받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되 정책의 구체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
- 4차 기본계획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총 5개 전략과제, 15개 중점추진과제가 제시되었음.
 - 4차 기본계획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농식품부 내 여성 전담인력 확충,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확대, 여성농업인 특화건강검진 도입 추진, 양성평등 교육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문화원과의 업무 제휴 등 양성평등 제고 면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음.
 - 또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을 의무화하고 출산급여 지급,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과제가 추진되었음.

- 그러나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 홍보 부족으로 정책 인지도가 낮거나,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여 여성농업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이 미비한 점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²¹⁾
- 또한 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시도되었던 사업들 중 일부는 초기 단계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머무르고 있어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 이에 5차 기본계획에서는 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추진되었던 주요 사업들을 연결하여 추진하되 한 단계 진전된 형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다시 말하면, 기존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과제들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소 강조되지 않았던 분야를 발굴하여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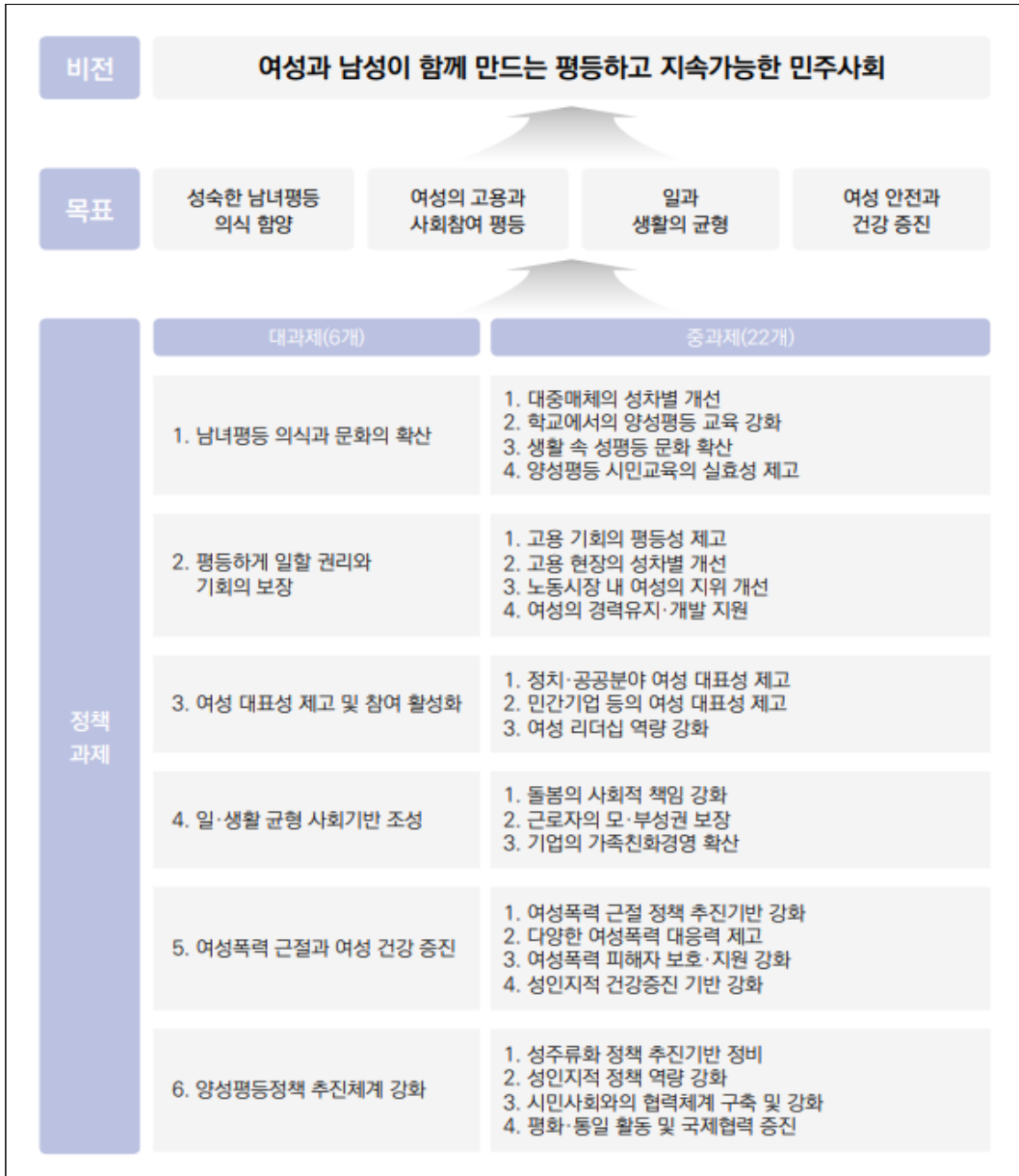
1.2. 국가 전체 양성평등정책과 기존 농업·농촌 정책과의 합치성 및 일관성 고려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목표들을 반영하여 작성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남녀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경제활동 측면에서 양성평등 제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기반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건강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대과제로 선정하였음.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과제는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의 세세부 과제인 농업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와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임.
-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 중 일부는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에서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포함되었음. 예를 들면,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과제와 연결됨.

²¹⁾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는 항목별로 6.1%~39.4%로 나타났다.

그림 5-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자료: 여성가족부,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3. 농업·농촌 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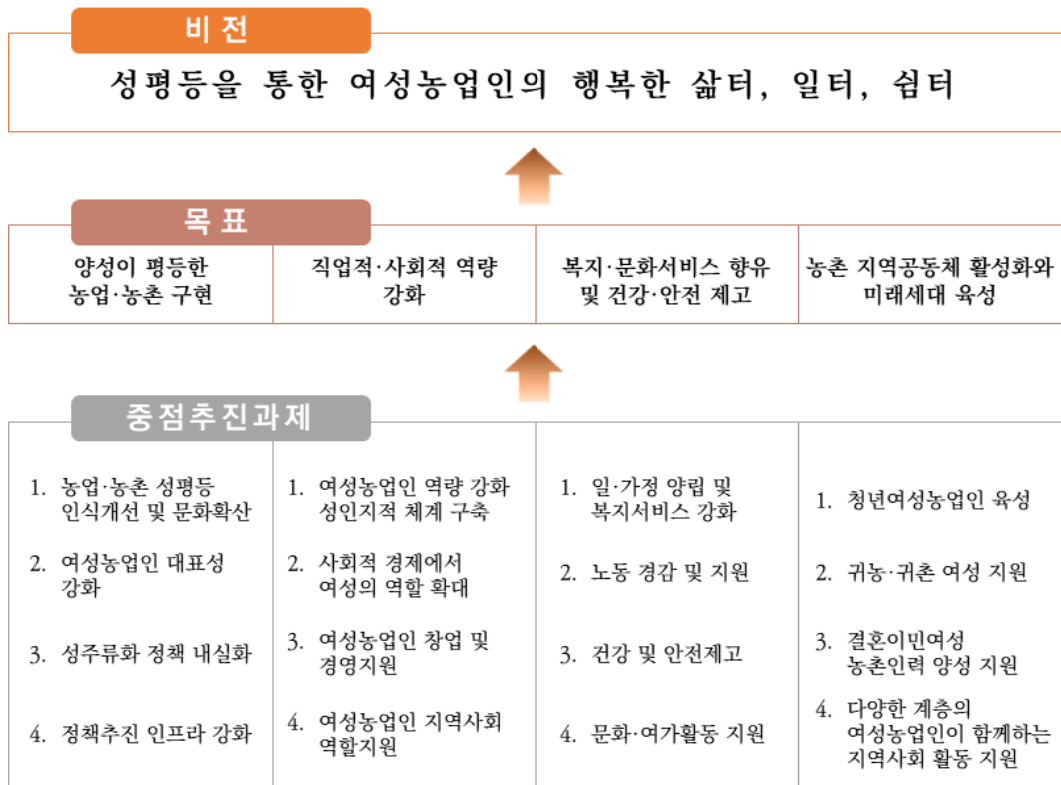
- 정부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농업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농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공동체 복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사회생활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지원함(농식품부 업무보고자료 2020.2.11.).
- 정부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기치로 내걸고 후계인력 육성을 중요추진과제로 제시함(농식품부 업무보고자료 2020.2.11).
 -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농지, 교육 등을 종합지원하며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체계화함.
-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정책방향은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것을 중요한 지향점으로 제시함.
- 또한 미래세대의 육성에 있어서 청년층과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자원으로서 결혼이민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함.

2. 5차 기본계획 개요

○ 1개 비전-4개 목표-16개 중점추진과제의 체계로 구성

○ 5차 기본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라는 비전으로 요약됨.

- 성평등한 농업농촌의 실현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와 권익 향상, 농촌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갖는 사회로 전환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행복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 4차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쉼터’가 비전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이 여성의 재생산의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드러내고 있음.



3. 목표별 추진과제

목표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중점추진과제 1-1.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의 영농참여, 가사활동, 육아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 스스로 인식하는 상대적 지위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의 지위가 예전보다 높지만 아직 남성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2.2%이며,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8.9%로서, 여성의 지위가 열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1.1%로서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농업인은 스스로의 지위를 낮게 평가함.
- 이에 직업적·사회적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시급한 과제로서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 세 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었음.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문화가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 정책의 필요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교육의 대상은 성별과 세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농촌의 성불평등 현실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강사의 현장 이해도를 높여야 함.

- 농가 내 가족 간 경영협약을 통해 가족원의 직업적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하는 작업 속에서 양성평등의 관점과 이를 가족 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세부추진과제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농업·농촌 교육 내 양성평등 강좌 확대) 농정원, 농촌지도사업, 농촌지역개발, 농협 등의 각종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내용 확대
- 가족공동경영협약 홍보 및 활성화
- 농업·농촌 정책사업 추진 시 대상자 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농촌형 성평등 강사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성평등 강사를 육성하여 농촌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효과적으로 대응
- 농촌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컨텐츠 개발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농업·농촌 교육 내 양성평등 강좌 확대	농식품부, 농협, 농정원						●		
- 가족공동경영협약 홍보 및 활성화	농식품부, 농진청						●		
- 농업·농촌 정책사업 추진 시 대상자 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농식품부, 농진청						●		
○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농촌형 성평등 강사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농식품부						●		
- 농촌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컨텐츠 개발	농식품부						●		

중점추진과제 1-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정부 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의 경우 현재 24개 정부 위원회 중 위원이 위촉된 21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44.7%(’19 현재).

- 여성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의 성인지적 감수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계획과 평가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

○ 대표적 생산자 조직인 농협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는 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임. 그러나 농협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전체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중은 31.4%에 머물고 있으며 대의원, 이사로 지위가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감소함. 특히 40세 이하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은 4.6%에 불과하여 청년농 사이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낮음.

표 5-1 농협 내 여성 참여 비율

단위: 개, %

조합유형	조합수	여성조합원 비중	여성 대의원 비중		여성이사 비중
				40세 이하	
지역농협	923	34.5	21.1	4.5	13.1
지역축협	116	16.9	12.5	3.7	3
품목농협	45	14.4	11.5	5.9	3.4
품목축협	23	14.2	11.4	12	3.2
전체	1,107	31.4	19.6	4.6	11.4

자료: 농협중앙회, 2018년 농축협경영계수요람(김미복 외(2019)에서 재인용).

○ 여성조합원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이 적지 않고, 농협 이용 증빙이 쉽지 않아 여성농업인의 조합 참여가 저조하며 농협 내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여성조합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이 농협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할당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부부가 동일 경영체 내에서 공동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했으나, 그 같은 제도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음.
- 또한 농협법 제45조 8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임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45조 8항에는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은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명시됨.
- 부부가 모두 조합원이 될 때 출자금을 감면하거나, 임원 선출 등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농협 이용 실적을 평가할 때 농가 전체의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함.
- 한편, 제도개선 만으로는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는 데 한계가 있음. 리더로서 역량을 갖추고 생산자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조합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 여성이 농업 분야에서 대표성을 갖기 위한 기초적인 근거는 경영주 지위와 영농경력임.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우 경영체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 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 경영체 미분리 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에 도입되었으나 공동경영주 제도에 대하여 농업인, 농업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등록자 수가 미미함.
- 공동경영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동경영주 등록자를 확대시킬 정책 인센티브를 발굴·확대해야 함.

□ 세부추진과제

○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 정부 위원회 내 여성 비율 40%대 유지
- 정부, 여성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 농협의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여성조합원 가입 확대) 경영분리 없이 부부조합원 가입 허용 등 여성농업인 조합 가입 관련 제도 개선 권고
- (농협 여성임원 비율 확대) 농협법 제45조 8항의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준수 권고
- 임원 및 여성농업인 리더십 향상 교육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 및 내실화

- (정책사업 시행지침 개정) 공동경영주를 정책사업 대상자에 포함
- 공동경영주 제도 홍보 및 등록 활성화
- 법적 지위와 연계된 정책 인센티브 확대

○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 정비

- (농업·농촌 관련 법령 정비)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육성법, 농지법, 농협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 (공동경영주의 권한과 자격요건 정비) 실경작자가 공동경영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자격 명문화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 정부 위원회 내 여성비율 40%대 유지	농식품부, 농협						●		
- 정부, 여성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농식품부, 농협, 농정원							●	
○ 농협의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여성조합원 가입 확대	농식품부, 농협						●		
- 농협 여성임원 비율 확대	농식품부, 농협						●		
- 임원 및 여성농업인 리더십 향상 교육	농식품부, 농협						●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 및 내실화									
- 정책사업 시행지침 개정	농식품부								●
- 공동경영주 제도 홍보 및 등록 활성화	농식품부, 품관원						●		
- 법적 지위와 연계된 정책 인센티브 확대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 정비									
- 농업·농촌 관련 법령 정비	농식품부							●	
- 공동경영주의 권한과 자격요건 정비	농식품부							●	

중점추진과제 1-3.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 배경 및 필요성

○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임.

-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 계획,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집행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성별영향평가는 매년 전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농식품부와 농진청

은 2019년에 79개 법령, 17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함.

- 이와 함께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이루어지는데 농식품부 사업은 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2건에 대해 이루어졌음(농촌종합개발 ODA 사업(2016),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정책(2017)).
-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환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표 5-2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중앙 부처)

단위: 개

연도	법령		사업		계획	
	전체	농식품 분야	전체	농식품 분야	전체	농식품 분야
2016	1,929	59	113	12	24	4
2017	1,513	72	104	13	29	1
2018	1,715	42	152	10		
2019	1,762	79	159	17		

주: 농식품부와 농진청 실적을 합하였음.

자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각 연도.

○ 성인지적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서 성별통계와 지표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임.

- 정부는 5년마다 여성농업인의 가구현황, 농업현황, 복지, 정책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2003년부터 실시하였음.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제외한 다른 통계자료에서는 성별통계가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단순히 성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농업·농촌 정책 영역 전 부분의 성별 분포를 파악하기 어려움.

- 특히 여성농업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성인지적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통계 생산 및 활용이 필요함.
- 생활·경제·사회 면에서 양성평등 실현 정도와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나 통계가 부족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지표 개발과 통계 및 사업자료 구축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와 함께 성주류화의 주요 수단으로서 성인지 예산이 있음.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성별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대한민국 정부 2016).
- 성인지 예산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거나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 최근 5년 간 농식품부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과 관련 예산은 <표 5-3>과 같음.
 - 대상 사업수는 2016년에 14개이며 관련 예산은 3,097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사업 수가 13개로 감소한 반면 예산은 4,138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성인지 예산서는 각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사업 대상과 수혜 대상, 예산, 성과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 평가와 평가에 따른 사업 개선의 노력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성인지 예산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단순 여성 참여율만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이 불분명하거나 여성농업인과의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음.
 - 또한 최근 2년간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었음.

표 5-3 농식품부 성인지 예산 사업 및 예산

연도	사업명	갯수/예산
2016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농기계임대, 농업경영체등록,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 건전한식생활확산,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영농도우미지원, 가사도우미지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무장활동비지원),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업기반정비(제주)(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전통발효식품육성	14개 3,097억 원
2017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농기계임대, 농업농촌교육훈련, 농업경영체등록, 건전한식생활확산, 청년농산업창업지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영농도우미지원, 행복나눔이지원,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업기반정비(제주)(농업경영컨설팅, 농업농촌교육훈련),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식품유통교육훈련	18개 3,592억 원
2018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협업지원, 농기계임대, 농업농촌교육훈련, 농업경영체등록, 건전한식생활확산,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영농도우미지원, 행복나눔이지원, 활기찬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농촌체험마을사무장활동비지원, 농산물안전성조사, 농업기반정비(제주)(농업경영컨설팅, 농업농촌교육훈련),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식품유통교육훈련	19개 3,619억 원
2019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농기계임대, 농업농촌교육훈련,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귀농·귀촌교육,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영농도우미지원, 행복나눔이지원, 농업기반정비(제주)(농업경영컨설팅, 농업농촌교육훈련),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식품유통교육훈련	11개 3,595억 원
2020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농기계임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귀농·귀촌교육,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농식품모태펀드출자, 전통발효식품육성, 농식품유통교육훈련	13개 4,138억 원

주: 1) 사업수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개수되었음.

2) 회계·기금 사업을 통합함.

자료: 대한민국 정부, 『성인지 예산』 각 연도.

□ 세부추진과제

○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 정책 환류 평가 강화) 성별영향평가 정책 환류 관련 협의 강화,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확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성 강화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 성별통계 생산

- 성별농업통계 발행

○ 성평등 지표 개발 및 보급

- (성평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성평등 지표 개발과 보급을 통해 여성농업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확산, 정책사업 보고 시 성별통계를 포함.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개선) 양성평등 지표를 반영한 조사항목 설계, 설문조사 표본 확대, 청년·귀농·귀촌·결혼이민여성 등 다양한 집단의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실시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 정책 환류 평가 강화	농식품부, 여가부						●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농식품부							●	
○ 성별통계 생산									
- 성별농업통계 발행	농식품부								●
○ 성평등 지표 개발 및 보급									
- 성평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개선	농식품부							●	

중점추진과제 1-4.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 정책이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여 집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함.
 - 이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여성농업인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고 여성농업인센터의 확충과 역할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행과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타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도에서는 과의 계 단위로 여성팀을 운영하고 있음.
 - 충남, 전남, 제주에서는 여성팀을 신설하였으며 강원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여성팀을 신설할 계획임.
- 인력 확충과 여성농업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지자체는 2020년 7월 현재 120개 시·군이며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체 통합 시군의 86.3%에 해당됨.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례가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의 확보나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표 5-4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사도	통합시·군 수* (전체시·군 수)	조례 제정 수	해당 시·군(제정연도)
부산	1(16)	-	
대구	1(8)	1	달성(20.7)
인천	2(10)	1	강화군(17)
광주	1(4)	4	광주광역시(17), 광산군(18), 서구(19), 북구(19)
울산	1(5)	3	동구, 북구, 울주군(17)
세종	1(1)	1	세종시
경기	15(31)	9	경기도, 안성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연천군(17), 평택시(17), 여주시(18)
강원	15(18)	13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양양군,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속초시, 횡성군(17), 철원군(17), 화천군(18), 평창군(19)
충북	11(11)	12	충북도, 청주시, 음성군,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17), 충주시(18)
충남	15(15)	16	충남도, 공주시,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천안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보령시, 계룡시(17), 금산군(17), 태안군(17), 당진시(19)
전북	13(14)	10	전북도,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20.7), 진안군(20.8)
전남	21(22)	23	전남도,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강진군, 곡성군, 장흥군, 무안군, 진도군, 보성군, 신안군, 해남군, 구례군(17), 함평군(17), 화순군(17), 장성군(17), 영암군(17), 목포시(17), 고흥군(17), 여수시(18), 완도군(18)
경북	23(23)	16	경북도,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울진군, 성주군, 칠곡군, 청송군, 봉화군, 의성군(17), 영양군(17), 포항시(18), 영덕군(18), 예천군(18), 김천시(18), 경주(19)
경남	18(18)	10	경남도, 진주시, 거창군, 함안군, 합천군, 밀양시, 남해군, 사천시(17), 산청군(18), 의령군(19)
제주	1(1)	1	제주도
합계	139	120	-

주: 통합시·군은 도농복합도시 및 군지역을 의미함.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 세부추진과제

○ 지자체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정비 유도)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 유도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여성농업인 정책 시행에 관해 정기적으로 점진 평가하며,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육성)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는 농기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재해예방 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하도록 육성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확대) 여성농업인센터가 보육·취미·교양 교육서비스 제공 등 기존 활동영역에서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역할을 확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센터 개소수 확충 및 지원기능 강화
-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력강화) 여성농업인의 성평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가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업 관련 협의 진행, 사업 개선사항 건의
- (홈페이지·SNS를 통한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확대) 여성농업인 홈페이지 및 다양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활용한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확대

참고 2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확대

- (현황)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취미·교양강좌 운영,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 총 39개소(2019년 6월 기준)
- (문제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사업인식도가 낮아 센터 수 증가 없음
- (개선과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 여성농업인 정책 문의, 영농기술 등의 영농 고충 상담 등 기본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사업 실행 과정에 참여, 여성농업인 정책 사업을 여성농업인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에 위탁·시행토록 유도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지자체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정비 유도	농식품부, 지자체						●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농식품부, 지자체							●	
○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육성	농식품부, 지자체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		
-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농식품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		
- 홈페이지·SNS를 통한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확대	농식품부						●		

목표 2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중점추진과제 2-1.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성인지적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44.3%가 농업인 대상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희망하는 교육’과 ‘경험한 교육’ 사이에 괴리가 있음.

- ‘취미/여가/교양’ 교육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비율은 30.3%이지만 교육 희망 응답은 19.8%로 낮음.
- 학습 욕구에 비해 참여 경험 비율이 낮은 교육 내용은 ‘농산물 가공기술’, ‘농산물 마케팅’, ‘농촌관광’, ‘부업 및 자격증 취득’ 등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분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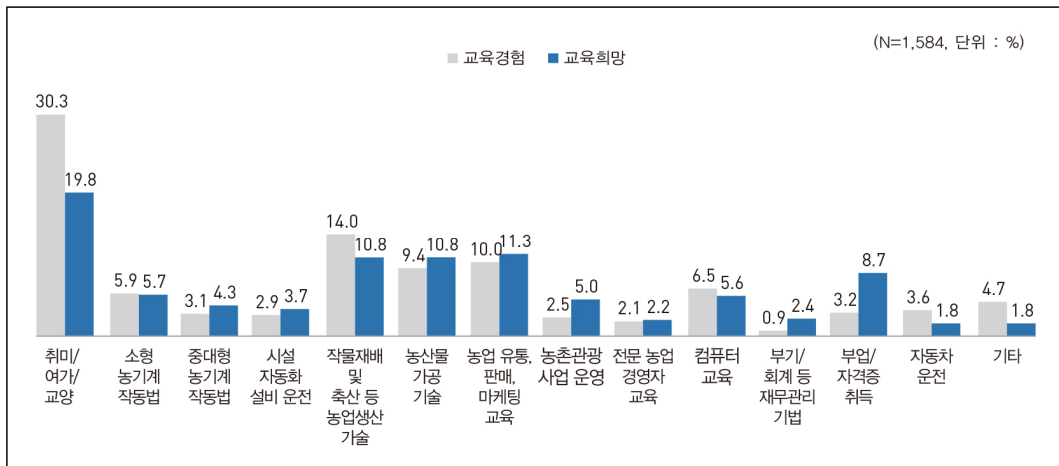
○ 기존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에 따라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과 준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의 비율은 낮음.

- 2020년 현재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중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에는 12개의

농업인 대상 교육 관련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2개(농촌 여성리더 양성 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에 불과함.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2020년 수십 개에 달하는 교육 사업 중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과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두 가지임.

그림 5-2 교육 경험 및 교육 희망 분야의 비교



자료 :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특성 때문에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농사나 가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가까운 교육 장소, 농한기와 저녁 시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조사결과와도 비슷하여 전체적인 교육 접근성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5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농사가사 대체 인력	교육장소가 가까운 곳	농한기에 교육 실시	저녁시간에 교육 실시	다양한 교육 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 필요
전체		27.3	26.1	15.3	15.2	10.0	6.2
유형	일반농	27.5	26.1	15.5	15.1	9.9	5.8
	고령농	27.2	29.6	16.0	12.8	11.3	3.3
	다문화	16.3	21.3	5.5	20.0	7.9	28.1
	귀농	22.0	26.8	14.1	13.1	14.6	9.5
연령	30대 이하	21.3	15.3	4.8	15.2	7.5	35.9
	40대	35.1	19.3	12.9	11.8	9.0	11.7
	50대	25.7	22.1	16.2	20.3	10.0	5.7
	60대	27.3	27.7	16.6	17.0	7.1	4.2
	70대 이상	27.3	29.7	15.4	11.0	12.9	3.6

주: 1순위 응답 결과이며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자료: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요가 연령별·품목별로 다양하지만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부족
- 여성농업인이 농업 활동 주체로서 필요한 직업 역량 및 리더십 교육 과정 제공
- 여성농업인 교육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여성농업인의 교육 접근성 해소를 위해 교육을 위한 영농도우미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확대해야 함.

○ 여성농업인의 학습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기획 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는 학습자로서 여성농업인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 농업인 대상 교육 훈련 사업의 추진체계 전체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편해야 함.
-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교육과정을 늘리고 성별 구분 없는 교육과정에서도 성인지 관점에서 내용 개편 필요

- 여성농업인의 접근성 해소하고자 영농도우미 홍보 및 지원을 확대, 여성농업인을 고려한 장소와 시간 설정
- 소규모 '학습 동아리' 또는 '찾아가는 교육' 방식의 사업을 개발하고 확산

□ 세부추진과제

○ 교육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개편

- (여성농업인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농업인의 학습요구와 교육 참여 실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인지적 교육 운영) 교육 강사의 성인지 의식 제고
- 여성농업인 학습 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교육
- (여성농업인 특화 리더십 교육 과정 확대) 농업, 사업체,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특화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 과정 수료에 대한 유인책 고려

○ 교육지원체계 협력 강화

- (교육기관 간 협의회 운영 및 협력) 중앙행정기관과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개편하는 협의회 운영 필요
- 교육추진실적 총괄관리 및 환류
- (지자체와 교육 연계 강화) 지자체 자체 교육에 농식품부 및 농정원 교육 과정 활용, 지역 특화 교육 과정 개발에 공동 참여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교육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개편									
- 여성농업인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식품부, 농진청						●		
- 성인지적 교육 운영	농식품부, 여가부							●	
- 여성농업인 학습 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교육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 특화 리더십 교육 과정 확대	농식품부, 여가부							●	
○ 교육지원체계 협력 강화									
- 교육기관 간 협의회 운영 및 협력	농식품부, 농정원, 농업기술센터							●	
- 교육추진실적 총괄관리 및 환류	농식품부, 농정원, 농업기술센터								●
- 지자체와 교육 연계 강화	농식품부, 지자체						●		

중점추진과제 2-2. 사회적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은 고령화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낮은 인구 밀도와 인구 감소 때문에 관련 시설이 분산되어 수요자가 적기·적시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

- 면 지역 고령화율은 30.2%로 동 지역 고령화율 13.7%보다 2배 이상 높으며 면 지역 80세 이상 노인 비율도 9.2%로 2.9%인 동 지역과 비교해서 3배 이상 높음.
- 2019년 기준으로 주요 사회복지시설은 자치구·시에는 평균 119.9개소가 있으나 군 지역에는 평균 39.6개소만 있으며 보건소 등을 제외한 병·의원도 자치구·일반시에 평균 518개소가 있으나 군지역에는 52.4개소만 있음.

표 5-6 지역별 주요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구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저소득	기타	합계
자치구·일반시	4,881	2,776	2,061	267	115	688	10,788
	(54.2)	(30.8)	(22.9)	(3.0)	(1.3)	(7.6)	(119.9)
도농복합시	3,547	1,851	1,340	121	77	309	7,245
	(62.2)	(32.5)	(23.5)	(2.1)	(1.4)	(5.4)	(127.1)
군지역	1,610	804	566	40	78	146	3,244
	(19.6)	(9.8)	(6.9)	(0.5)	(1.0)	(1.8)	(39.6)
합계	10,038	5,431	3,967	428	270	1,143	21,277
	(43.8)	(23.7)	(17.3)	(1.9)	(1.2)	(5.0)	(92.9)

주: 2019년 말 기준 괄호 안 수는 시군구 당 기관 수를 나타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인용.

표 5-7 지역별 주요 병의원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구분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 의원	한방병 의원	요양병원	합계
자치구·일반시	215	927	22166	12594	9864	825	46681
	(2.4)	(10.3)	(246.3)	(139.9)	(109.6)	(9.2)	(518.7)
도농복합시	122	420	8420	4645	3920	545	18129
	(2.1)	(7.4)	(147.7)	(81.5)	(68.8)	(9.6)	(318.1)
군지역	19	142	1905	963	976	207	4294
	(0.2)	(1.7)	(23.2)	(11.7)	(11.9)	(2.5)	(52.4)
합계	356	1489	32491	18202	14760	1577	69104
	(1.6)	(6.5)	(141.9)	(79.5)	(64.5)	(6.9)	(301.8)

주: 2019년 말 기준 괄호 안 수는 시군구 당 기관 수를 나타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등은 제외함.

자료: 보건 의료빅데이터서비스 재인용.

○ 시장 기능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농촌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하여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음. 농촌 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경제를 활동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 역할이 확대됨.

-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의 한 분야인 노노(老老)케어 참여자는 여성이 79.3%로 남성 20.7%보다 약 4배 많음.

- 농촌에서는 부녀회나 여성농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마을 공동 급식, 어르신 돌봄, 공동 보육, 농촌 관광 등 사회적 목적이 있는 지역활동에 여성 농업인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 관련 지식과 인식이 부족해서 참여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 경제 인식과 지식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 필요
-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여성이 하던 공동체 내의 사회적 역할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홍보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 확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부추진과제

○ 여성농업인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 사회적 경제 인식을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활동가 양성
-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농번기 공동급식, 어르신 돌봄, 행사 진행 등 기존 무보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老)-노(老) 케어, 공동보육, 로컬푸드, 식생활 교육, 문화활동 등 농촌사회적 경제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자활사업 등과 연계
- (여성농업인 단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 지원) 여성농업인 단체가 여성농업인 사회적 경제 확대에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함.

○ 농촌 여성 사회적 경제 조직 실천 모델 발굴

참고 3 마을만들기 또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과 여성 농업인

전국의 농촌 지방자치단체 중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조력기구들이 적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 이들 기구들은 대부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시행한다. 그 같은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성비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 없으나, 여성 참여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에서도 여성농업인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여성농업인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활동가로서 역할에 걸맞은 지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여성농업인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농식품부								●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 여성농업인 단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 지원	농식품부								●
○ 농촌 여성 사회적 경제 조직 실천 모델 발굴	농식품부								●

중점추진과제 2-3. 여성농업인 창업 및 경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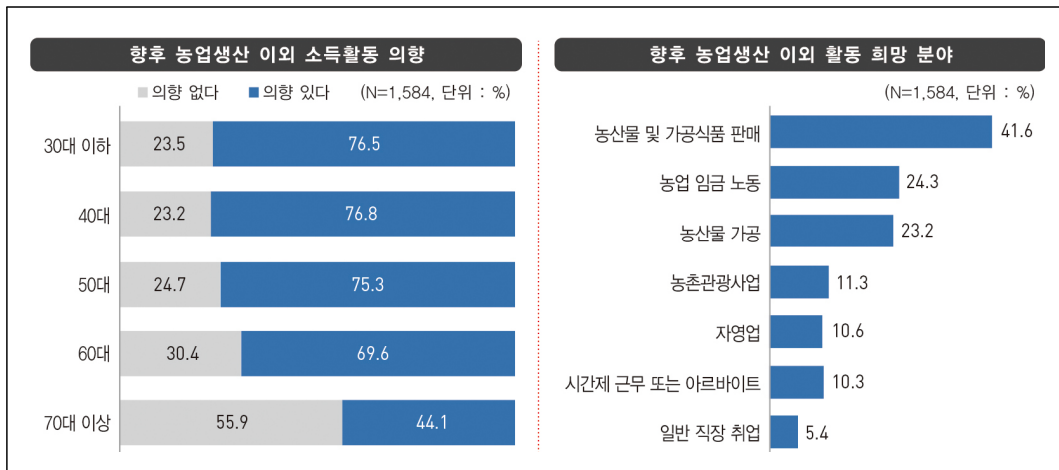
□ 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 의향은 높으나 기회 및 정보 부족으로 참여가 제한됨.

-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율은 21%고, 농외소득 활동 의향도 2013년 50.9%에서 2018년 62.5%로 증가함.
-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참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외소득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고 및 관련 정보 전달이 미흡이며 고령농은 신체적 한계로 나타남.

-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외소득활동 참여 애로사항으로 기회나 정보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귀농한 여성농업인이 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음(26.9%). 고령농의 애로사항으로는 신체적 한계가 27.6%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5-3 향후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의향 분야



자료: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5-8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참여의 애로사항

단위: %

구분	기회·정보 부족	신체적 한계	능력 부족	필요 없음	농사일 바쁨	자본 부족	인맥 부족	자신감 부족	판매 어려움
전체	22.8	19.6	14.9	11.6	11.4	7.8	5.4	2.9	2.0
일반농	22.7	20.1	14.7	11.6	11.5	7.8	5.3	2.9	2.0
고령농	16.5	27.6	14.9	14.7	9.2	6.4	4.3	3.4	2.1
다문화	25.7	2.0	23.6	8.2	7.0	8.1	10.4	3.6	0.0
귀농	26.9	9.4	20.0	14.0	6.8	9.4	8.3	4.8	0.4

자료: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은 투자자금이나 인력관리, 마케팅 등의 경영 관련 지식 부족과 가사 노동 병행으로 인한 노동 부담, 사업 경험 부족 때문에 창업 및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성농업인 경영 사업체는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많아 자금이 부족하고 판매처 확보

에 어려움이 많으며 사업 경영 경험 부족 때문에 사업체를 경영할 리더십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를 주로 경영하는 여성농업인의 특성상 식품위생가공법 등의 규제가 큰 제약요인임.
- ‘재무관리 기법’에 대한 교육 경험은 1%도 안 되며, 교육 수요도 2.4%로 낮음.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과 경영관리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창업과 관련하여 경영 자문이나 컨설팅을 지원해야 함.

- 사업체 경영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함.
- 사업체 경영이나 회계, 재무, 마케팅 관련 교육에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제고해야 함.
-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 컨설팅 등 사업 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세부추진과제

○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

- 소규모 공동이용 가공시설 설치 지원
- 규제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강화
- 식품가공 관련 교육 확대

○ 창업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 (창업 관련 컨설팅 제공) 창업 관련 기술 및 재무 컨설팅 제공

- (경영·회계·마케팅 교육과정 개설 확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여성 스스로 사업 경영의 주체가 되도록 함.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									
- 소규모 공동이용 가공시설 설치 지원	농식품부								●
- 규제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
- 식품가공 관련 교육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		
○ 창업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농식품부, 농진청								●
- 창업 관련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청, 농업기술센터							●	
- 경영·회계·마케팅 교육과정 개설 확대	농식품부, aT, 농정원, 농진청, 유통교육원							●	

중점추진과제 2-4.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역할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체적 특성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이 도시와 비교하여 활발함.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농업인 중 89.5%가 적어도 하나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며 마을 부녀회에 80.8%, 계에 57.3%, 농수축협 조합원 27.8% 등임.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은 마을사업 참여, 지역사회 봉사, 취약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이며 실제로 여성농업인의 이용 및 참여가 높은 사업은 농번기 마을공동 밥상(23.7%),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12.6%) 등임.

○ 여성 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증가하나 가사와 농업 활동의 병행, 사회참여 경험 부족, 리더십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보수적 성역할과 경제·사회활동에서의 성차별 의식 때문에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사회 리더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
-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전문 능력과 리더십 향상 교육 필요
- 여성농업인 단체가 연합하여 농업·사회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세부추진과제

○ 지역개발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지원

- (여성농업인 마을리더 육성) 지역개발사업 기획·운영하기 위한 전문 능력 및 리더십 교육 실시
-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개발사업에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등
- (지역사업에서 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 지역사업 수행 시 성별통계 생산 및 평가항목에 포함

○ 여성농업인 단체의 지역사회 협력·연대 활동 추진

-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협의 기구 형성 지원)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중요 의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성공사례 발굴·확산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지역개발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지원									
- 여성농업인 마을리더 육성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농식품부						●		
- 지역사업에서 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	지자체								●
○ 여성농업인 단체의 지역사회 협력·연대 활동 추진									
-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협의 기구 형성 지원	농식품부								●
- 성공사례 발굴·확산	농식품부								●

목표 3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중점추진과제 3-1. 일·가정 양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된 농업·농촌에 젊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 중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지원은 필수임.

-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공백을 채우고, 출산 이후 여성농업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경제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함.

○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이지만 농가는 분리되지 않음. 실제로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는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으며, 전 연령에 걸쳐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의 확대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응답하였음.

○ 본인의 상해나 질병 진단 시 지원받는 영농도우미를 자녀의 상해나 질병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확대하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음.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지원을 확대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 보험료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여성농업인이 일상생활 중에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접근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음.

표 5-9 여성농업인 필요 과제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 부담 경감	보육 및 교육 시설 확충	복지 시설 확충 및 제도 확대	기술 및 자금 지원	전문 경영 교육 강화	전담 부서 신설	여성 친화 농기계 제도 확충	없음
전체	1,559	14.3	20.1	15.4	22.6	13.8	8.8	2.1	2.7	0.1
30대 이하	45	13.1	16.2	22.0	24.7	8.6	10.1	1.5	3.8	0.0
40대	110	16.3	16.2	15.5	22.4	13.1	12.3	1.3	2.5	0.3
50대	354	14.3	20.4	15.3	21.6	14.1	10.2	1.8	2.3	0.0
60대	481	13.2	21.3	16.1	21.3	14.1	8.0	2.1	3.3	0.4
70대 이상	569	15.0	19.8	14.2	24.3	14.0	7.9	2.4	2.4	0.0

주: 1순위, 2순위의 합.

자료: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세부추진과제

○ 여성농업인 출산 지원

- (산모 건강서비스 접근성 지원) 원격진료, 교통비 지원
- (출산급여 지원) 출산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출산급여 지급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농업인 육아휴직 도입) 고용보험제도 속 육아휴직처럼 여성농업인에게도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여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 및 농작업의 지속성을 지원
- (보육시설 내 제공 프로그램 개선) 영유아들의 출신 배경 및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지자체의 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 농번기 주말돌봄방 확대, 시간제 보육 돌봄방 운영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관련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아동 질병·상해시 영농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 (여성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홍보 강화) 팸플릿 및 포스터 제작, 각종 교육 시 홍보활동 강화,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및 이장, 부녀회장을 통한 홍보 및 참여 독려

○ 마을 건강리더 육성 및 활동 지원

- (농업안전보건센터 및 특수건강검진 연계 건강증진 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 등 지역 내 보건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 내 건강 지도자 양성

참고 4 마을 건강리더 양성사업 추진 사례- 장흥군 보건소

전남 장흥군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후 진료 방식이 아닌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질환의 원인을 예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농촌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장흥군은 건강 서비스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지역 전문가를 직접 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지역 내 보건전문가와 서비스전달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중이다.

이 사업은 50~70대 주민 중 희망하는 60명을 대상으로 12주간(72시간) 노년의 삶에 유익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관리 방법을 전파하는 건강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보건소와 거리가 먼 지역 의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크며, 지역 내외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양질의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완도군도 이와 유사하게 목포대학교와 협력하여 건강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역에 파견하는 건강리더양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여성농업인 출산 지원									
- 산모 건강서비스 접근성 지원	농식품부								●
- 출산급여 지원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농업인 육아휴직 도입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
- 보육시설 내 제공 프로그램 개선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 돌봄 관련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 여성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홍보 강화	농식품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마을 건강리더 육성 및 활동 지원									
- 농업안전보건센터 및 특수건강검진 연계 건강증진 사업	농식품부, 지자체								●

중점추진과제 3-2. 노동 경감 및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여성은 주로 밭농사에서 손치기, 수확, 선별, 제초 등의 농작업을 수행하는데, 수확·운반을 제외하고는 기계화가 어렵고 대부분 손으로 이뤄지고 있음.
 - 밭기계화율은 2019년 기준 60.2%인데, 주로 남성이 수행하는 경운·정지 및 방제작업의 기기화율은 90%로 높지만,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에서 기계화율은 10%로 상대적으로 낮음.
 - 여성친화형으로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가 소형·무동력인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낮음.
-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작업 편이장비의 필요성이 높지만 시장형성이 부진하여 개발과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 수요자인 여성의 구매력 한계로 인해 영세한 제작 업체로서는 충분한 이익이 담보되지 않아 생산을 시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여성농업인은 체력 부족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 농기계/시설 사용에서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고 있음.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 농업·농촌에서 겪는 여성의 고충으로서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32.8%), ‘농사와 가사의 병행’(24.5%), ‘농기계 및 시설 사용이 어려움’(16.1%)이 주로 지적됨.
- 한편 농작업 편이장비, 도구, 농업인용 개인보호구(방제복, 작업복, 장갑, 고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이 거의 없고, 구매정보도 네이버쇼핑, 개인 블로그에 산재되어 수요자인 여성농업인의 상품 접근성이 낮음.

○ 농기계 활용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드론으로 여성농업인의 활용 범위가 확장
- 여성농업인이 많이 활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특화교육으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임대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임대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활용하는데 어려움 존재

- 농기계 사용방법이 숙지되도록 지도와 함께 농기계 운반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농작업의 경우, 농작업 대행 서비스에 대한 정책 요구가 있음. 특히 단독으로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의 경우에 수요가 높음.

○ 또한, 농업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노동 공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요구가 높아짐. 영농도우미는 점점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인지도²²⁾는 높지 않은 편이므로 단가 현실화, 영농도우미의 숙련도 향상 등이 필요함.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경감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마을 단위 공동급식을 지원함.

²²⁾ 사고발생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제도의 인지도는 10.8%이고, 이용 및 참여도는 2.4%에 불과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 공동급식 지원은 부식비와 조리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으나 두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일부 지자체만 운영되어 수혜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²³⁾.
- 인건비 지원 단가가 낮거나 일부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건비가 실제 참여자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함.

□ 세부추진과제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

- (도우미 지원 단가 현실화) 작목별, 업무별로 실질적인 농촌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금액을 인상²⁴⁾

* 영농도우미의 1일 임금은 7만 원(국고 70%, 이용농가 자부담 30%)로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강도나 주변 시세, 여성농업인이 생산하는 주요 품목인 양파, 마늘, 고추, 사과, 배의 일평균 노임 단가가 81,000원~88,000원인 것을 고려할 때 다소 낮은 편임.

- 영농도우미 인력의 전문성 제고

○ 농업노동 부담 경감

-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이장비 개발) 소형 동력 농기계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소형 농업포장용기 개발, 작업복용 세탁기 등 편이장비 개발
-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체계 개선) 지역 마트에 전시판매코너 설치 또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오픈 등 구매접근성 개선
- (안전바우처(가칭) 제도 도입) 여성농업인이 작업보호구(작업복, 장갑, 작업화 등)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교육 강화) 드론 등 여성농업인의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 교육 확대

²³⁾ 김진용(2020)은 전국 3만 6,792개 중 2,955개 마을에 대해서 농번기 공동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고 있음.

²⁴⁾ 농촌진흥청 『2018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
지까지 농기계 운반 지원
-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지자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또는 민간단체(사회적 조직)
을 통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참고 5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보급체계 개선

- 현황: (농촌진흥청) 기술개발 → (실용화 재단) 기술 이전·생산업체 투자 및 지원 → (생산업체) 편이장비
생산 및 판매
- 문제점: (생산업체) 충분한 시장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큰 위험부담이므로 생산에 소극적, (편이장비
수요자) 상품 정보 및 구입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구매에 어려움
- 개선방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온라인 시장 활용을 확대하고 오프라인 판매처(예:
하나로 마트 내 편이장비 코너)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한 편이장비 상품 홍보 확대

참고- 표 1 개발 편이장비 및 개인보호구의 상품화 추진시 애로사항

사례	시작품
* 자동 필름 교체용 농작업자용 보안경('16, 농진청 개발)을 개발했으나, 기술이전을 못 하여 아직도 상품화를 못한 상태임: 초기 투자비용 (5천만 원)을 업체가 부담하려면 최 소 10,000개의 발주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옴.	
* 끈조임 형태의 농작업화('16, 농진청 개발)를 개발하여, 산업체 기술이전을 했으나, 최소 생산 수량을 확보해 줄 수요처를 찾지 못하여 상품화를 못하고 있음.	
* 자동 균형유지 전동 일륜수레('19, 농진청 개발)를 개발하여 현재 산업체 기술이전 추 진 중.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어 수요 예측도 안되는 상황에서 실제 상품화를 추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3차 여성농업인정책토론회 자료집』.

○ 들녘별 휴게 공간 확충

- 농지 인근 화장실 및 휴게 공간 설치 및 운영

○ 농번기 공동급식 운영체계 개선

- (공동급식 운영체계 가이드라인 제시) 여성농업인의 비공식 노동을 공식화하도록 지자체에 권고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									
- 도우미 지원 단가 현실화	농식품부, 농협							●	
- 영농도우미 인력의 전문성 제고	농식품부, 농협								●
○ 농업노동 부담 경감									
-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이장비 개발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		
-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체계 개선	농식품부, 농진청							●	
- 안전바우처(가칭) 제도 도입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교육 강화	농식품부, 농진청, 농정원, 농업기술센터						●		
-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농식품부, 지자체							●	
-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	
○ 들녘별 휴게 공간 확충									
- 농지 인근 화장실 및 휴게 공간 설치 및 운영	농식품부, 지자체								●
○ 농번기 공동급식 운영체계 개선									
- 공동급식 운영체계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								●

중점추진과제 3-3. 건강 및 안전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은 노지 발작물이나 과수 재배에 따른 여러 활동들에 집중되는데, 앞서서 해야 하는 농작업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

- 2018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 중 업무상 질병자는 5만706명(업무상 질병 유병률 5.6%)으로 남성 3만7,991명(업무상 질병 유병률 4.0%)보다 1.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0 2018년 여성농업인 유병률

	농업인수 (명)	업무상 질병자수 (명)	업무상 질병 유병률 (%)
총계	1,862,682	88,696	4.8
남성	953,210	37,991	4.0
여성	909,472	50,706	5.6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 2018.

표 5-11 2019년 여성농업인 업무상 손상 현황

	농업인수 (명)	업무상 손상자수 (명)	업무상 손상 발생률 (%)
총계	1,811,824	48,405	2.7
남성	955,787	25,940	2.7
여성	856,038	22,465	2.6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 2019.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 많아 ‘전도(미끄러짐, 넘어짐)’의 사고가 많이 발생함.

○ 이러한 농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 발생 시 농작업과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으로 ‘의료기관까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2%로 가장 크고,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17.1%를 차지하여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정책 사업이 필요함.

표 5-12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

단위: %

연령	멀거나 교통 불편	병원 갈 시간 부족	의료 서비스 부실	진료비 부담	대기시간 문제	복잡한 절차	필요정보· 상담 어려움	의료시설 없음	거동 불편	없음
전체	33.2	17.1	11.6	4.1	6.2	0.6	1.4	3.1	0.3	22.4
30대 이하	25.0	13.2	13.6	6.6	6.8	0.0	0.0	3.7	0.0	31.1
40대	19.4	16.5	11.4	2.7	7.1	1.4	3.8	1.4	0.0	36.4
50대	26.0	19.3	12.0	3.2	6.5	0.3	1.2	3.0	0.1	28.4
60대	28.2	21.0	12.7	3.8	4.8	1.1	1.0	3.4	0.0	24.0
70대 이상	45.3	12.8	10.2	4.8	7.1	0.2	1.6	3.1	0.8	14.0

자료: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농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장 지원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가입률은 남성보다 저조함.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가부장적인 문화나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 다양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검진과 영농활동에 따르는 질병 및 재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는 사후적 치료보다 효과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

- 타 직업 분야에서는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예: 경찰, 소방관)²⁵⁾²⁶⁾

25)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지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 1항). 건강검진 내용은 “야간근무 및 장시간 집중근무로 인한 심장·노혈관·근골격계 질환, 매연 및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경찰활동과 그와 관련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검사”로 규정됨(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6조 1항).

26) 국가는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며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함. 또한

○ 또한 국가 전반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임에도 농촌지역의 경우 오히려 산부인과가 축소되고 있어 여성농업인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체계는 약화되었으며, 부인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임.

- 전체 군 지역 82개 중 약 43.9%인 36개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특히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없는 군 지역이 많음. 또한 전체 도농복합시 57개 중 전남 광양시에만 산부인과가 없으나, 도농복합시별로 산부인과 수의 편차가 큰 것을 나타냄.

표 5-13 산부인과가 없는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

단위: 개, %

지역	도농복합시	군
산부인과 없는 지역	전라남도(1)	광양시
전체	57개	82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rd/hosp/getHospList.do?pgmid=HIRAA030002020000#tab01>.

□ 세부추진과제

○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

- 업무상 질병 및 재해 예방 교육 확대
- 산부인과 진료 확대 및 접근성 개선

해당 소방전문 의료기관 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제 16조).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및 사후관리

- (농업안전보건센터 역할 강화) 건강검진 DB센터 설립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실시

○ 농작업 안전 재해 관련 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 홍보용 팸플릿, 리플렛 제작,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 이장 및 부녀회장을 통한 홍보 필요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및 재해 관련 연구

○ 자연재해 대응 전략 수립

- 성인지적 농작업 안전 및 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									
- 업무상 질병 및 재해 예방 교육 -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		
- 산부인과 진료 확대 및 접근성 개선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및 사후관리									
- 농업안전보건센터 역할 강화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실시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업인안전 보건센터								●
○ 농작업 안전 재해 관련 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식품부, 농협						●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및 재해 관련 연구	농식품부, 농진청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자연재해 대응 전략 수립									
- 성인지적 농작업 안전 및 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농식품부, 농협								
									●

중점추진과제 3-4. 문화·여가활동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여성농업인은 문화에 대한 욕구는 많으나 지역 여건 및 농작업 부담으로 인해 문화활동이 결핍되어 있음.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업인의 경우 문화·여가활동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함.
- 농촌지역에는 여성농업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및 소통 공간의 부재로 기본적인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임.
 - 201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연간 문화행사 이용 횟수가 아예 없는 비율은 67%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을 위한 공간이 생길 시 여성농업인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활력은 물론이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문화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문화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정책 사업이 필요함.
- 이와 같은 프로그램, 공간의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각 지자체의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복바우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표 5-14 문화행사 이용 횟수

단위: %

	사례 수 (명)	이용한 적이 없다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4번 이상	1년에 3번 이하
전체	1,584	67.0	33.0	10.0	23.0
30대 이하	66	42.9	57.1	16.4	40.7
40대	113	45.1	54.9	16.4	38.5
50대	355	57.3	42.7	14.2	28.5
60대	481	67.9	32.1	9.6	22.5
70대 이상	569	79.4	20.6	5.7	14.9

자료: 안석 외(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세부추진과제

○ 문화·여가활동 지원

- 찾아가는 문화공연, 영화관 추진
- 문화동아리 육성 지원
- 여성농업인 커뮤니티 시설 조성

* 기존 공간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설립하여 크게는 문화활동 공간으로, 작게는 도시의 카페테리아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해야 함.

* 경로당,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에는 50대 이하 젊은 여성농업인의 접근·이용이 제약. 면 수준의 장소 필요

○ 행복바우처 제도 개선

- 지역간 편차 완화

* 현재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복바우처를 전 지자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자체별 지급 차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권고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문화·여가활동 지원									
- 찾아가는 문화공연, 영화관 추진	농식품부, 문 체부, 지자체						●		
- 문화동아리 육성 지원	농식품부, 문 체부, 지자체								●
- 여성농업인 커뮤니티 시설 조성	농식품부, 문 체부, 지자체								●
○ 행복바우처 제도 개선									
- 지역간 편차 완화	농식품부, 지자체						●		

목표 4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중점추진과제 4-1.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론’으로 표상되는 인구학적 위기에서 청년 여성농업인 등 지역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임.
- 청년 여성농업인은 농업 부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년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이 겹쳐 있어, 이중적 진입장벽 구조를 만나게 됨.
 - 청년들이 경험하는 농업 분야 진입장벽은 농지 등 자본의 문제, 영농 경험 및 기술의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청년여성농업인은 그 세 가지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입장에 놓임.

- 청년 여성농업인 중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특히 귀농한 경우에 이주 초기 단계에 입지와 형태가 적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관한 정책 수요가 높음. 결혼한 청년 여성농업인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원 정책 요구가 높는데,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각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임.

○ 청년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가장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계층은 지역의 선배 여성농업인임.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의 소통과 협력을 매개로 청년여성농업인이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배 여성농업인 또한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극을 받고 농업이나 지역사회 활동 영역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표 5-15 청년여성농업인 인구 통계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가 인구	전체	3,062,956	2,962,113	2,911,540	2,847,435	2,751,792	2,569,387	2,496,406	2,422,256	2,314,982	2,244,783
	여성	1,561,892	1,506,336	1,487,855	1,460,756	1,412,009	1,304,735	1,274,581	1,237,977	1,184,548	1,144,841
	20~39세 여성	198,321	174,586	163,146	149,992	139,905	129,155	118,487	111,614	98,239	89,728
농업 종사 인구	전체	2,189,499					1,984,185				
	여성	1,085,941					981,820				
	20~39세 여성	60,985					15,715				

주: 농가인구는 농림어업조사의 수치이며, 농업종사인구는 2010년과 2015년의 농림어업조사에서만 파악된 것임.

귀농가구원 및 귀촌가구원은 귀농·귀촌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2013년부터 통계가 작성되었음.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 세부추진과제

○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서 청년여성농업인 우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의 여성 수혜율 점검 및 확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여성농업인 우대
- 농지은행의 청년 대상 농지지원 사업에서 여성 수혜율 점검 및 우대

○ 청년여성 삶의 경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단기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4주 동안 농촌 현장에서 도시 청년을 맞이할 준비가 된 마을이나 여성농업인 단체 또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 청년 여성과 함께 생활을 공유

○ 청년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청년여성농업인 임시 주거환경 지원) 면사무소 소재지 인근이나 배후 마을에 지역에 새로 이주해 와서 농업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들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세어하우스 등의 주거환경을 조성
- (청년여성농업인 영농학습 동아리 지원) 집체식 교육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여성농업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학습과정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경비나 전문성을 지원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창업 교육 및 지원) 가공, 마케팅, 농촌관광, 돌봄농업, 문화, 디자인 등 농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상향식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습의 결과로 구체화된 창업계획을 심사하여 창업비용을 지원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영농정착 실천농장 시범사업) 청년여성농업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영농활동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청년귀농장기교육농장 사업을 개선하여 추진

○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집단 멘토링 제도 도입) 일대일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청년여성농업인과 선배 여성농업인이 함께 만나 영농을 비롯한 농촌 생활 여러 측면에 관하여 조언하고 도움을 제공

- (여성농업인 세대 협력 공모사업 추진) 청년 여성농업인과 선배 여성농업인이 공동으로 지역공동체에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그 기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프로젝트에 경비를 지원

참고 6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사례

2018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와 충남 홍성군 젊은협업농장은 ‘무자본, 무기반, 무기술’ 상태의 서울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에게 도시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삶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2018 삶의경로탐색 프로젝트 <이주농부>’를 기획했다. ‘이주농부’ 프로젝트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이나 특정 정보 전달과 기술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농촌을 경험하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으로 2주간 살아보는 것이다. 이들은 오전에는 농업현장실습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공부모임에 참여하며 마을 행사나 세미나, 잔치가 있으면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농촌에서의 생활을 통해 청년들은 자기 적성과 가치관을 우선으로 고민하며 인생의 다음 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주농부’에 참여한 9명의 청년들은 본인들의 새로운 삶의 경로를 모색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주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젊은협업농장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진로 고민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비밀언덕’을 갖게 된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였다.

지역사회가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감하여 2019년에도 <별의별 이주○○> 라는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별의별 이주○○’에서는 젊은협업농장 외에 강원도 춘천시 별빛산골센터, 충북 옥천군 (주)주간옥천신문,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이 추가적으로 참여하며 프로젝트가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농업인’이라는 직업군에 대한 체험만 이뤄졌다면, 2019년에는 지역과 단체의 특성에 따라 ‘이주유학’, ‘이주기자’, ‘이주+농부’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연계, 지역 간 소통과 경험 공유가 중요하며, 이것이 청년들에게 삶의 전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핵심이라 여겨진다.

자료: 마을연구소 일소공동체,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확대 및 발전방안』.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서 청년여성농업인 우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의 여성 수혜율 점검 및 확대	농식품부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여성농업인 우대	농식품부						●		
- 농지은행의 청년 대상 농지지원 사업에서 여성 수혜율 점검 및 우대	농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		
○ 청년여성 삶의 경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대학							●	
○ 청년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청년여성농업인 임시 주거환경 지원	농식품부, 지자체								●
- 청년여성농업인 영농학습 동아리 지원	농식품부, 농정원								●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창업 교육 및 지원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영농정착 실천농장 시범사업	농식품부, 농정원								●
○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집단 멘토링 제도 도입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 세대 협력 공모사업 추진	농식품부							●	

중점추진과제 4-2. 귀농·귀촌 여성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직접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기관의 위탁교육 사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중에 여성 비율은 현저하게 낮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단계의 교육 과정에서 여성의 학습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5-16 귀농·귀촌 여성 인구 통계

단위: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귀농 가구원	전체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17,856	16,181
	여성	7,448	7,716	8,561	8,776	8,471	7,393	6,494
	20~39세 여성	2,045	2,081	2,195	2,226	2,072	1,748	1,336
귀촌 가구원	전체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472,474	444,464
	여성	197,341	214,807	221,744	227,075	236,404	223,779	207,818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귀농·귀촌인통계』. 각 연도.

표 5-17 귀농가구가 현재 수행 중인 농외 경제활동 현황

단위: %, n=1,257

농산물 및 가공품 직접마케팅	자영업	일반직장 취업 (정규직)	일반직장 취업 (임시직)	농업 일용노동	비농업부문 일용직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없음
10.9	9.9	9.7	6.4	4.5	4.4	2.1	1.2	56.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표 5-18 귀농·귀촌의 향후 하고 싶은 농외 경제활동

단위: %, n=1,257

농산물 및 가공품 직접마케팅	자영업	일반직장 취업 (정규직)	일반직장 취업 (임시직)	농업 일용노동	비농업부문 일용직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계획 없음	농사에만 전념할 예정
12.7	3.9	2.4	1.5	1.9	1.6	8.3	7.3	44.3	15.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 농촌으로 이주한 후에도 귀농인은 정부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 자격을 얻으려고 일정 시간의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한편으로, 귀농·귀촌의 여성들은 대부분 농외 취업이나 창업을 시도한다는 조사 보고가 있음.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과정 수탁 기관 등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귀농·귀촌 여성의 학습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부족한 편임.

- 귀농 여성 또한 청년 여성농업인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사회적 관계에 편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귀농 초기 정착과정에서 대체로 경험하는 농가소득의 급격한 하락에 대응하여 농외소득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귀농·귀촌 여성이 기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대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활동을 통해 양측 간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멘토링 같은 방식의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는 정책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그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은 경제활동을 겸하는 공동의 프로젝트일 것임.
 - 귀농·귀촌 여성이 농촌 지역사회에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가령, 아일랜드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농촌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농촌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에 편익을 주는 활동(환경관리, 취약계층 돌봄, 교육 및 문화 사업 등)이어야 함.

□ 세부추진과제

- 성인지 관점에서 귀농·귀촌 교육 지원 사업 점검 및 개선
 - 귀농·귀촌 분야 교육과정의 여성 학습 요구 분석
 - 여성귀농인 특화 교육과정 확대
- 귀농·귀촌 여성과 기존 농촌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 지원
 - 귀농·귀촌 여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 공모사업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성인지 관점에서 귀농·귀촌 교육 지원 사업 점검 및 개선									
- 귀농·귀촌 분야 교육과정의 여성 학습요구 분석	농식품부							●	
- 여성귀농인 특화 교육과정 확대	농식품부						●		
○ 귀농·귀촌 여성과 기존 농촌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 지원									
- 귀농·귀촌 여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 공모사업	농식품부, 지자체							●	

중점추진과제 4-3.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대다수가 농가의 구성원인데,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혹은 자녀 양육 등 제반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은 도시, 도농복합시, 농촌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비율이 다른 두 지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표 5-19). 이는 농촌 지역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정책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을 나타냄.
- 영농활동 및 농외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 충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나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위 인정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자존감이나 학업능력 측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임. 농가의 결혼이민여성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표 5-19 도시-농촌별 전체 혼인 중 외국인 여성 결혼 비율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도시	4.3	4.8	5.1	5.9	6.9
도농복합시	5.5	6.1	6.8	7.6	8.9
농촌	9.1	9.9	10.0	12.4	13.8

주: 도시는 일반시와 구 지역의 합.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농가의 결혼이민여성이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자 할 때, 여성 귀농인이나 청년창업 여성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이자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학습과 교육훈련이 필요함. 그러나 언어적 문제, 민족적 편견이나 차별이 작동하는 사회적 관행 등의 장벽이 높아서 별도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유대나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지위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은 현저하게 사회활동이 적거나, 사회활동의 범위가 모국어가 같은 이들의 모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음.
- 농촌에 온존하는 가부장제 문화,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 세부추진과제

○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으로서 직업능력 향상

-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 확대) 기초/전문/특화의 과정으로 나누어, 참여자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교육
- 농업 관련 자격증 등 전문교육 확대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 확대) 제주도의 공심채영농조합법인이나 전남 해남군의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처럼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

○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 여성농업인 정책·교육 자료의 다중언어 적용
- 농산업인턴제에 결혼이민여성 참여 지원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으로서 직업능력 향상									
-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 확대	농식품부							●	
- 농업 관련 자격증 등 전문교육 확대	농식품부							●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 확대	농식품부, 농정원								●
○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 여성농업인 정책·교육 자료의 다중언어 적용	농식품부								●
- 농산업인턴제에 결혼이민여성 참여 지원	농식품부								●

중점추진과제 4-4.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구성은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을 견인할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 여성농업인은 다양한 종류의 공식적·비공식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농촌 지역공동체의 해체 또는 파편화를 억제하고 사회자본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음. 그러나 고령여성농업인, 청년 여성농업인, 귀농여성,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여성 외국인 농업노동자 등 문화적 배경이 아주 다른 계층들이 혼주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기’라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부각됨.

○ 고령 여성농업인 중 상당수가 관계 및 돌봄의 부재, 빈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업을 유지해온 당사자임에도 그 사회적 기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며, 농업과 관련된 전통 지식 및 자원의 담지자로서 역할이 인정되지 않음.

- 고령여성농업인은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고령 여성농업인이 지닌 전통 지식이나 기술을 지역사회 내부에서 전승하거나, 활동 가능한 수준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등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고령여성농업인이 젊은 세대들과 공동으로 활동할 때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청년, 귀농·귀촌인, 결혼이민자 등 농촌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야 하는 여성농업인 계층이 여럿 있음. 경제활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못지않게, 농촌 지역공동체에서 이들을 맞이하여 환대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 한편 국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는 그 작업환경이나 주거환경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분산 입지된 사업장에서 소수의 인원이 숙식하면서 과중한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인권을 보호하고, 농촌 지역공동체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인 농업노동자는 대체로 개별 농가나 농업법인에 5명 이하의 소수가 고용되어 있으며 주변과 분리된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음.
-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외국인 여성 농업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표 5-20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A)	남성	여성(B)	여성비율(B/A, %)
2007	6,504	-	-	-
2008	6,778	4,982	1,796	26.5
2009	7,896	5,753	2,143	27.1
2010	9,849	7,107	2,742	27.8
2011	13,487	9,550	3,937	29.2
2012	16,484	11,507	4,977	30.2
2014	23,687	16,335	7,352	31.0
2015	25,428	17,261	8,167	32.1
2016	27,984	18,676	9,308	33.3
2017	30,582	20,255	10,327	33.8
2018	31,462	20,908	10,554	33.5
2019	31,378	21,088	10,290	32.8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등록외국인 현황』 각 연도.

□ 세부추진과제

○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 및 추진

- (토종씨앗 보전 활동 지원) 고령여성농업인과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이 함께 토종씨앗 등을 보전하고 전승하는 체계를 지역에 구축(토종 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고령여성농업인 구술 채록 및 아카이빙 지원) 청년들이 고령여성농업인의 기억과 보유한 물품들을 발굴, 조사하여 기록으로 유지하는 활동 지원
- (고령여성농업인-아동·청소년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 방과후수업, 기타 평생학습의 영역에서 고령여성농업인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학습자들에게 농업이나 전통 생활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
- (청년-고령여성농업인이 함께 하는 상호학습) 청년여성농업인은 비문해 상태의 고령여성농업인에게 문해교육을, 고령여성농업인은 청년에게 영농과 관련된 경험과 기술과 지식을 나누는 학습 과정
- 은퇴농·고령여성농업인 특화 일자리 사업

○ 여성 외국인 농업근로자 지원

- (외국인 여성 농업근로자 주거 지원) 외국인 여성 농업근로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 머물 수 있게 시설 조성
-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창구 확대

○ 유형별 멘토-멘티 결연제도 확대

- (귀농 및 청년여성농업인 멘토링 사업 개선·확대) 귀농인 또는 청년창업농이 여성인 경우, 멘토를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제도 개선)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마을이나 읍/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멘토가 되거나, 이주한 지 오래된 결혼이민여성이 새로 이주한 결혼이민여성에게 멘토가 되는 방식으로 개선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 및 추진									
- 토종씨앗 보전 활동 지원	지자체								●
- 고령여성농업인 구술 채록 및 아카이빙 지원	농식품부, 농정원, 농진청								●
- 고령여성농업인-아동/청소년 세대 간 학습 프로그램	농식품부, 농정원								●
- 청년-고령여성농업인이 함께 하는 상호학습	농식품부, 농정원								●
- 은퇴농·고령여성농업인 특화 일자리 사업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		
○ 여성 외국인 농업근로자 지원									
- 외국인 여성 농업근로자 주거 지원	농식품부								●
-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창구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		
○ 유형별 멘토-멘티 결연제도 확대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귀농 및 청년여성농업인 멘토링 사업 개선·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		
-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제도 개선	농식품부, 농협						●		

4. 목표별 추진과제 요약 및 예산 투입 계획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4개의 목표 하에서 16개의 중점추진과제, 44개의 세부과제, 106개의 세세부과제로 구성됨.
- 전체 세세부과제 중 5차 계획에서 신규로 제시된 과제는 42개이며 4차 계획에 제시되었던 과제이나 과제 내용을 일부 보완한 과제는 25개, 4차 계획에서 제시되어 5차 계획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과제는 39개임.
- 제5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업무 방식 개선, 관계 기관 간 소통 확대 등 비예산 업무와 함께 예산 투입이 필요함.
- 앞서 제시된 목표와 추진과제별로 예산 투입내역을 추산하여 연도별 투입계획을 수립함.
- 제5차 계획 시행 첫 해인 2021년에는 총 464억 원이 투입되고 연도별로 투입액이 증가하여 2025년에는 총 1,092억 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총 투입액은 2023년에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의 시행에 따른 것임.
- 목표별로 살펴보면,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의 예산 규모가 가장 작고 복지 문화 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제고의 예산 규모가 가장 큼.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에서는 시행 첫 해에 6,2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에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예산 증가가 있었다가 2025년에는 5,100만 원으로 하락하며 대부분 비예산 과제로 구성됨.
-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사업,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등의 예산사업이 포함되어 시행 첫 해에는 약 350억 원이 투입되며 시행 마지막 해에는 약 9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학습동아리 지원, 사회적 경제활동가 양성, 소규모 공동이용 가공시설 설치지원 등이 포함되어 53억 원에서 63억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임.
-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분야에서는 청년여성농업인 임시주거환경 지원, 영농학습 동아리 지원, 청년여성 삶의 경로 탐색 프로그램, 멘토링 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총 61억 원에서 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표 5-21 목표별 예산 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목표	2021	2022	2023	2024	2025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62	62	362	50	51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5,295	5,488	5,643	5,959	6,338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34,964	40,980	89,916	92,285	94,480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6,088	6,661	7,087	7,685	8,286
전체	46,408	53,191	103,007	105,979	109,154

표 5-22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주체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목표 1. 여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1. 농업·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농업·농촌 교육 내 양성평등 강좌 확대	농식품부, 농협, 농정원						●		
- 가족공동경영협약 홍보 및 활성화	농식품부, 농진청						●		
- 농업·농촌 정책사업 추진 시 대상자 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농식품부, 농진청						●		
○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 농촌형 성평등 강사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농식품부						●		
- 농촌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컨텐츠 개발	농식품부						●		
1-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									
- 정부 위원회 내 여성비율 40%대 유지	농식품부, 농협						●		
- 정부, 여성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농식품부, 농협, 농정원							●	
○ 농협의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여성조합원 가입 확대	농식품부, 농협						●		
- 농협 여성임원 비율 확대	농식품부, 농협						●		
- 임원 및 여성농업인 리더십 향상 교육	농식품부, 농협						●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 및 내실화									
- 정책사업 시행지침 개정	농식품부								●
- 공동경영주 제도 홍보 및 등록 활성화	농식품부, 품관원						●		
- 법적 지위와 연계된 정책 인센티브 확대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 정비									
- 농업·농촌 관련 법령 정비	농식품부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공동경영주의 권한과 자격요건 정비	농식품부							●	

1-3.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 정책 환류 평가 강화	농식품부, 여가부						●		
-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농식품부							●	
○ 성별통계 생산									
- 성별농업통계 발행	농식품부								●
○ 성평등 지표 개발 및 보급									
- 성평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개선	농식품부							●	

1-4.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 지자체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정비 유도	농식품부, 지자체						●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농식품부, 지자체							●	
○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육성	농식품부, 지자체								●
-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		
-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농식품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		
- 홈페이지·SNS를 통한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확대	농식품부						●		

목표 2.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2-1.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성인지적 체계 구축

○ 교육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개편									
- 여성농업인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식품부, 농진청						●		
- 성인지적 교육 운영	농식품부, 여가부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여성농업인 학습 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교육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 특화 리더십 교육 과정 확대	농식품부, 여가부							●	

○ 교육지원체계 협력 강화

- 교육기관 간 협의회 운영 및 협력	농식품부, 농정원, 농업기술센터							●	
- 교육추진실적 총괄관리 및 환류	농식품부, 농정원, 농업기술센터								●
- 지자체와 교육 연계 강화	농식품부, 지자체						●		

2-2. 사회적 경제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

○ 여성농업인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 사회적 경제 활동가 양성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농식품부								●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 여성농업인 단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 지원	농식품부								●
○ 농촌 여성 사회적 경제 조직 실천 모델 발굴	농식품부								●

2-3. 여성농업인 창업 및 경영지원

○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

- 소규모 공동이용 가공시설 설치 지원	농식품부								●
- 규제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강화	농식품부, 식약처								●
- 식품가공 관련 교육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		

○ 창업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농식품부, 농진청								●
- 창업 관련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청, 농업기술센터							●	
- 경영·회계·마케팅 교육과정 개설 확대	농식품부, aT, 농정원, 농진청, 유통교육원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2-4.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역할 지원

○ 지역개발사업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지원									
- 여성농업인 마을리더 육성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농식품부						●		
- 지역사회에서 성별통계 생산 및 관리	지자체								●
○ 여성농업인 단체의 지역사회 협력·연대 활동 추진									
- 여성농업인 단체들의 협의 기구 형성 지원	농식품부								●
- 성공사례 발굴·확산	농식품부								●

목표 3.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3-1. 일·가정 양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농업인 출산 지원									
- 산모 건강서비스 접근성 지원	농식품부								●
- 출산급여 지원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		
-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농업인 육아휴직 도입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
- 보육시설 내 제공 프로그램 개선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 돌봄 관련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	
○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 여성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홍보 강화	농식품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마을 건강리더 육성 및 활동 지원									
- 농업안전보건센터 및 특수건강검진 연계 건강증진 사업	농식품부, 지자체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3-2. 노동 경감 및 지원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									
- 도우미 지원 단가 현실화	농식품부, 농협							●	
- 영농도우미 인력의 전문성 제고	농식품부, 농협								●
○ 농업노동 부담 경감									
-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이장비 개발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		
-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체계 개선	농식품부, 농진청							●	
- 안전바우처(가칭) 제도 도입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교육 강화	농식품부, 농진청, 농정원, 농업기술센터						●		
-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농식품부, 지자체							●	
-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	
○ 들녘별 휴게 공간 확충									
- 농지 인근 화장실 및 휴게 공간 설치 및 운영	농식품부, 지자체								●
○ 농번기 공동급식 운영체계 개선									
- 공동급식 운영체계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								●
3-3. 건강 및 안전제고									
○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									
- 업무상 질병 및 재해 예방 교육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		
- 산부인과 진료 확대 및 접근성 개선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및 사후관리									
- 농업안전보건센터 역할 강화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실시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업인안전보건센터								●
○ 농작업 안전 재해 관련 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식품부, 농협						●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및 재해 관련 연구	농식품부, 농진청								●
○ 자연재해 대응 전략 수립									
- 성인지적 농작업 안전 및 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농식품부, 농협								●
3-4. 문화·여가활동 지원									
○ 문화·여가활동 지원									
- 찾아가는 문화공연, 영화관 추진	농식품부, 문체부, 지자체						●		
- 문화동아리 육성 지원	농식품부, 문체부, 지자체								●
- 여성농업인 커뮤니티 시설 조성	농식품부, 문체부, 지자체								●
○ 행복바우처 제도 개선									
- 지역간 편차 완화	농식품부, 지자체						●		
목표 4.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4-1.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서 청년여성농업인 우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의 여성 수혜율 점검 및 확대	농식품부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여성농업인 우대	농식품부						●		
- 농지은행의 청년 대상 농지지원 사업에서 여성 수혜율 점검 및 우대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 청년여성 삶의 경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대학							●	
○ 청년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청년여성농업인 임시 주거환경 지원	농식품부, 지자체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청년여성농업인 영농학습 동아리 지원	농식품부, 농정원								●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창업 교육 및 지원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	
- 청년여성농업인 특화 영농 정착 실천농장 시범사업	농식품부, 농정원								●
○ 선배 여성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 청년여성농업인 대상 집단 멘토링 제도 도입	농식품부							●	
- 여성농업인 세대 협력 공모사업 추진	농식품부							●	

4-2. 귀농·귀촌 여성 지원

○ 성인지 관점에서 귀농·귀촌 교육 지원 사업 점검 및 개선									
- 귀농·귀촌 분야 교육과정의 여성 학습요구 분석	농식품부							●	
- 여성귀농인 특화 교육과정 확대	농식품부						●		
○ 귀농·귀촌 여성과 기존 농촌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 지원									
- 귀농·귀촌 여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 공모사업	농식품부, 지자체							●	

4-3.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으로서 직업능력 향상									
- 단계별 농업교육 과정 확대	농식품부							●	
- 농업 관련 자격증 등 전문교육 확대	농식품부							●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 확대	농식품부, 농정원								●
○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 여성농업인 정책·교육 자료의 다중언어 적용	농식품부								●
- 농산업인턴제에 결혼이민여성 참여 지원	농식품부								●

4-4.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 지원

○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 및 추진									
- 토종씨앗 보전 활동 지원	지자체								●
- 고령여성농업인 구술 채록 및 아카이빙 지원	농식품부, 농정원, 농진청								●

과제명	추진부서	추진 일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존	보완	신규
- 고령여성농업인-아동/청소년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	농식품부, 농정원								●
- 청년-고령여성농업인이 함께 하는 상호학습	농식품부, 농정원								●
- 은퇴농·고령여성농업인 특화 일자리 사업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		
○ 여성 외국인 농업근로자 지원									
- 외국인 여성 농업근로자 주거 지원	농식품부								●
-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창구 확대	농식품부, 지자체						●		
○ 유형별 멘토-멘티 결연제도 확대									
- 귀농 및 청년여성농업인 멘토링 사업 개선·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		
-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제도 개선	농식품부, 농협						●		

간담회 및 인터뷰 결과 요약

부표 1 인터뷰와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여성농업인의 필요와 정책방향

면담자	여성농업인의 필요(Needs)	정책방향	정책평가
한여농	-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이 중요 -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의식 개선 필요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창구 필요 - 농촌에 거주하는 초·중·고생을 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필요 - 겸업하는 경우 공동경영주 지위 유지 안 됨. 5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경우 영농도우미 지원 배제 - 무동력 소형 농기계보다는 대형 농기계를 주로 사용, 동력을 사용하는 농기계 사용교육 필요 - 여성농업인 단체 간 연합 부족	- 후계자 선정 시 전체 인원의 30%를 여성농업인으로 배정 - 여성농업인센터가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의 권익 대변, 고충상담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함. - 양성평등 교육 중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 실시해야 함 -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여성전담인력 추가 배치 - 여성농업인의 지자체 정책 결정 및 집행 참여 확대 - 소규모 기계 확충, 주산지를 고려한 농기계 배치 필요, 편의성을 높인 농기구 보급 확대	- 귀농·귀촌인은 농업후계인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인지도 낮음. - 가정 내 성평등은 과거에 비해 개선, 제도적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 행복바우처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며 문화향유가 확대되었음.
전여농	- 농촌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 부족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 부서와 인력 필요 - 승계농이 아닌 청년여성농업인의 주거공간 및 농지 확보에 어려움 존재 - 여성농업인단체간 소통 및 네트워크 필요 - 과도한 노동 경감을 위한 쉼터와 시간 필요 - 소규모 농가공업자가 학교급식, 단체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지원 정책 필요 - 안전하고 힘을 덜 들일 수 있는 농기계와 농기구 필요	- 여성농업인센터의 중앙사업화, 가정폭력 및 세금 등 다양한 상담창구로서의 역할 부여 -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는 농촌에서 실업적으로 활동하는 40대~60대 여성을 위한 내용 이 담겨야 함 - 선출직의 성평등 교육 이수 의무화 - 농촌형 성평등 교육과정과 강사 양성 - 행복바우처의 지역별 편차 해소 - 여성임원활용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협법 준수	-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의 문화와 환경은 변화가 없으며 지자체 안에서 여성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농협의 여성임원활용제는 유명무실, 여성농업인이 명예이사진으로만 구성, 조합원 가입을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관련 증빙이 어려움. - 현재의 성평등 교육은 농촌의 현실 미반영 - 여성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의 대표성에 의구심 존재 -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의 의도는 좋았으나 여성농업

면담자	여성농업인의 필요(Needs)	정책방향	정책평가
	▪ 특색별 심터 필요(예: 화장실) ▪ 청년여성농업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필요	▪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 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은 마을 내 식당에 위탁 ▪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성평등 모니터링 운영 ▪ 고령 여성농업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자원화 ▪ 청년월급제 등의 제도 지원	인의 추가 업무가 되는 결과를 높음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인지도 낮음 ▪ 대다수 고령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맞지 않음 ▪ 중앙-도-시군-면으로 이어지는 정책 집행체계 미비 ▪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과성을 낮춤 ▪ 공공영양주 제도가 여성농업인의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 영농도우미는 지원단가가 낮고 개별 농가의 특성에 맞추어서 농작업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음 ▪ 행복바우처의 도입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과중한 기사와 농업노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전여농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 여성의 지도력 향상, 여성의 사회적 활동 확대는 지도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남해 여성농민회)	▪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매우 중요 ▪ 피교육자인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필요 ▪ 가족농 형태의 농업종사방식이 고착화되어 여성농업인이 개별적으로 출하하거나 생산자로서 증명을 받을 수 없음. ▪ 농산물에 대한 평가도 출하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짐 ▪ 발작을 재배에 사용되는 기계 개발 필요 ▪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심각함. ▪ 경량 소형 농기계가 있어도 비용 때문에 사용이 어려움. ▪ 농기계 뿐만 아니라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 매우 필요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시간과 농작업 시간의 불일치로 인한 사용의 어려움,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의 불친절함. ▪ 여성농업인의 지도력 훈련 필요	▪ 여성농업인센터가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 부서와 현장의 가교역할 담당 ▪ 농기계 배달과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는 영농작업단 운영 ▪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 지역 내의 유흥인력을 활용하여 군이나 농협이 인력 중개 ▪ 행복바우처의 지역별 금액 차이 해소, 행정 간소화 ▪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진행 ▪ 농협의 여성임원 할당 확대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현장 인지도는 여전히 낮음. ▪ 정책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전반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소수에게만 시혜적인 정책이었음. ▪ 여성농업인 정책은 사회적 인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복지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1차 FGI	▪ 여성농업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많아져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 여성농업인이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 소규모 농가공업자의 부담 완화 ▪ 여성농업인의 생활을 고려한 복지혜택	▪ 시·군 단위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중앙과 시·군의 동일한 전달체계 마련 ▪ 전체 여성농업인을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함. ▪ 여성농업인의 주체성 확보 등, 근본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실현되어야 함. ▪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 관련 정책 사업에 참여할	

면담자	여성농업인의 필요(Needs)	정책방향	정책평가
	-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필요. 마을 차원에서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함. - 미래 세대인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 고령 여성농업인의 자원(정보) 공유 장치 - 여성농업인의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경우 세금 혜택이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경제적 장치가 필요함. - 농협 여성임원활동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귀농 청년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이 갖춰져야 하며 주거 및 일자리 문제 해결 - 고령 여성농업인과 지역사회 아이들과 연결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5차 계층에 담겨야 함. - 제5차 기본계획에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함.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사업 중 가장 도움이 된 사업은 행복바우처임. - 공동경영주 제도는 단독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에 불과함. - 농협의 여성임원활동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잘 실현되지 않음. - 농작업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없는 현실임.
2차 FGI	-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 구현 -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복지제도 - 농업기술이나 리더십, 농기계 교육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필요 - 여성농업인 센터 활성화 필요 30~40대 여성농업인의 보육 문제 해결 - 여성의 공동체 유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 마을 내 남성에 대한 성인지 교육 -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정책과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통로 개선	-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나 전담 인력, 전문관 제도 도입 필요 - 여성농업인 활동가를 육성하여 민관의 협력 체계 하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및 사업 실행 - 생애주기별, 연령별로 특화된 복지(예: 행복바우처)는 청년 여성농업인에게 우선)나 교육(예: 여성농기계) 필요 - 여성농업인이 용기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여성농업인 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부터 진행 - 지역 인력(예: 60대 여성농업인을 교육하여 보육도우미 지원)을 활용한 보육 정책 -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각종 마을 행사나 사업에 대한 인건비·재료비 현실화 - 농촌 교령화 등에 맞춘 성인지 교육 개발(예: 인형극, 만화 등) - 여성이 여성을 가르치는 농기계 교육 확대 - 공동경영주에 대한 혜택 강화 -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 기본계획이 여성농업인이 아닌 연구자에 의해 세워지는 경우가 많음. - 여성농업인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및 비전문화 - 보편적 복지제도로 비효율 - 많은 교육이 여성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나 가부장적 문화나 여성농업인의 주체로서의 인식이 낮아 여전히 낮은 참여율 - 여성농업인 센터가 지역별로 격차가 많음. - 보육시설 접근성과 근무시간 차이 때문에 청년 여성농업인의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마을 급속이나 행사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강의 위주의 성별등 교육으로 효과 미미 - 농기계 교육에 여성 참여 부족 -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정책을 잘 모르고 있음. 특히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면담자	여성농업인의 필요(Needs)	정책방향	정책평가
3차 FGI	▪ 집 앞과 일터의 치안 해결 필요 ▪ 여성농업인이 관심 많은 분야인 마케팅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필요함. 심화 단계의 교육이 확충되기를 바람. ▪ 성인지 교육이 지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필요함. ▪ 안전한 주거지원과 함께 일정 기간 영농 진입 전 예비단계로서 농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농기계 또는 편의장비에 대한 수요도 있으나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 높음. ▪ 기존 편의장비 보급 사업이나 농기계 지원에서 우선순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영농기술 습득, 경영, 농촌 정착과 생활 등 다방면에 걸쳐 여성농업인과의 네트워킹 형성 필요 ▪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심각 ▪ 농촌지역의 취약한 의료지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부족 ▪ 행복바우처 사용처 부족	▪ 공동경영주의 자격요건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책 홍보 ▪ 거주공간 및 일터의 CCTV 확충 ▪ 심화단계 교육 내용 확대 ▪ 성인지 교육 확충 ▪ 여성농업인 간의 멘토-멘티 결성 확대 ▪ 농작업 인력 지원 체계 구축 ▪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예방과 치료 지원 ▪ 진로를 위해 이동식 교통비 지원, 공중보건의 확충 ▪ 행복바우처 사용처 확대(올리브영, 미용실 등) ▪ 영농교육, 성인지 교육 등 마을 주민 대상 교육시청 ▪ 년여성이 교육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마을 내에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드론 등 여성농업인이 잘 다룰 수 있는 농기계 사용에 관한 교육 확대 ▪ 소규모 가공 등 창업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등 지원	▪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주로 실용화 교육으로서 활용도와 만족도 높으나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제공되는 필수교육은 실효성 매우 낮음 ▪ 멘토-멘티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주로 남성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있음. ▪ 공동경영주 제도가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 수혜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후계농업인 또는 청장년 선발 시 청년여성 할당 확대는 여성의 농업 진입 자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임. ▪ 귀농인의 집, 농기계 지원 등에서 기혼자, 고령자 등에 비해 비(미)혼 여성의 우선순위가 낮음. ▪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기계만 제공할 뿐 관련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실사용에 어려움 존재

부표 2 지자체 담당자 면담 결과 요약

지자체 담당자 필요	문제점	대응방안·의견
- 여성농업인 사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여성농업인 센터 활성화 - 행복바우처 대상 확대 - 발급처 확대 및 사용 편의성 증대 - 특화 건강검진 시행 -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 사업 확대 - 농기계 대여 사업 이용 편의 확대 -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단체, 여성농업인 단체 간 협력 증대 - 농기도우미·행복도우미 홍보 -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및 농업 주체로서 인식 필요 - 지자체 공무원이 참고할만한 정보 제공	- 여성농업인 업무가 주업무가 아니므로 업무가 과중한 경우가 많음. -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 광역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나 기초 지자체의 관심 부족과 운영 주체 부족 -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시 지부담 완화 필요 - 정해진 예산으로 일부 여성농업인에게만 행복바우처 혜택 - 행복바우처의 복지·여가 활동 이외 사용 증가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청 소재지 농협에서만 발급하는 등 여전히 발급이 어려움. - 검진을 위한 의료시설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일반 의원에서 시도하기 어려움. -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 공급이 만족도 높은 사업이나 예산 한정으로 수혜 인원이 적음. - 농기계 임대 시 가져오기 어려움. - 농가도우미나 행복도우미 제도 인식 부족 -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 - 남성과 비교하여 농정 관련 정책 요청 부족 - 여성농업인의 요청을 담아낼 통로 부족 - 기초지자체 여성농업인 담당 공무원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및 전담공무원 - 임기를 보장하는 전문관 제도 도입 - 민관 협력을 위한 여성농업인 활동가(코디네이터) 양성 -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 양성 및 발굴 - 자부담 완화 정책 - 농식품부 지원 필요 - 행복바우처 예산 확대 - 지역상품권 지급 등으로 편의성 확대 - 바우처 발급처 확대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우선 지원 - 대학병원·종합병원과 업무 협약 - 편의 장비 지원 예산 확대 - 농기계 배달 서비스 필요 - 지자체 담당자와 여성농업인 단체 협의회 상설화 - 정부·지자체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 홍보 전략 필요(예를 들어 이장이나 지자체 민원팀과 협력하여 홍보) -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확대 - 농업 분야 정책 심의회의 주민자치회, 이장에서 여성농업인 비율 확대 - 여성농업인 단체나 여성농업인 센터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참고문헌

- 강경하, 허미영, 이진영, 최윤지, 김경미, 황대용. (2008). “가족경영협약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확대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3), 353-363.
- 강혜정. (2007). “일본,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동향”. 『세계농업』, 1-8.
- 강혜정. (2008).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31(4), 69-81.
- 강혜정. (2009). “여성농업인 역할에 대한 기회비용 분석”. 『농촌경제』, 31(6), 63-77.
- 강혜정. (2010).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 과제”. 『젠더리뷰』, 52-58.
- 강혜정. (2011). “기혼 여성농업인의 농외노동시간 결정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8(2), 1-28.
- 강혜정. (2013).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10(1), 43-62.
- 강혜정, 김윤희, 박서윤. (2019).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 고미진. (2005).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6-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력현황 2020』.
- 김경미, 고운미. (2005). “여성농업인의 역할유형별 영농의사결정 참여 실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47-64.
- 김경미, 유소이, 최윤지, 조현숙, 이한기. (2003).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앞으로의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15-534.
- 김경미, 이진영, 최윤지. (2006). “여성농업인 리더의 사고행동 패턴과 직무지향 특성에 관한 일고찰”.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13(1), 209-225.
- 김경미, 이진영, 최윤지. (2007).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제해결 동기형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2), 47-77.
- 김경미, 최윤지, 이진영, 고운미. (2004). “여성농업인의 역할 유형별 정책적 지원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2), 359-369.
- 김경미, 최윤지, 이진영, 고운미. (2005).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 평가와 제언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2(1), 29-44.
- 김경미, 강경하, 김문형, 이진영, 윤준상, 박민선, 고운미, 최윤지, 조옥라, 김진화, 오해섭, 허미영, 정미영, 임찬영, 김상문. (2006).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농촌진흥청.
- 김경미, 최윤지, 조현숙. (2001).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시론적 접근”. 『아시아여성연구』, 40, 87-104.
- 김남훈, 김태후, 하인혜. (2020). 『농업인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정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 황의식, 김태후, 박진우. (2019). 『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 김선미. (2010). “여성 농업인의 영농교육과 농업생산성의 관계: 자원배분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90-291.
- 김수옥, 박은희. (2003).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현황과 육성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3), 67-85.
- 김영옥. (2001).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대책”. 『농촌사회』, 11(1), 175-204.
- 김영옥, 이병기. (2000). “농업인구 구조변화와 여성경영주의 영농특성”. 『농촌사회』, 10, 7-35.
- 김정섭, 안석, 이정해, 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진용. (2020).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현황과 시사점”. 『CEO FOCUS』 제420호. 농협미래경영연구소.
- 남재작. (2019). “농업의 또 다른 도전, 미세먼지 문제”. 『시선집중 GSNJ』 제269호
- 농림축산식품부. (2015).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 _____.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 농촌진흥청. (2019). 『2018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대한민국 정부. (2015).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 _____. (2016).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 _____. (2017).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 _____. (2018).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 _____. (2019).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 마경희. (2017). “새 정부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 『젠더리뷰』, 2017 여름호 45호, 4-9.
- 민경찬, 박지숙, 유은영, 이정해, 정도채, 정문수, 정유리, 정희라. (2017).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공주, 김경미, 이정화, 성운숙, 이길순. (2004).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경험과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2), 29-42.
- 박대식, 정명채, 최경환, 채혜윤. (2002).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은. (2008).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1-141.
- 박민선. (2003). “여성농업인 경영참여 측정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30, 25-44.
- 박민선. (1999).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9-127.
- 박재규. (2005a). “여성 농업인의 역할증대와 건강관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28(4), 33-49.
- 박재규. (2005b). “여성농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7, 33-56.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등록외국인 현황』 각 연도.
- 성주인. (2020). “농촌 재생, 미래 변화를 준비한다”,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양호. (2005).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권익향상”.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7.
- 신경아. (2016).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한국여성학』, 32(4)
- 심미옥, 김화남. (2001).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 효과 평가”. 『한국농촌지도학회지』, 8(1), 107-119.
- 안석, 엄진영, 박지연. (2019).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수영, 권용대. (2015).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결정요인 분석: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2(3), 277-283.
- 엄진영, 김선웅. (2019). “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별 영농활동 비중 결정요인 분석”. 『농촌경제』, 42(4), 1-21.
- 엄진영, 최용호, 박지연. (2019).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60.
- 여성가족부. 제2차양성평등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2019년 시행계획 분석.
- _____. 『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_____.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각 연도.
- 오미란, 박민선, 정은미, 서경민, 박진하, 서그림. (2015).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1-190.
- 유소이, 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농촌사회』, 13(2), 245-270.
- 유소이, 최윤지, 조현숙, 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대한가정학회지』, 41(7), 157-158.
- 유찬희, 김태후. (2020).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준상. (2007). “여성농업인의 농업기술축적을 통한 전문교육체계 계획”.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2), 247-263.
- 이기영, 조희금, 김외숙, 이연숙, 이승미, 김소영. (2007). “여성농업인의 가족 내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7.
- 이상호. (2019). “가족경영협약 실태분석과 체결의향 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27(4), 425-436.
- 이선영, 황미진. (2019).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개선회 60년 활동 가치에 관하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1-26.
- 이수미. (2020).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평가와 향후 과제”, 이슈보고서 제322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이정해. (2017). 『EU 농촌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성 주류화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진영, 김경미, 최윤지, 김정섭. (2005).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증명을 위한 생활일지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2(2), 137-150.
- 이호철, 박재홍. (200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리더십 개발전략”. 『한국협동조합연구』, 19, 93-114.

- 이호철, 박재홍. (2004).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발전전략”. 『농업경영·정책연구』, 31(2), 226-246.
- 이호철, 최수영, 박재홍.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사회』, 12(1), 37-62.
- 임선희, 이영세, 권정숙. (2001). “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실태와 평생학습과제”. 『평생교육학연구』, 7(2), 107-133.
- 임찬영, 최윤지, 김경미, 이진영. (2006).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기여도와 기여도에 대한 인적자본 요소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3), 153-161.
-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 성인지통계 2019』
- 정금주, 김경미, 고운미. (2004). “여성농업인을 위한 직업교육: 일감맞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67-81.
- 정은미. (2012).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9.
- 정은미. (2015).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9.
- 정은미, Fanfani, R., Bertolini, P. (2012).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9.
- 정은미, 마상진, 민자혜. (2012). 『여성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260.
- 정은미, 민자혜. (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839-870.
- 정은미, 민자혜. (2012). 『여성농업인 경제사회적 역할의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1-122.
- 정은미, 박석두, 김용렬, 김우태, 최세균. (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256.
- 정학균, 임영아, 성재훈, 이현정. (2019).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업부문의 대응과 기회”. 『농업전망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경옥. (2016).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적 함의”.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1-16.
- 조현숙, 김경미, 최규련. (1999).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0(2), 37-51.
- 최수영, 박재홍, 이호철. (2001). “여성농민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3(4), 67-81.
- 최유진, 김영옥, 김이선, 문희영. (2013). 『여성농업인 사회자본 확충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67.
- 최윤지, 김경미, 임찬영, 강경하, 유소이. (2004). “Shadow wage 추정법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평가”. 『Proceedings of KHEA Conference』, 117.
- 최윤지, 유소이, 김경미, 조현숙. (2003). “여성농업인 대상 농가도우미 제도와 여성농업인센터에 관한 평가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45-265.
- 최화영, 정철영. (2013). “여성 농업인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문헌 고찰”.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6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 발간자료, 1-494.

허미영, 박민선. (2004).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와 그 결정요인”. 『농촌사회』, 14(1), 205-237.

홍은파. (2010). “여성농업인 영농교육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49-79.

황미진, 윤순덕, 최정신. (2017).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4(3), 155-172.

農林水産省. 2020.8.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農林水産省. 2020.6. 『食料・農業・農村白書』.

農林水産省. 2019.8. “2019年度女性活躍推進にかかるアンケート調査”.

〈웹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rd/hosp/getHospList.do?pgmid=HIRAA030002020000#tab01>.

“농업여자프로젝트”. (<https://nougyoujoshi.maff.go.jp>).

“농업커뮤니티리더숙(塾)”. (<http://www.jma.or.jp/kagayaku-nj/news/ikuseijuku/info.html>).

“독일 농촌 여성 협회 홈페이지”. (<https://www.landfrauen.info>).

“빛나는 農女新聞”. (<http://www.jma.or.jp/kagayaku-nj/index.html>).

“(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 본부 홈페이지”.

(<http://ifarmlove.nonghyup.com/user/indexMain.do?siteId=ifarmlove>).

“프랑스 농업부 홈페이지”. (<https://agriculture.gouv.fr>).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Sozialgenossenschaft Mit Bäuerinnen lernen-wachsen-leben 홈페이지”.

(<https://www.kinderbetreuung.it> 검색일: 2020.08.16.).